

#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양애경 · 김혜영 · 허태욱 · 이선민 · 남궁윤영  
김신희 · 임현지 · 정윤미 · 전민주 · 이정미



## 2014

사업보고서 - 1

---

##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

사업책임자 : 양 애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업담당자 : 허 태 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선 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신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임 현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정 윤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전 민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이 정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양애경·김혜영·허태욱·이선민·남궁윤영·김신희·임현지·정윤미·전민주·이정미(2014).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 목 차

I.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개요 .....	1
1. 2014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3
2. 2014년 사업 내용 및 방법 .....	7
가.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	7
나. 생활체감 여성정책의제 발굴 사업 .....	9
다. 여성가족부 및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	10
라.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12
마.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	13
3. 2014년 사업결과 총람 .....	13
II. 주요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	17
1.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	19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19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19
다. 성과 및 제언 .....	28
2.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	29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29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30
다.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	47
III. 생활체감 여성정책 의제발굴 사업 .....	49
1.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	51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51
나. 사업내용 및 결과 .....	51

다. 성과 및 제언 .....	69
2. 여성정책 현안조사 .....	72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72
나. 사업내용 및 결과 .....	72
다. 성과와 제언 .....	93
3.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	94
가. 사업목적 및 방법 .....	94
나. 주요 사업내용 .....	95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98
<b>IV. 여성가족부 및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b>	<b>101</b>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운영 .....	103
가. 사업목적 .....	103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103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10
2.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	112
가. 사업목적 .....	112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112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14
3. 여성현안포럼 .....	116
가. 사업목적 .....	116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116
다. 성과 및 제언 .....	119
4.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120
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120
나. 주요 사업결과 .....	123
다. 성과 및 과제 .....	173

<b>V.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b> .....	175
1.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개요 .....	177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177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177
2. 여성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	179
3. 유관기관 / 여성NGO 협력 .....	182
4. 여성전문인 협력 .....	185
5. 성과 및 시사점 .....	188
<b>VI.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b> .....	191
1. KWDI BRIEF .....	193
가. 사업배경 및 방법 .....	193
나. 사업내용 및 결과 .....	193
다. 성과와 과제 .....	194
<b>VII. 총평 및 제언</b> .....	195
1. 2014년 사업 총평 .....	197
2. 2015년 사업 운영을 위한 제언 .....	205
<b>■ 참고문헌</b> .....	207

## 표 목 차

<표	-1-1>	정부의 여성관련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성별	..... 5
<표	-1-2>	정부의 여성관련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연령별	.. 6
<표	-3-1>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 사업결과 총람	..... 14
<표	-1-1>	북한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	..... 27
<표	-2-1>	사업형태별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30
<표	-2-2>	현장 컨설팅 내용 및 진단 결과	..... 32
<표	-2-3>	공동체경제활성화 컨설팅 내용 및 진단 결과	..... 32
<표	-2-4>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 35
<표	-2-5>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환경분석 및 세부전략	..... 36
<표	-2-6>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마케팅 계획	..... 37
<표	-2-7>	꽃예술인성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 38
<표	-2-8>	꽃예술인성교육사 교육 프로그램	..... 39
<표	-2-9>	중간지원기관 형태별 컨설팅 내용 및 모니터 개요	..... 40
<표	-2-10>	도시형 여성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정책욕구	..... 42
<표	-2-11>	도시 및 농촌 제조업종 여성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정책욕구	..... 43
<표	-2-12>	심사지표별 관련 고려사항 및 컨설팅 가이드(1):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45
<표	-1-1>	생활체감정책단 5기 주제별 주요제안 의견	..... 69
<표	-2-1>	주요 설문 내용	..... 73
<표	-2-2>	연령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세부정책 인지도 정도	..... 76
<표	-2-3>	연령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중요도 정도	..... 78
<표	-2-4>	주요 설문 내용	..... 81
<표	-2-5>	주요 설문 내용	..... 88
<표	-1-1>	2014년도 50개 여성친화도시	..... 104
<표	-1-2>	2014년도 컨설팅 방향	..... 105

<표	-1-3>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매칭 .....	105
<표	-1-4>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매칭 .....	106
<표	-1-5>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개최 결과 .....	108
<표	-1-6>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 .....	109
<표	-2-1> 9차-10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결과 .....	113
<표	-3-1> 3차-4차 여성현안 포럼 개최 개요 및 주요내용 .....	117
<표	-3-2> 제3차 여성현안 포럼 프로그램 .....	118
<표	-3-3> 제4차 여성현안 포럼 프로그램 .....	119
<표	-4-1>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책임기관 현황 .....	121
<표	-4-2>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정책영역별 주요 과제 .....	122
<표	-4-3> 서울지역 2차 모니터링 정책개선안 .....	167
<표	-4-4> 서울지역 3차 모니터링 정책개선안 .....	170
<표	-1-1> 주요사업별 사업실시 일자 및 참석인원표 .....	177
<표	-2-1> 제11차 한중지도자 포럼 일정 및 논의사항 .....	179
<표	-2-2> 2014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일정표 .....	181
<표	-3-1> 위탁과제 사업 개요 .....	183
<표	-4-1> 제2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주요참석자 .....	185
<표	-4-2> 제4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주요참석자 .....	186
<표	-4-3> 제5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주요참석자 .....	187
<표	-1-1>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과 국정과제 연관성 .....	199
<표	-1-2>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	200
<표	-1-3>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결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 .....	203



## 그림 목 차

[그림 -2-1]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 과정 .....	31
[그림 -2-2]	여성을 위한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프로세스 .....	34
[그림 -2-3]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예상 손익 및 자금 시나리오 .....	37
[그림 -1-1]	생활체감정책단 카페회원 성별-연령별 분포 .....	52
[그림 -1-2]	생활체감정책단 5기 성별-연령별 분포 .....	53
[그림 -1-3]	생활체감정책단 주요 공식채널 .....	54
[그림 -1-4]	공식 홈페이지 구성 .....	55
[그림 -1-5]	공식 커뮤니티(카페) 구성 .....	57
[그림 -1-6]	공식 블로그 구성 .....	58
[그림 -1-7]	공식 오픈캐스트 구성 .....	59
[그림 -1-8]	발행 완료된 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	60
[그림 -1-9]	2015년 온라인 토론 8대 주제 .....	61
[그림 -1-10]	인포그래픽 제작(1/2/3차) .....	65
[그림 -1-11]	오픈캐스트 구독이벤트 .....	67
[그림 -1-12]	주제생활체감정책단 뉴스레터 발행물(8차) .....	68
[그림 -2-1]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세부정책 인지도 정도 (성별) .....	75
[그림 -2-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평가 정도 (성별) .....	77
[그림 -2-3]	종합대책에 대한 성별 인지도 .....	82
[그림 -2-4]	종합대책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	83
[그림 -2-5]	종합대책에 대한 결혼상태별 인지도 .....	83
[그림 -2-6]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	84
[그림 -2-7]	성별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차이 .....	85
[그림 -2-8]	혼인 상태별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차이 .....	85
[그림 -2-9]	국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86
[그림 -2-10]	현장 모니터링 점검의 필요성 .....	86

[그림 -2-11]	국민안전 정책 관련 인지도 .....	90
[그림 -2-12]	국민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91
[그림 -2-13]	국민안전 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	92
[그림 -1-1]	2014년 전국 컨설팅단 운영 체계 .....	107
[그림 -1-2]	여성친화도시 운영 거버넌스 체계 .....	107

# I

##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개요

1. 2014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3
2. 2014년 사업 내용 및 방법	7
3. 2014년 사업결과 총람	13

## 1. 2014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국정현안 추진에 있어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성의제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소통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계 각층과의 협력 및 여성정책 유관부처로부터의 현안지원 요청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여성정책의 특성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여성정책의 실현은 필수적임.
  - 중앙 및 지방의 여성정책 유관부서를 비롯하여 NGO, 전문가, 언론, 중앙 및 지방의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연대로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성별영향평거나 성인지예산 제도 등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을 비롯해 여성정책 제 분야에서 누적되어온 한국여성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성도 커짐.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기치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1대 전략과 133개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정현안에 대한 여성 정책적 실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중 여성·가족관련 국정과제 중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6개 과제가 있으며 타 부처 소관 여성 관련 과제가 9개 과제임. 이와 관련하여 유관부처로부터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산(국정과제-68의 추진계획에 포함)을 위해 매년 기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컨설팅 운영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2009년 익산시를 제1호로 지정한 이래 2014년 3월 현재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역 여성정책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4 ●●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곧 여성, 아동, 노인을 포함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매우 높음. 2009년 2개→2010년 10개→2011년 30개→2012년 39개, 2013년 말에 50개로 확대됨.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이후 각 지역별로 시민참여단, 컨설턴트, 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특수적인 상황 등이 고려된 성공적인 사업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짐.
  - 특히 여성친화도시는 새정부가 약속한 “더불어 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의 여성 정책적 이행방안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 있음.
- 또한 여성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과의 접점이 적절하게 점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행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이밖에도 5대 국정목표 중, 여성 관련 국정과제나 추진계획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의 경우, 그동안 통일대비 및 통일을 전후한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여성역할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차후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과 같은 여성 의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한편 실제 국민의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여성정책의 수립·집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여성·가족관련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결과, 가장 시급한 정책은 남녀 및 연령별 구분 없이 공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목함. 다음은 대체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과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성별이나 연령별 구분에 따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임.

- 남성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여성은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에 상대적으로 관심 높음. 특히 후자의 경우, 양성간 격차 폭이 다른 정책에 비해 압도적으로 큼. 이는 여성정책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수용성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표 I-1-1〉 정부의 여성관련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성별

(단위: 명, %)

	사례수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안심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 서비스 강화	건강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임신과 출산	여성 경제 활동 확대 및 양성 평등 확산	무상 보육 무상 교육 확대 (0~5세)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고부가 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 강화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전 체	(1203)	48.3	39.1	35.1	29.2	27.8	24.7	20.9	20.3	19.9	18.1	8.5	8.3
성별													
남성	(605)	45.1	35.7	37.5	28.3	30.6	27.6	10.4	23.8	20.2	19.7	11.6	9.6
여성	(598)	51.5	42.5	32.6	30.1	24.9	21.7	31.4	16.7	19.6	16.6	5.4	7.0

자료: 여성친화정책전략단(2013.3), “여성대통령시대의 여성정책과제”, 2013년 여성현안조사(1차)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20대와 30대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40대 이상은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임.

6 ●●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표 I-1-2〉 정부의 여성관련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연령별

(단위: 명, %)

		사례수	성폭력 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안심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 서비스 강화	건강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임신 과 출산	여성 경제 활동 확대 및 양성 평등 확산	무상 보육 무상 교육 확대 (0~ 5세)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고부가 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 강화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전 체		(1203)	48.3	39.1	35.1	29.2	27.8	24.7	20.9	20.3	19.9	18.1	8.5	8.3
연령	20대	(218)	56.0	38.5	34.9	27.5	18.8	32.6	19.7	20.2	19.7	14.2	7.8	10.1
	30대	(294)	47.3	41.5	32.3	23.1	26.2	34.0	18.0	30.3	13.9	17.7	7.5	8.2
	40대	(339)	51.0	40.7	35.7	31.9	28.6	16.2	23.6	16.8	22.7	18.0	8.8	5.9
	50대	(264)	40.2	35.6	37.5	32.6	32.6	22.3	20.5	15.9	23.1	20.1	10.2	9.5
	60~65세 이하	(88)	46.6	36.4	35.2	33.0	37.5	13.6	23.9	13.6	19.3	23.9	6.8	10.2

자료: 여성친화정책전략단(2013.3), “여성대통령시대의 여성정책과제”, 2013년 여성현안조사(1차)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이상을 배경으로 아래 다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을 추진함.

- 첫째,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통합적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여성 정책적 이행방안을 모색함.
- 둘째, 여성분야 국정과제의 실천에 필요한 유관부처로부터의 지원 요청에 우선적으로 부응함.
- 셋째, 여성정책의 대중화 및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생활공감형 정책의제 발굴로 여성을 비롯한 국민체감도를 높임.
- 넷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성정책을 소개하고 여성정책 연구사업의 성과를 홍보·확산함.
- 다섯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성통합 및 참여를 위해 여성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함.

## 2. 2014년 사업 내용 및 방법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은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국민체감형 여성정책의제 발굴과 확산 사업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등 5개 사업군에 걸쳐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짐. 각 사업군별 세부사업의 내용 및 사업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 통일에 대한 준비는 분야구분 없이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 외교, 군사 분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적었음.
- 이에 본원은 여성관련 이슈를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제와 대안의 개발을 통해 통일한국 여성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통일과 여성포럼을 구성하여 진행해 옴.
- 2014년 통일과 여성포럼에서는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제의 가능성을 모색함.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 본 사업은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현정부의 국정과제 61-‘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사회발전과정에서의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실천가이드를 시범 개발·제안하는 것에 있음
  - 이는 지역에 기반한 여성의 협동적 경제능력 향상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연구사업은 마을기업 중심의 여성친화형 협동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델 및 시범가이드 개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사업내용으



로 구성됨

- 첫째, 각 지역별로 중간지원기관 및 지역공동체 등을 통해 여성 협동적 경제 모델 개발을 추진함. 둘째, 중간지원기관 등의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실제 여성(공동체)들이 어떤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탐색함. 셋째, 각 권역별 중간지원기관들의 관련 컨설팅 역량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지역별 여성주도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함
-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별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위탁 운영 진행
  - 서울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지원
  - 충남지역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지원
  - 중간지원기관 컨설팅을 통해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등의 컨설팅 모니터 진행
  - 서울·충남지역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및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개발을 위한 각 중간지원기관들의 컨설팅 과정을 KWDI에서 직접 및 지역 여성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여성 친화형 마을기업 개발을 위한 주요 유의점 및 시범가이드 생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여성친화형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활용 목적의 시범가이드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별 기성 여성마을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진행
  - 전국 7개 지역 총 10개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주로 여성으로서 마을기업 선정 전후에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간과되어 온 마을기업 등 협동적경제 사업 수행에 있어 젠더 시각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친화형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 등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시범적으로 개발함

## 나. 생활체감 여성정책의제 발굴 사업

###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제5기) 운영

-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사업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정책의 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와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정책 의제화하고 여성가족부 및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의 의제발굴을 기본 목적으로 함.
- 2010년부터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활체감정책단원을 구성하여 온라인 조사와 주제를 통한 소통을 진행하여 옴.
-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은 운영 5기를 맞이함.
  - 보다 확대된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다각화된 체감형 정책의제 방안을 모색함.
  - 생활체감정책단과 16개 지역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여성정책 현안조사 패널을 통합해 보다 전략적 차원의 생활체감정책단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킴.
  - 제시된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 전달을 통해 의제화 하는데 주력함.

### 여성정책 현안조사

- 여성, 가족, 청소년정책 등의 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의적절하게 이를 정책 의제화하고, 여성가족부 및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의 의제발굴을 기본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 국내외 주요 여성정책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원은 다음의 세부사업을 실시함.

- 국내·외 최신 여성정책 모니터링 및 자료 제공
- 국내여성정책동향(일간·주간) 및 국제여성동향(격주간) 작성
- 매주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 소개
- 주요 언론 보도 및 정부 부처 보도자료, 유관 기관 및 연구소 보고서 상시 모니터링
- 원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KWDI 홈페이지내 ‘연구동향-여성정책동향-국내동향’ 및 ‘연구동향-여성정책동향-국제동향’에 동향 및 기사리스트 탑재

## 다. 여성가족부 및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지원

- 전국 단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효율화를 통한 성과 도출 및 단계별(조성-정착-확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운영함.
  - 컨설팅 내용은 주로 제도적 기반조성과 사업발굴과 관련된 것임.
- 또한 본원과 여성가족부-컨설턴트-지자체/담당과 간의 상호협력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함.
  -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 : 총 3회
  - 지역특성화 사업 육성 지원

### 여성친화도시 포럼

-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황 및 성과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운영함. 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사례 발표 및 사업 모델 확산을 도모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사업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함.
  - 전국의 여성친화도시 가운데, 권역을 고려하여 연 2회 분산 개최함.
  - 본원은 주최자로, 지역의 여성정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주관

하도록 함.

- 주제는 지역의 여성친화 중점사업 개발 및 성공사례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여성현안 포럼

- 국정과제에의 여성의제 통합, 여성정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여성계의 주요 현안 등 필요에 따라 적시에 유효적절한 의견을 모으고 동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정부 합동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 후속조치로, 동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대상자군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해 전략단에서는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총괄운영 및 ‘서울 지역 모니터링’과 ‘2014년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함.
  - 모니터링은 15개 시도(1개 지역 제외) 지역의 유관기관과 공동추진 됨.
  - 서울 지역 모니터링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환경을 파악하고 각 모니터링 주제에 따른 결과를 분석함.
    - 이를 통해 지역적합성 높은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환류방안을 제시함.
  - 2014년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 지원정책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약한 고리를 찾아 보완하고 추진하고자 함.

## 라.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여성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 2013년 이후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지원 및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을 발족함으로써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및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도모함.
  - 포럼을 통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및 한국과 베트남 간 여성정책 관계자들이 서로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
-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우의증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여 양국 간의 여성정책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사업을 지원함.
- 제2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개최하며 여성 창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해당분야별 양국 여성 관계자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발전방안 등을 탐색함.

유관기관/여성 NGO 협력

- 지역 여성연구원장 간담회
  - 전국의 여성정책연구원(여성개발원, 발전센터 內 여성정책센터)은 국정 현안예의 여성통합을 가능케 하는 생활체감 여성정책의 거점센터임.
  - 이에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을 조율하고, 지역적 맥락에 맞는 여성정책을 생산 및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여성정책연구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 사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류를 실시함.
  - 향후 간담회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각 지역 연구기관 간 연계방안을 점검, 실질적인 네트워크 강화 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함.
- 여성 NGO 협력
  - 국정 현안예의 여성통합 및 주요 여성정책 현안에 관련된 여성 NGO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함.

여성전문인 협력 : 한국여성경제포럼(연 4회 개최)

- 여성기업, 단체 및 전문가들의 경영 노하우와 이슈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포럼 개최함.
- 본 포럼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여성기업과 여성경영인의 창조적 자기 역량 강화 및 국가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KWDI BRIEF 발간

- 여성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및 정부 부처 현안 관련 지원을 통한 KWDI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분기별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함.

### 3. 2014년 사업결과 총람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결과를 총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5개 사업군 총 13종에 걸쳐 진행된 각 세부사업의 결과를 모두 31종의 보고서에 담아 정리하였음.

〈표 I -3-1〉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 사업결과 총람

사업군	세부사업	사업결과보고서
총괄		총괄 사업보고서
1.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통일분야 여성외제 개발	1-1. 통일분야 여성외제 개발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1-2.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2. 국민체감형 여성정책의제 발굴과 확산 사업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1-3.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여성정책 현안조사	1-4. 여성정책 현안 조사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1-5.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3.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지원	1-6.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및 현안포럼
	여성친화도시 포럼	
	여성현안 포럼	1-7. 여성의 경력 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총괄, 서울지역)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총괄, 서울지역)	
4.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여성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1-8.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유관기관/여성 NGO 협력	
	여성전문인 협력 : 한국여성경제포럼	
5.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KWDI BRIEF	1-9. 연구사업 성과 확산
*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유관기관/여성 NGO 협력(8종)	1-10-1. 성폭력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1-10-2. 독일 일가족 양립정책과 한부모 가족: 국가와 기업의 정책 1-10-3. 주민자치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1-10-4.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 여성친화도시에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마을 기업 만들기 1-10-5.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 여성친화적 조직 환경 조성 및 운영 방식을 위한 시범 가이드 개발 1-10-6.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1-10-7. 꽃·나무 인성교육사 협동조합 설립계획(모델개발)

사업군	세부사업	사업결과보고서
		1-10-8. 꽃·나무 인성교육사 협동조합 컨설팅
*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지역) (14종)	1-10-9-1.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2.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3.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4.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5.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6. 울산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7. 경기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8. 강원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9. 충청남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10. 전라북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11. 전라남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12. 경상북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13. 경상남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10-9-14. 제주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Ⅱ

### 주요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 |                         |    |
|-------------------------|----|
| 1.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 19 |
| 2.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 29 |

## 1.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남북의 평화통일은 민족 숙원의 과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현 정부 역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등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통일에 대한 준비는 분야구분 없이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 외교, 군사 분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적었음.

이에 본원은 여성관련 이슈를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여성 정책에 대한 의제와 대안의 개발을 통해 통일한국 여성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통일과 여성포럼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음.

통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북한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가족, 복지 등에 대한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2013년에는 통일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거시적 시각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 북한의 여성과 가족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정책의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음.

2014년 통일과 여성포럼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통일과 여성 포럼

○ 개요

- 개최 시기: 2014년 ‘통일과 여성 포럼’은 분기별 1회(연간 4회) 운영

(제13-16차 통일과 여성 포럼)

- 포럼 형식: 선정된 주제의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초청, 주제발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주요 내용

**<통일에 대비한 북한 여성 인력 양성>**

- 개요 (제13차 통일과 여성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4. 3. 25 (화) 14:00 ~ 16:30
  - 주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여성 인력 양성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지하2층)
  - 참석자 : ‘통일과 여성’에 관심 있는 분 약 80명 (국회, 관련부처, 전문가, 경제계, 언론, 여성단체, NGO 등)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포럼 공동주최
  - 후원 : 여성가족부, 통일부, 한국경제신문사
  - 목적 및 배경 : 제13차 포럼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개성공단 내 여성인력의 실태를 알아보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대비한 여성인력의 활용 및 개발 방안(개성여성과학기술디자인대학 설립의 가능성 모색)을 모색함.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북한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알아보는 논의 장을 마련
- 주요내용
  - 통일 한국의 여성과 가족: 통일을 어떻게 여성의 힘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 또 여성의 아젠다로서 여성의 empowerment를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
  - 개성공단 여성인력 실태와 활용방안
  - 개성여성과학기술디자인대학 설립의 가능성 모색 등

**<드레스덴 선언 이후 여성계의 실천적 과제>**

- 개요 (제14차 통일과 여성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4. 4. 17 (목) 11:30 ~ 14:00
  - 주제 : 드레스덴 선언 이후 여성계의 실천적 과제

- 장소 : 달개비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요내용
  -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남북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에 대한 논의
  - 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여성계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

- 개요 (제15차 통일과 여성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4. 8. 28 (목) 15:00~17:00
  - 주제 :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 -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제언: 북한가족의 남한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제안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자 : ‘통일과 여성’에 관심 있는 분 약 70명 (국회, 관련부처, 전문가, 언론, 여성단체, NGO 등)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성공단포럼
  - 후원 : 여성가족부, 여성신문사
  - 목적 및 배경 : 제15차 포럼에서는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대북 3대 제안을 구체화 시켜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칭 ‘한반도 통일가족 신탁청’ 창설과 기금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주요내용
  - 남북가족의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가칭)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제안 및 확대 필요성 논의

- 일명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제안 및 논의
- 재산권 문제와 북한 가족 상속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심층적 연구 필요
- 여성의 눈으로 이 사회와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등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 및 여성을 위한 교육>

- 개요 (제16차 통일과 여성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4. 11. 4(화) 16:00~17:30
  - 주제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 및 여성을 위한 교육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자 : ‘통일과 여성’에 관심 있는 분 약 40명 (전문가, 여성단체, NGO등)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목적 및 배경 : 국내외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과 공감의 확산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치·경제분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온 통일 관련 정책을 여성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과 여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 제안 및 논의
  -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논의
  - 여성통일 교육의 문제와 이슈 논의 등

여성을 위한 통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 ○ 통일교육 필요성

-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그리고 체제 중심적이었고 특징은 정치 체제 유지와 국가안보가 중요한 핵심임. 평화적 일상생활의 통합과 양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중심적 접근과 여

성·젠더(gender, 성별) 관점에서도 통일교육이 실행되어야 함.

○ 통일교육의 접근방법

- 제도적 체제중심 접근방법과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은 성차별 문제 또는 남녀관계에서의 위계질서와 권력 문제 등을 반영하지 않음. 이러한 점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방법은 여성·성별 관점으로 여성이 남성처럼 모든 활동영역에서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 수 있게 해야 여성을 위한 학력, 연령, 직능 등의 다양성에 맞춰서 적절한 통일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한국 통일교육

- 대북정책은 처음에는 적대, 대결,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고, 통일교육에는 반공교육, 안보교육 등의 체제교육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는 대북정책은 동반자 지향관계로 전환되었고, 이 점이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남한의 통일교육은 변화를 보게 됨. 이러한 변화가 있어도 안보 같은 주제는 계속 수반되고 체제 제도적 관점은 변화가 없음.
- 향후 바람직한 통일교육은 사회문화 중심적 그리고 여성·젠더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은 평화교육임.

○ 통일여성교육 내용

- 북한 사회주의여성의 정책, 경제활동, 노동계급화, 노동동원, 장마당활동
  - 사회적 정책적 변화과정에서 북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및 성별관계는 국가에 의해 규정되지만, 장마당활동을 통해서 변화됨.
  - 국가는 양성평등법과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여성은 남성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권리, 책임, 노동권 등의 보장을 받는다고 공포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여성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성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통제, 가부장주의적인 지배를 찾아볼 수 없음. 성별관계는 합법·제도적으로 평등하게 규정되고, 여성은 인격적 독립적인 개체로 구현된 점을 볼 수 있음.
  - 북한의 현실에 비춰볼 때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그 예를 가부장주의에 의거하는 여성·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볼 수

있음. 국가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과 부인 김정숙을 표본으로 하는 여성·모성 이데올로기 사상교육을 하고 있음.

- 북한은 중앙지배적 노동정책을 성별분리와 수직적 위계질서를 토대로 실시하고 여성정치참여를 촉구했음.
- 국가제도에서 규정한 여성상과 성별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여성상과 성별관계가 장마당활동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구현되고 있음. 장마당 활동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성별관계에 변화가 오고, 가족은 북한에서 사회의 세포로 인식되고, 그 결과 여성의 장마당활동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추측을 함.
- 북한 사회주의여성의 정책, 경제활동, 노동동원 그리고 노동계급화
  - 북한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정책에서 강조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점은 여성을 생산과 건설의 주체로서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묵숨 바치는 충성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혁신적 노동자가 되는 것이었음.
  - 북한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구하면서, 이를 여성해방의 토대임을 강조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사회평등의 기초로 인식시켰으나 여성의 노동계급화는 어려운 일이었음.
  -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위하여 노동규율화, 생산기술 전습사업, 노동사상교육 등을 추진함.
  - 그러나 성별을 토대로 하는 수직적 노동구조화를 볼 수 있고 산업체계가 성차별에 의거하여 수직적 위계구조가 구축되었음. 이렇게 산업분야에서 성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는 비숙련화와 임금에서 드러나고 불평등한 성별관계는 구조화되었음. 비숙련화와 이로 인한 낮은 임금은 여성의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짐.
  - 이러한 여성의 저임금 분야 배치는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남녀평등,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원칙과 현실적 괴리가 있음.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남녀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점은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먼 거리에 있음.

- 여성이 식량난으로 노동현장을 떠나 장마당 활동을 하면서 성별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남.
- 북한여성의 장마당활동: 새로운 성별관계 형성
  - 식량난의 영향으로 여성장마당이 급속히 발달
  - 장마당은 국가 배급제도가 붕괴되자 주민의 자력구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양한 시장억제정책이 실시되었고 통제와 단속도 심하고 여성의 장마당활동도 통제되고 있으나 시장활동은 계속 활성화되었고 그 점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서 볼 수 있음.
  - 장마당활동은 여성에게는 식량난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시장활동은 갈수록 가정수입의 원천이 됨. 이러한 장마당활동을 통해서 남녀의 역할과 위치는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 점은 여성·모성 이데올로기에서 홍보한 여성상과 가부장주의의 윤리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표시임.
- 북한 여성·모성이데올로기
  - 북한에서 여성·모성이데올로기는 김일성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와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표본으로 하고 있고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여성정신교육에 핵심적인 토대가 됨. 여성의 자녀교양교육과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북한사회주의 혁명적 사업을 위해 강조됨.
  - 여성·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일차적인 의무인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자녀양육에 책임을 지고, 모성에 관한 김일성 지시를 잘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데 토대가 됨. 다시 말해,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치관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반임.
  - 북한의 여성·모성이데올로기는 출산,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여성의 기본 의무로 보고 있고, 자녀양육과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성차별은 전통적인 위계적인 구조에서 시행되는 여성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며 봉건적 여성상을 구조화하는 데 한몫을 함.
  - 여성·모성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강화된 이데올로기는 결국 국가·가족의 남성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하였음.



- 북한 사회주의의 여성정책과 정치참여 및 사회활동
  - 북한은 양성평등법과 노동법령 등 여성에게도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여할 기회와 법적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보험혜택을 받는다고 천명함.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을 사회정치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고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국가의 여성정책에 활용함.
  - 북한 사회주의 정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여성을 다수 할당하고 여성의 최고인민회의 진출을 높여가고 있으나 정치적 수뇌기관의 참여는 국가의 배려없이 어려움.
  -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운동은 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국가관여의 계급적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에서 진행되었음.
  - 남북한은 해방이 되고 70년의 세월 속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함. 이 점 역시 여성에게도 다를 바 없음. 남북한 여성들은 위에서 제시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사회화의 과정에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과 정신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은 성차별임. 성차별은 극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은 통일여성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함.
-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탈북여성은 익숙한 체제·사회와 전혀 다른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격심한 차이를 느끼기 때문임.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정착문제를 통해 남북한 두 사회의 이질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 남한사회 정착기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음.
  - 남북한사회가 요구하는 근로능력이 상이하고, 탈북여성이 가진 인적자본이 낮아 안정적 취업을 어렵게 함.
  - 탈북여성은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함.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강박관념과 재결합 욕구, 두고 온 가족들의 경제적 기대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함.

-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탈북여성은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공존하고 배려해야할 통합의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배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
  - 탈북여성이 진로탐색과 구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은 출신의 탈북여성뿐만 아니라 남한여성의 도움이 필요하여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탈북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여성기업인을 대상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통일여성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 개인 심리 및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여성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기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탈북 여성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제

〈표 II-1-1〉 북한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

구 분	프로그램 예시
의료지원	- 지역사회 병원 및 여성의료진과 진료 협약하여 탈북여성 무상진료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로 탈북여성의 심리적 안정지원 - 탈북·남한 여성 대상 건강 및 여성보건에 대한 교육
취업지원	- 지역사회 취업 및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탈북·남한 여성 멘토링 결연 - 근속을 위한 사내 탈북·남한 여성 멘토링 결연 - 조직문화 개선과 탈북·남한 여성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한사회 문화차이 이해증진 교육
지역사회 이해	- 재래시장 탐방, 시장경제 투어로 탈북여성의 생활안정 지원 - 리플릿, 책자 제작으로 지역정보 알림 - 관내 주요 공공시설 견학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르신 지원	- 어르신 대상 역사 강의, 노래 교실, 사랑방 운영 - 영유아모 대상 부모교육 - 자녀교육정보 공유를 위한 어머니 모임
문화체험 (애향심)	- 지역 시티투어 - 설, 추석과 같은 명절 행사 - 주말농장 가꾸기
남북주민간 교류	- 남북여성 자원봉사단 - 남북여성 취미동아리

자료: 김혜순(2014)a, 「독일 일-가족 양립정책과 한부모 가족:국가와 기업의 정책을 위주로」

## 다. 성과 및 제언

통일 관련 여성의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통일 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제와 대안의 개발을 통해 통일한국 여성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고자 통일과 여성포럼을 진행하여 소통의 장 마련
-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여성·가족 부분의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었다면 올해는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포럼,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등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을 구축함.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가족, 복지 등에 대한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이해를 도모함.

폭넓고 유연한 통일 의제 개발

- 통일 의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경제, 외교, 군사 분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적었음.
- 이미 통일을 이룬 국가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여성 및 가족의 이해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도함. 이를 바탕으로 개성여성과학기술디자인대학 설립, 북한가족의 남한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 제안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제의 가능성을 모색함.

북한연구 및 통일 여성 연구 확대 필요

- 북한 가족법·제도, 사회변동 및 계급구조, 당 조직체·권력구조·대외협력 정책, 계획경제 추진 성과, 노동 동원 정책, 사회주의 문화 등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별 북한연구의 심화 및 확대 필요
- 국내외적 사회변화에 맞는 통일여성연구 및 실질적인 여성정책의제 개발 필요

## 2.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에 유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마을기업 설립 현실화 가능성이 높음.
  - 지역에 기반한 여성의 협동적 경제능력 향상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관련하여 본원에서는 2014년도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여성친화도시 대상)을 수행한 바 있음.
  - 수행 결과 여성들은 그간 마을의 공동체 유지 및 실제 사업진행에 참여해 왔으나 기존 관계망의 비즈니스적 관계 확장 과정에서 리더십 및 조직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전국 시도에 분포돼 있는 18개(2013년 현재) 중간지원조직<sup>1)</sup>들은 다수 여성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조직 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관련 리더십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부재)으로 여성에 적합한 협동경제 공동체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 사업 목적

- 사업의 목적은 여성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여성 협동적경제<sup>2)</sup>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 개발 과정 및 결과

1) 중간지원조직은 공공 영역과 사회적경제(본 사업의 협동적경제) 영역 사이를 매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유럽연합의 연구프로젝트였던 RISO에서는 중간지원조직(ISO(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을 사회적 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파이낸싱, 정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등을 통해 전국 여성친화도시(2014년 11월 현재) 소재 중간지원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시범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에 있음.

- 본 사업은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현정부의 국정과제 61-‘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사회발전과정에서의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됨.

##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

- 지역별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한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을 위해 중간지원기관 및 지역공동체 등으로 구분하여 위탁운영 체제로 지원함.

〈표 II-2-1〉 사업형태별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형태		위탁기관	세부사업내용	추진방법
중간 지원 기관 지원형	새모델 개발지원	(사)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대상 기존모델 프로그램 확산	- 마을기업 인큐베이팅 및 법인 등록 ·지역 여성NGO 및 여성친화도시 등 관련 행정전달체계를 통한 적용 가능한 그룹 선정 ·희망그룹 대상 설명회 개최 ·전문자문단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진단 ·KWDI 운영 과정 전반 모니터
	기존모델 정착지원	(협)한국 협동조합 창업경영 지원센터	기존 협동조합의 마을기업형 협동적경제 모델 전환을 위한 사업 재설계	- 중간지원조직 위탁을 통한 전문 컨설팅 실시 ·마을기업 전환을 위한 기획안 검토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로서의 독자성 및 확대 가능성 진단 ·확산용 프로그램 설계 ·KWDI 운영 과정 전반 모니터

- 2) 협동적경제란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일반 기업형 시장이 아닌 주민들의 협동적 자발성에 기반 한 비영리의 형식을 띤 사회적 가치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대안적 경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영역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보다 소규모 지역(마을) 중심의 주민 자발적 협동성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마을기업을 주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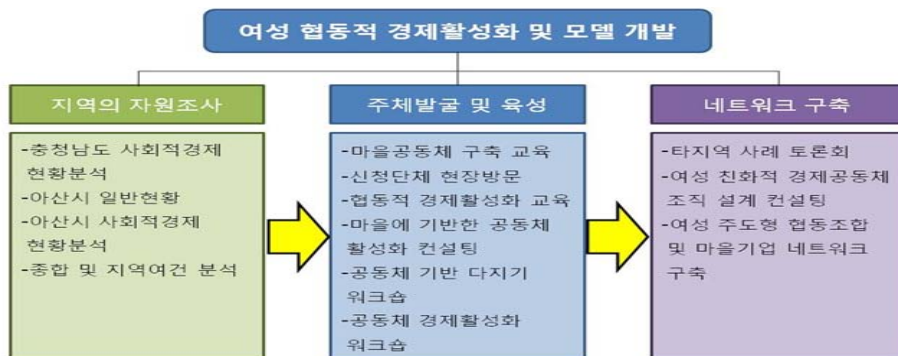
사업형태		위탁기관	세부사업내용	추진방법
지역 여성 공동체 지원형	새모델 개발지원	‘보물찾기 여행’	여성친화도시 대상 마을기업 모델 개발 지원	- 중간지원조직 위탁을 통한 전문 컨설팅 실시 ·지역 설명회 개최: 전문가, 희망 그룹, 관련 공무원 등 참여 ·마을공동체 형성 및 모델 개발 지원 ·중간지원기관의 기획안 및 현장 진단 ·지역 여성기관 운영 과정 전반 모니터

#### 충남지역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 ○ 사업의 필요성

-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협동경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유지는 물론 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지역사회의 노인 문제 특히 여성 노인의 일자리와 심리 정서적 고립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여성 리더쉽과 협동성을 중심으로 경제적 욕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자발적인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단위 여성 협동경제 공동체에 대한 발굴 및 교육 과정의 설계 등 다양한 확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의 인적, 물적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사업체로서 마을기업 형태의 지역기반 여성 협동경제 가능성 탐색 및 모델링 과정 개발

##### ○ 사업내용



[그림 II-2-1]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 과정

○ 현장 컨설팅 내용 및 진단 결과

〈표 II-2-2〉 현장 컨설팅 내용 및 진단 결과

컨설팅 내용	단체명	진단 결과
<p>충남형 여성공동체 사회적경제 키우기 -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 - 주민주도형 공동체사업 경험과 사례 - 공동체사업 추진시 몇가지 원칙</p>	<p>신정호를 지키는 사람들</p>	<p>- 강점 :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에서 생태교육을 실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짐 : 넓은 협력적관계망으로 생태교사에 대한 인적자원이 많음 - 약점 : 교육 외 사업을 위한 내부구성원이 없음 :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부 참여도가 떨어짐 - 지속가능성 :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람을 주지 못함 : 업무분배가 잘 되지 않음 : 내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짐 : 수익사업 지속여부를 고민할 필요 있음</p>
	<p>아산시 이주여성 연대</p>	<p>- 강점 : 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 큰 관심 : 내부구성원들 봉사 및 열정 - 약점 :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 열악한 재정구조 - 지속가능성 : 비영리 민간단체로 성장 : 구성원들의 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 : 방과후 수업, 다문화 교육 등 교육수요 증가 : 사업수행 후 내부결속력 강화 : 하지만 법인격의 수익사업으로 조직확장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 공동체경제활성화 컨설팅 내용 및 진단결과

〈표 II-2-3〉 공동체경제활성화 컨설팅 내용 및 진단 결과

	컨설팅 내용	공동체 현황 및 검토 내용
<p>북카페 다락</p>	<p>-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함. * 노무를 하는 조합원들이 각자 일하는 시간만 채우고, 설립목적에 맞는 조합활동에 몰입하지 못함.</p>	<p>- 관리 * 카페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4명으로 하루 6시간씩 주 3일 일함. 수입구조는 인문학 특강 강의료수입, 카페운영수</p>

	컨설팅 내용	공동체 현황 및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참여도가 낮은 것. 경영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권고함.</li> <li>- 세무대리인</li> <li>* 현재 세무대리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무신고 등은 하고 있으나 더 깊은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변경할 계획이 있음. 아산지역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세무대리인과 계약할 것을 권고함</li> </ul>	<p>입이며, 매출은 한달에 6백만원, 임대료는 55만원, 인건비 250만원, 식자재 2백만원, 전기수도료 등 50만원 등으로 손익분기점은 넘기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세무사 조력은 받고 있고, 부가세 신고, 원천세 등에 대해 관리받고 있는 상황임. 세무상의 위험은 낮은 상황임.</li> </ul>
흙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여년 이상을 활동한 회원들이 있고, 학교 및 시설 등에 출강을 하고 싶은데 자격을 증빙할 체계가 있었으면 좋음.</li> <li>* 학교와 시설은 강사인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해 자격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시와 교육청 관련기관 등이 협의를 통해 자격증빙이 애매한 영역의 강의활동에 대한 인증체계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임.</li> <li>* 강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름누리 협동조합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출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해보기로 함. (아름누리 이왕호 이사장을 소개해주시고 하고, 자격증빙체계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기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시 평생학습관의 도예강좌 후속모임으로 만들어진 동아리(흙사랑)로 10여년을 활동해왔으며, 회원은 20명 정도, 대부분 40~50대 주부들로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으로부터 생긴 여유를 자기개발과 사회활동에 투자하고자 함.</li> <li>- 도예활동을 통해 올해로 10회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 도예체험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및 지역 내 평생학습 시설 등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li> <li>- 2014년 1월 충남도 마을기업에 신청했었고 같은 해 6월 아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 중.</li> </ul>

여성친화도시에서 문화유산(관광)을 기반으로 한 협동적경제의 가능성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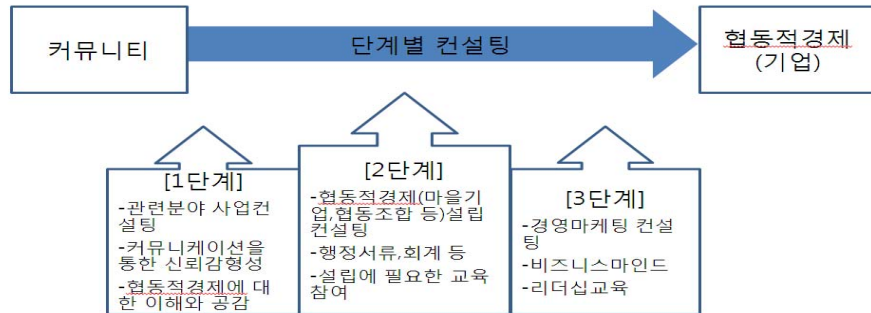
○ 사업모델개발 필요성 및 목적

- 여성들이 지역 커뮤니티(동아리 또는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협동적경제가 여성 커뮤니티에게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문화유산(관광) 분야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 컨설팅 성과 및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 컨설팅 프로세스





[그림 II-2-2] 여성을 위한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프로세스

- [1단계] 관련분야 사업컨설팅
  - 초기단계에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 차원에서의 창업 강좌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주로 창업하고 있는 반찬가게, 카페, 공예공방, 돌봄서비스, 문화체험 등 분야별 성공사례를 찾아 사업전망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도록 함.
  - 문화유산(관광)과 같이 이미 분야가 정해진 모임에게 일반적인 창업 컨설팅은 부적절.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성공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먼저 창업한 선배의 강의를 듣거나 기관을 방문하는 형태의 맞춤형 컨설팅 필요
- [2단계] 협동적경제(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컨설팅
  - 사업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설립의 번거로움, 절차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설립컨설팅이 필요한 단계
  - 설립절차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할 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설립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일정을 참조하여 일정 조정
- [3단계] 경영마케팅 컨설팅
  -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운영상의 성공이므로 경영 컨설팅이 필요
  - 실제 기업 운영상에 필요한 회계실무교육, 조직 관리와 리더십, 역할

분담, 비즈니스 마인드 교육 등 전문컨설팅 필요.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도입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설립컨설팅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본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꽃예술학회]의 회원역량 강화와 단체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방식의 사업조직구성을 지원하기 위함.

○ 사업결과: 사업계획

- 비즈니스 모델

〈표 II-2-4〉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고객	가치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예술 인성교육지도사 희망자 : 3,40대 주부 등</li> <li>·꽃예술 인성교육 진행 결정권자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담당교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li> <li>·기타 : 직장인, 성인, 재가 노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를 제공</li> <li>·매뉴얼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li> <li>·아이들 대상의 교육으로 인한 보람</li> <li>·생명존중 등과 같은 정신적 정서 함양</li> <li>·인성교육 및 창의력 증진</li> </ul>
고객관계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교육사 교육 후 조합원으로 가입 유도</li> <li>·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활동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대학 위탁교육 등 교육기관 통한 홍보</li> <li>·(사)한국꽃예술학회를 통한 홍보</li> </ul>
핵심활동	핵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교육사 교육 / ·교육위탁업체와 접촉</li> <li>·교육홍보활동 / ·교재, 교구,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강사로 활동할 조합원 9인</li> </ul>
핵심파트너	매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의 교육기관</li> <li>·사회복지관 / ·농촌기술센터 / ·구청, 교육청</li> <li>·(사)한국꽃예술학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 <li>·타 협동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매출 : 130만원 * 50인 = 6,500만원</li> <li>·수수료 : 일인당 월 60만원 * 12개월 * 15% * 9 = 972만원</li> <li>·위탁교육</li> </ul>
비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비용 : 교육매출 * 50%</li> <li>·사무실 유지비, 운영비</li> </ul>	

- 환경분석과 세부전략

〈표 II-2-5〉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환경분석 및 세부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기인들의 전문성</li> <li>·발기인들의 경험과 인맥</li> <li>·목표의식과 사명감,</li> <li>·아이템(꽃과 나무라는 소재)의 강점 : 창의력과 정서완화에 효과적</li> <li>·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같은 네트워크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부족</li> <li>·낮선 시도</li> <li>·발기인의 사업 경험 부족</li> <li>·소재의 유한성</li> </ul>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위기 조성 -&gt;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교육시장과의 차별성의 부족,</li> <li>·신규시장 개척의 어려움</li> <li>·협동조합 생태계의 열악함</li> </ul>
우선수행과제(SO)	우선보완과제(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성과 열정,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li> <li>·교육단체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한 홍보</li> <li>·컨텐츠의 확장·심화가 필요</li> <li>·확장성이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를 통해 꽃예술 인성교육지도사의 교육 과정을 홍보</li> <li>·현재 발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한 교육 확장</li> <li>·교재 등의 출판을 통한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기인들의 사업경험이 전무한 상황으로 주변에서 역량있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li> <li>·사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li> </ul>
문제해결과제(ST)	장기보완과제(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과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원예치료의 과정과 꽃예술 인성교육과정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li> <li>·이를 통한 마케팅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전체에 대한 자료의 축적</li> <li>·각 교육진행에 있어 교육생 피드백에 대한 공유</li> <li>·이에 대한 자료 정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체계화</li> </ul>

· 마케팅 계획

〈표 II-2-6〉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마케팅 계획

교육프로그램 진행기관 개척	꽃예술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확장전략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 마련 ·교육진행 가능 기관 리스트 확보 ·조합원별 영업지역 및 대상 분담 ·영업활동 후 반응에 대한 공유 및 평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 대상 재능기부 교육 진행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등 ·요양병원, 복지기관의 노인 대상 재능기부 교육 진행 ·장애인 시설 장애인 대상 재능기부 교육 진행 ·대상별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및 보완점 공유
꽃예술 인성교육에 관한 도서 출판	홍보채널 마련
	·꽃예술 인성교육 협동조합 블로그 운영 ·카카오 스토리 페이지 운영 (30,40대 주부들이 주로 이용)
자격증 신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신청	

· 예상 손익/자금 시나리오

항목	출자금	2014년					2015년							(단위: 천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A. 매출액	4,500						6,000	1,000	61,000	1,000	6,000	6,000	6,000	87,000
1.1 강사수수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1.2 위탁교육							5,000				5,000	5,000	5,000	20,000
1.3 전문가과정 교육									60,000					60,000
B. 비용합계		1,700	700	700	700	700	4,200	3,700	31,200	700	4,200	4,200	4,400	57,100
3. 감사비							3,500		30,000		3,500	3,500	3,500	44,000
4. 영업비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00	3,800
5. 홍보비		1,000					3,000							4,000
6. 통신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0
7. 교육관련비									500					500
8. 예비비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600
C. 잉여금(A-B)		- 1,700	- 700	- 700	- 700	- 700	- 1,800	- 2,700	- 29,800	- 300	- 1,800	- 1,800	- 1,600	- 29,900
D. 자금잔액		2,800	2,100	1,400	700	-	1,800	900	28,900	29,200	31,000	32,800	34,400	34,400

[그림 II-2-3]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예상 손익 및 자금 시나리오

꽃예술인성교육협동조합 모델 개발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생명을 가진 꽃예술놀이를 통한 미적체험으로, 어린이들의 인격형성과 예술적 감성, 독창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인성교육이 필요함.
- 실버세대들이 꽃과 나무를 통해, 노년을 건강한 정신으로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육사 양성이 필요함.

- 양성된 꽃예술인성교육사들이 유치원이나 복지관등에서 활동하며, 인성교육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유치원 아동과 실버세대의 감성교육을 올바르게 지도할 꽃예술인성교육사를 양성하여 건강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자연물의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와 실버세대에게 정서순화 및 실천적 인성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꽃예술인성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표 II-2-7〉 꽃예술인성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예술인성교육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신장을 통한 지도력 향상에 목표를 둠</li> <li>① 꽃예술인성교육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 ② 꽃예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 능력의 배양</li> <li>③ 꽃예술인성교육에 따른 전문적 교수·학습능력의 신장 / ④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자질 배양</li> </ul>	
내 용	꽃예술인성교육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예술인성교육사로서의 교육관 정립</li> <li>▪ 본 교육과정의 이해</li> </ul>
	꽃예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 능력의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꽃문화의 정체성 확립 / ▪ 꽃문화의 이해</li> <li>▪ 미적 인식 능력 배양 / ▪ 꽃예술의 이해와 비평</li> </ul>
	아동교수·학습능력의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심리 이해 / ▪ 유아 교육</li> <li>▪ 창의성 교육 / ▪ 체험, 견학, 감상교육</li> </ul>
	실버세대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정서 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버세대 심리 이해 / ▪ 실버세대의 정서 순화</li> <li>▪ 건강한 정신능력 배양</li> </ul>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자질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의 이해</li> </ul>
방 법	강의 형태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중심(이론) / ▪ 실기 중심(실기)</li> <li>▪ 토론 중심(이론, 실기, 이론+실기)</li> <li>▪ workshop(이론, 실기, 이론+실기)</li> <li>▪ fieldwork(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복지관, 장애인시설, 수목원 견학)</li> </ul>
	강사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예술가, 교수, 미학자, 아동교육 전문가, 실버세대 교육전문가</li> </ul>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 실시</li> <li>- 각 과목을 고르게 평가/ - 이론 과목의 경우 객관식 출제</li> <li>- 실기, 이론+실기 과목의 경우 각 과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li> <li>- workshop, fieldwork의 경우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서 제외</li> </ul>	

○ 교육 프로그램 내용

〈표 II-2-8〉 꽃예술인성교육사 교육 프로그램

목표	내용영역	강좌명	강의형태
① 꽃예술인성교육사로서 의 정체성 확립	인성교육의 이해	▪ 유아 인성교육/ ▪ 꽃예술인성교육의 사례	
②-① 꽃예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 능력의 배양	아름다움의 이해	▪ 자연·생명의 아름다움 / ▪ 한국의 미 1 ▪ 한국의 미 2 / ▪ 한국의 미 3 ▪ 동양의 미 / ▪ 서양의 미	이론 및 토의
	꽃문화의 이해	▪ 동양꽃 작품의 특성 / ▪ 서양꽃 작품의 특성 ▪ 한국의 꽃문화 / ▪ 꽃예술 작가의 덕목 ▪ 조형의 요소 / ▪ 조형의 원리 ▪ 꽃작품과 색채 / ▪ 소재 연구 ▪ 감상과 비평 / ▪ 원예치료와 심리치료	이론 및 토의
②-② 꽃예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 능력의 배양	꽃놀이 학습의 실제	▪ 야생화 꽃놀이 / ▪ 꽃놀이와 다도 ▪ 꽃 꾸러미 선물 / ▪ 꽃으로 만든 내 얼굴 ▪ 화관 만들기 / ▪ 솔잎나룻배 ▪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우리강산 ▪ 꽃 속에 하늘이 보여요 ▪ 찰흙 꽃병에 꽃동산 꾸미기 ▪ 꽃과의 대화 / ▪ 호박에서 핀 꽃 ▪ 꽃으로 태극기를 만들기 ▪ 꽃목걸이 만들어 친구에게 걸어주기 ▪ 꽃다발 만들어 선물하기 ▪ 박하와 감국으로 허브오일 만들기 ▪ 내게 주는 꽃바구니 ▪ 마른 꽃으로 선생님 책상 위 장식하기 ▪ 폴로 만드는 꽃송이 / ▪ 재활용병을 꾸며 꽃꽂기 ▪ 접시에 담긴 꽃장식 / ▪ 조상들의 화병에 꽃꽂아 보기 ▪ 난앞으로 조각보 컵받침 만들기	실기 및 이론
③ 아동 교수·학습능력의 신장	아동의 이해	▪ 아동 심리 / ▪ 아동 창의성 발달과 교육 ▪ 아동의 조형교육 / ▪ 아동 놀이와 교육 ▪ 유아교수방법 / ▪ 놀이로서의 동요, 민요, 춤	이론 및 토의
	현장체험	▪ 유치원 견학 및 실습 1 / ▪ 유치원 견학 및 실습 2	현장실습
④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자질 배양	협동조합의 이해	▪ 협동조합의 개념 / ▪ 꽃·나무협동조합원의 책임과 의무	이론 및 토의

여성 협동적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컨설팅 모니터

〈표 II-2-9〉 중간지원기관 형태별 컨설팅 내용 및 모니터 개요

중간지원조직 명칭 및 형태	‘보물찾기여행’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한국협동조합컨설팅 지원센터
	지역공동체가 멘토로서 여성 공동체를 컨설팅한 경우	중간지원기관(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지정)이 컨설팅한 경우	중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지정 이외)이 컨설팅한 경우
그룹 모집방법	공모방식(서울시 여성친화 도시 4개구 대상 홍보)	공모방식 (아산시 마을기업 공모)	(사)한국꽃예술헌회
컨설팅 대상	-서대문구 문화해설사 동아리 -허스토리 마실(협동조합)	-흙사랑(동아리) -북카페다락(협동조합 신고중)	(사)한국꽃예술헌회

○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피컨설팅 그룹의 연령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접근방법으로서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과제 요청 시, 보다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매뉴얼화된 교육 방식을 벗어나 피컨설팅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필요
- 피컨설팅 그룹의 내부 결속력 및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등 1차 내부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간지원기관 측의 적극적 설득 및 설명 부족
- 기존 중간지원기관의 매뉴얼화 된 교육 컨설팅 방식은 일관성 및 체계성의 측면에서 교육 대상자의 기초적 지식 숙지 및 법인 설립 절차 등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효율적임.
- 그러나 피컨설팅 그룹의 특성 및 니즈를 반영한 특수성 고려에 있어 피컨설팅 그룹의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임.

○ “보물찾기여행”

- 유사 조직의 현 실태에 대한 문제 공유로 피컨설팅 그룹 소극적 태도 도출

- 여성들의 소극적 참여 태도 극복에 대한 토론 진행
- 컨설팅 주체는 유사 조직 방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방문 느낌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함양 필요
- 컨설팅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혼선 발생
  - 기존 지역 중간지원기관의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필요성 및 참가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 업종 마을기업들을 방문함으로써 전국 네트워크의 필요성 인식 및 가능성 공유
  - 유사 사업으로 확장 및 통합 가능성 높은 내용의 여성마을기업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탐색 등 적극적 컨설팅 진행
- 기초교육에 이어 심화교육까지 전체 그룹 대상 교육 실시의 비효율적, 비효과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발생
  - 전체 대상의 개괄적 내용을 통한 컨설팅 대신 유사 조직들 간 공유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
- 각종 여러 지원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자발성 결여된 관주도의 마을기업 설립 과정 이행의 어려움.
  - 협동조합 법인 설립에 대한 조합원의 합의 등 오랜 준비 기간 필요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시범가이드 개발을 위한 여성 마을기업 심층 인터뷰

- 여성친화형 협동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 컨설팅에 활용될 시범가이드 개발을 위해 전국 7개 지역 총 10개 여성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는 주로 여성으로서 마을기업 선정 전후에 겪게 되는 어려운 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도시형 여성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정책욕구



〈표 II-2-10〉 도시형 여성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정책욕구

유형	지역	사업내용 및 취지	운영 상 어려운 점		기대효과	외부필요지원내용
교육	서울 은평	-결혼이주 여성들의 초중등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조직 내	-불안정한 수익구조 -조직구성원들 간 역량 차이로 인한 갈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가정양립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존감 향상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비용 절감 지역사회 다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부심 고양	-실행 단계별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콘텐츠 관련 기타 정부사업 연결 및 소개 -성과지표 보완 (수익창출 이외)
	충남 당진	-자기주도적 아이를 위한 대안적 교육 실시	조직 내	-안정적이나 낮은 단가로 인한 소규모 수익 창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전환	-교육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 필요
			조직 외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담당자의 도시형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 가부장성으로 인한 여성리더에 대한 터부	-사교육비 절감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 청소년들의 융화	
	대구 달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대안적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인문학 교육	조직 내	-수평조직 실현의 현실적 어려움, 리더 자리를 둘러싼 갈등 -교육서비스 특성 상 수익 창출을 위한 피드백 소요 시간 확보 어려움	-지역 인문학교육을 통한 대안적 경제사회 만들기에 대한 인식 전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	-교육서비스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인천 연수 (3)	-지역 친환경 등 교육 -지역특성화 기념품	조직 외	-자치구 담당자의 찾은 인사이드으로 인한 사실상 업무 공백 발생	-지역 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조직운영원리 생산 등 사회적 가치 산출	
			조직 내	-조직 비경험자의 리더 불신 등 갈등 -불안정한 수익구조	-다양한 사업들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안전망 구축 지향	-효율적 예산 지출을 위한 적극적 컨설팅 -기성 마을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유형	지역	사업내용 및 취지	운영 상 어려운 점		기대효과	외부필요지원내용
		판매 및 지역홍보 -도자기 강의 및 판매	조직 외	-행정기관과 남성들 간 지연관계를 통한 사업진행으로 여성리더 소외 -비효율적 컨설팅	-경력단절여성들의 일·가정양립 가능 일자리 창출	지속적 지원(시스템차원) -여성마을기업협의체를 위한 공간지원
문화	서울 성북	-지역 문화해설	조직 내	-낮은 단가로 인한 소규모 수익 창출 및 다양한 상품 개발 자금 부족	-지역 해설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지역 고유 문화 재산 보존	-수익창출 이외 다양한 조직성장 지표 개발
			조직 외	-교육사업 판로개척 시스템 부족	-지역 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 가능 일자리 창출	-판로개척 관련 관계기관들 간 협조시스템 구축 필요

○ 도시 및 농촌 제조업종 여성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정책욕구

〈표 II-2-11〉 도시 및 농촌 제조업종 여성마을기업 운영실태 및 정책욕구

유형	지역	사업내용 및 취지	운영 상 어려운 점		기대효과	외부필요지원내용
도시 형	부산 사하	도시락·반찬 주문 배달	조직 내	-(음식)제조업 특성 상 시간제 인력 역량 보충 시간 확보 어려움 -낮은 단가로 인한 소규모 수익 창출 (잉여 없음)	-취약계층 반찬 봉사 -공간제공을 통한 지역민들 간 다양한 관계망 형성의 매개역할	-인건비 사용 제한 등 사업비 운용방식 개선 필요: 인건비 제한으로 잉여 수익창출 어려움 (음식제조업 특성 상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됨)
			조직 외	관변단체와 행정기관 간의 관행적 밀착 관계로 인한 자생적 운동단체의 사업추진에서의 소외		
농촌 형	강원 평창	비누제작 및 판매	조직 내	독단적 리더십으로 인한 구성원들 간 갈등	-농촌 지역 세컨드 잡 기능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가능	-사업 안정화를 위한 2차 선정 후 지속적 지원 필요(시스템 차원) -수익 이외 대안적 평가 필요
			조직 외	지역 가부장성으로 인한 여성리더에 대한 불신		

유형	지역	사업내용 및 취지	운영 상 어려운 점		기대효과	외부필요지원내용
	전북 익산	농산물 가공·판매	조직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원들 간 역량 차이로 인한 갈등</li> <li>-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유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 거점 역할</li> <li>-만족도 높은 지역 내 고령여성 일자리 창출</li> <li>-지역 문화사업 후원</li> <li>-(일·가정양립 및 공동육아 가능한)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직주근접형 마을공동체 비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착형 컨설팅</li> <li>-효율적인 컨설턴트 활용</li> <li>-안정적 공간 지원</li> <li>-관련 전문지식 확보를 위한 지역 내, 행정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li> <li>-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 필요</li> </ul>
			조직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기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li> <li>-한정된 지역 인적 자원으로 인력 공급의 어려움</li> <li>-타지역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 한계</li> </ul>		

## ○ 여성친화형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가이드 사례

- 중간지원기관 활용 목적의 여성친화형 시범가이드 개발 필요성 : 최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에 유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마을기업 설립 현실화 가능성이 높음.
- 여성친화형 협동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가이드(마을기업 중심): 안전행정부의 5가지 심사평가기준 및 지표(기반<sup>3)</sup>)으로 여성친화적인 마을기업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측면의 가이드를 지자체 및 중간지원기관 차원의 심사 및 컨설팅 적용 참고용으로 시범 개발하여 활용을 제안하고자 함.

3) 현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시행지침에는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패러다임 전환”을 명시하고 있으나 컨설팅 등 그 실천에 있어 실제 지역들은 안전행정부의 시행지침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남(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 8장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에 지역 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5가지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여성친화성 가이드를 작성함.

〈표 II-2-12〉 심사지표별 관련 고려사항 및 컨설팅 가이드(1):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내용	지표별 관련 고려사항	필요 컨설팅 내용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봉사활동 등 관련 지역 활동 기간	공동체의 봉사활동 등 기타 지역 활동의 마을기업 사업에서의 장점화 요소 발굴
	사업내용 및 수행에 대한 (지역)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 정도	사업 취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장기적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 등의 사업취지에 대한 소신으로 지역사회 인식 전환에 기여	사업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자긍심 고양 - 장기적 전망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등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의 자발적 참여 기반 여부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방법
	마을기업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지역 내 새로운 인적자원 발굴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지역 내 공동체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 -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마을기업의 역할 정립
	참여자들의 개인문제와 지역사회 문제 연결이라는 인식 공유 정도	개인문제의 사회문제화 가능성에 대한 성찰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연결고리 찾기
	리더십 종류 및 발휘 영역: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대처 및 조정 방식 사용 여부	갈등조정 등 리더십 관련 교육(조직문화 및 조직심리 등) - 원활한 조직운동을 위한 리더의 권위인정 범위에 대한 합의 등
	조직 운영 방식: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동반성장 가능한 협동적 조직 운영 원리 및 지표 개발과 같은 사회적경제 가치 및 사회자본 <sup>4)</sup> 생산에 기여	조직 비경험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직 행위 양식 등에 대한 실무 매뉴얼 및 내부 지침 (규약) 작성 교육
	일·가정(생활)양립 등이 가능한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등 유연한 조직 운영 실천	조직문화 차원에서의 일·가정양립 실천 등의 필요성
	마을기업 내 공동육아 실천	마을기업의 마을공동체 차원 실천 사항 등 거시적 관점의 마을기업 역할
	여성 생애주기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문화	갱년기 증후군 등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상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문제 발생 시 휴직 상태 인정, -오해 소지 방지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서명 받기 등)
	창의력 고양을 위한 자율적 근무 시간 사용 등 일처리 자율성 부여	자율적 근무시간 사용 등에 대한 의식 - 자율성 vs 효과성 간의 관계 등

지표 내용	지표별 관련 고려사항	필요 컨설팅 내용
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마을기업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여성들과의 소통 및 지역여성들 간 지역문제 발굴을 위한 관계망 형성의 매개 역할 수행 등 지역공동체성 향상에 기여	지역공동체성 및 지역공동체성 고양 필요성 등에 대한 의식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마을기업 사업을 중심으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업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방식
지역문제 해결	자발성에 기반한 지역문제 발굴 여부(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탐색 및 행정기관 접촉 시도 등 노력)	지역사회기여 및 조직문화 경험 등 경제적 욕구 이외 다양한 니즈 개발로 여성들의 자성취감,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인문학 등 교육서비스 사업을 통한 일반 경쟁사회에 대한 대안적 가치 생산 및 지역민들과의 공유	인문학 교육 등 지역 내 대안적 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발굴 시도 (특히 도농복합형 지역의 경우)	농촌형에서 도농복합형으로 전환된 지역의 경우, 전환시점의 시의적절성을 갖춘 아이টে에 대한 충분한 교육 컨설팅 필요
지역사회 공헌 정도	결혼이주여성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니즈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생계형(일자리 창출형), 지역사회기여형(봉사형) 등 유형별 컨설팅

- 4)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또한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본은, ①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③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 다.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 □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연내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에 유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마을기업 설립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및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유사 사업의 증가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현정부의 국정과제 61-‘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사회발전과정에서의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에 기반한 여성의 협동적 경제능력 향상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는 2013년도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 및 2014년도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델 및 시범 가이드 개발” 사업(여성친화도시 대상)을 수행함. 가이드는 각 지역에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범 개발되어 향후 여성친화형 협동적경제 모델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내 다양한 사업 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여성의 지역경제활성화에의 기여도를 높여 사회적경제 사업을 통한 따뜻한 성장 도모를 꾀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임.

### □ 향후과제

- 여성들이 협동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욕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자발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 여성 협동경제

모델 개발을 돕는 여성친화적 조직 환경 조성 및 설계를 위한 실천가이드 개발

- 단계별(씨앗기, 창업기, 정착기 등) 여성친화적 조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가이드 개발
- 지역 특성별(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및 업종별(인력양성 및 제조업 등) 여성 마을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실시
  - 여성 마을기업 조성에 있어서 어려움 및 극복방법 등에 대한 정성적 지표 발굴
- 지역 여성 마을기업 리더 및 조직원 통합 워크숍 개최
  -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판로 발굴
- 지역 환경 및 업종 특성별 그룹 워크숍 개최
  - 상호 간 멘토·멘티 네트워크 형성 및 SWOT 분석을 통한 조직 지속성 및 확장력 확보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체계 활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여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컨설팅 제공
  - 교육, 상담, 리더십, 워크숍 및 정보 제공 등
- 마을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플랫폼 구축 및 인큐베이팅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 Ⅲ

## 생활체감 여성정책 의제발굴 사업

1.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51
2. 여성정책 현안조사	72
3.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94



## 1. 생활체감정책단 운영<sup>5)</sup>

### 가. 사업배경 및 목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생활체감정책단을 구성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주제를론을 통한 소통을 진행해 왔음.

여성과 가족, 청소년정책의 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와 대중의 의견을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정책 의제화하고 여성가족부 및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의 의제발굴을 기본 목적으로 함.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은 운영 5기를 맞이함에 따라 보다 확대된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다각화된 체감형 정책의제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체감정책단과 여성친화도시 주민 및 여성정책 현안 조사 패널을 통합해 보다 전략적 차원의 생활체감정책단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또한 제시된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 전달을 통해 의제화 하는데 주력하였음.

### 나. 사업내용 및 결과

생활체감정책단 모집

- 모집기간(1차) : 2/12 ~ 3/5
- 상시모집 : 3/6 ~ 11/31
- 모집방법 :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성원 모집을 위해 SNS 광고를 통한 모집공고, 소문내기 이벤트 등을 실시
- 이전 정책단 활동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5기 단원모집 포스터

5) 이하 본문의 내용은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 세부사업으로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사업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메일링 진행(총 3,5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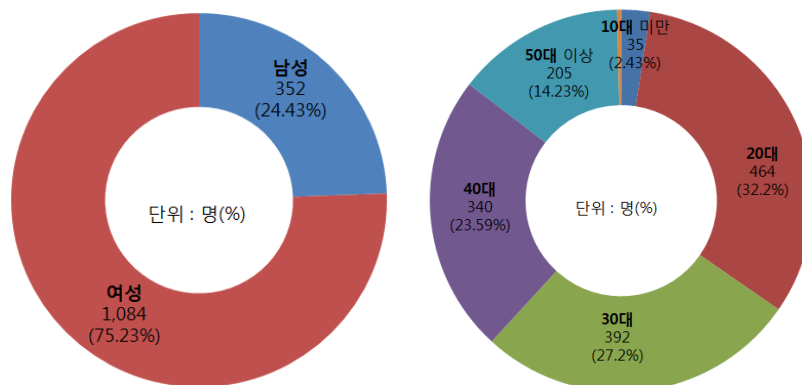
- 모집결과(2014.11.13 기준) : 카페 회원 - 1,441명 2014년 추가 가입자 중  
생활체감정책단 - 253명 활동 신청

생활체감정책단 구성

- 생활체감정책단은 공식 카페에 가입한 회원과 5기 활동신청자를 포함
  - 생활체감정책단 커뮤니티는 생활체감정책단 5기(회원 누적) 외 온라인  
상에 생활체감정책단 활동 및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인원들을 포함하  
여 구성

① 생활체감정책단 공식 카페 회원(2014.11.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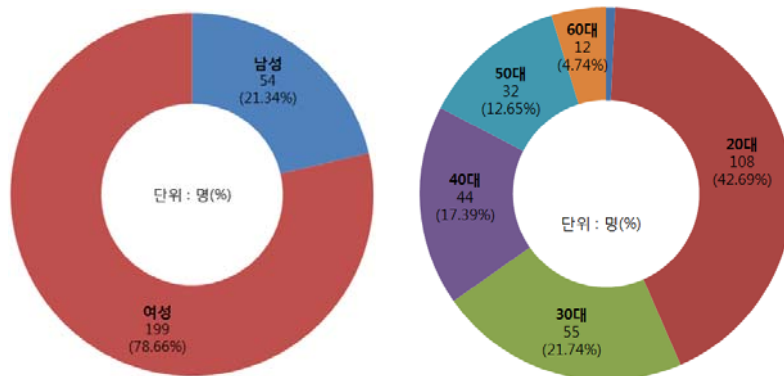
- 생활체감정책단 5기 단원(252명)을 포함한 커뮤니티 회원은 여성 1,084명  
(75.2%), 남성 352명(24.4%)과 성별 비공개 회원 5명으로 총 1,441명으로  
구성
- 연령대는 10대 35명(2.4%), 20대 464명(32.2%), 30대 392명(27.2%), 40대  
340명(23.6%), 50대 이상은 205명(14.3%)로, 20대~40대의 비율이 높음.



[그림 III-1-1] 생활체감정책단 카페회원 성별-연령별 분포

② 5기 정책단(2014.11.13 기준)

- 생활체감정책단 5기는 여성 199명(78.7%), 남성 54명(21.3%)으로 총 253명으로 구성
- 연령대는 10대 2명(0.8%), 20대 108명(42.7%), 30대 55명(21.7%), 40대 44명(17.4%), 50대 32명(12.7%), 60대 이상 12명(4.7%)으로, 특히 20대의 비율이 높음.
- 과거 생활체감정책단 활동 경험이 없는 참여자가 179명으로 70.6%에 달하며, 참여 경험이 있는 5기는 74명으로 29.3%로 집계됨.



[그림 III-1-2] 생활체감정책단 5기 성별-연령별 분포

온라인 주제를론

○ 공식채널 운영

-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에서 실질적인 생활체감정책 발굴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캐스트를 추가로 개설하고, 이미 구축된 공식채널(블로그 및 커뮤니티)들을 활성화하고 홍보 확산함.



[그림 III-1-3] 생활체감정책단 주요 공식채널

- 홈페이지 : 생활체감정책단 소개, 연혁, 지난활동, 진행 중인 조사, 공지 사항,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커뮤니티 : 주제별 토론 및 자유제안 등에 대한 소통 거점
- 블로그 : 주요 정책제안에 대한 활동결과 노출, 연구원의 소식 등 홍보 채널 역할 수행
- 오픈캐스트 : 온라인 주제, 생활체감정책단 주요 정책제안과 피드백

○ 홈페이지 운영

- 생활체감정책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 활동 일정 및 공식채널로 연동되어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단 운영정보의 거점 특성을 지님.

① 소개	② 지난활동	③ 온라인조사
④ 생활체감형 정책제안	⑤ 알림마당	⑥ 참여마당

[그림 III-1-4] 공식 홈페이지 구성

#### ○ 커뮤니티 운영

- 이전 활동과 구분하여 활동자료를 분류하고, 2014년 8대 주제별 토론 주제 및 자유제안에 대해 정책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위한 게시판을 별도 개설, 운영함으로써 생활체감정책단 활동과 구분하여 정책제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메뉴를 구성함.

생활체육정책단		
↳ 생활체육정책단 소개		
↳ 공지사항		
↳ 뉴스레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웹사이트		
↳ 정책단 자기소개		
↳ 자유 정책 제안		
↳ 오프라인 모임 후기		
↳ 정책단 출석체크	5	
↳ 정책단 자유게시판		
Weekly 여정		
↳ 주목할 만한 이슈		
↳ 일일 국내여성동향		
↳ 주간 이슈		
↳ 국제 여성동향		
↳ 여성정책30가지 이야기		
↳ 웹툰으로 만나는 여성정책	Weekly	
↳ 여정 인포그래픽		
첫 번째 주제, 통일		
두 번째 주제, 안전		
세 번째 주제, 모성보..		
네 번째 주제, 양성평..	30가	30가
다섯번째 주제, 보육 ..		
여섯번째 주제, 일본 ..		
일곱번째 주제, 재취..		
여덟번째 주제, 출해 ..	(	)
↳ 1. 여성 고용	1.	(3 )
↳ 2. 저출산(고령 임신 및 출산)		
↳ 3.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안	2.	(4 )
생활체육정책단 2013		
생활체육정책단 2012	3.	(5 - 6 )
이벤트		
바보가기	4.	(6 - 7 )
↳ 여정 블로그		
↳ 여정 홈페이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7 - 8 )

	6.	(8 - 9 )
	7.	(9 - 10 )
	8.	(11 - 11 )
	2012 - 2013	
	가	

[그림 Ⅲ-1-5] 공식 커뮤니티(카페) 구성

- 커뮤니티(카페) 운영 현황(2014.11.13 기준 / 2013.11.17 기준)
  - 커뮤니티 신규가입자 수 : 764명(2013년 390명, 관리자 2명)
  - 커뮤니티 게시글 수 : 2,863건(2013년 1,192건)
  - 커뮤니티 피드백(댓글) 수 : 15,424건(2013년 6,388건)
  - 커뮤니티 방문횟수 : 179,532회(2013년 91,785회)
  - 커뮤니티 페이지 열람 : 309,593건(2013년 155,665건)
  - 커뮤니티 검색 유입 : 141,429회(2013년 17,823회)

○ 블로그 운영

- 생활체감정책단의 정책제안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콘텐츠(인포그라픽 등)로 제작하여 포털사이트에 검색노출 등을 통해 정보를 확산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성정책연구원 ▲</li> <li>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개</li> <li>2014년 생활체감정책단</li> <li>한국여성정책연구원 행사 알람</li> <li>오시는 길</li> </ul>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감정책단 ▲</li> <li>정책단 소개</li> <li>정책단 활동</li> <li>자유정책제안</li> <li>생활체감정책단 뉴스레터</li> </ul>		
	Week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ekly 여경</li> <li>뜨거운 여경</li> <li>매일 매일 여경</li> <li>한 주간의 여경</li> <li>세계속의 여경</li> <li>30가지 여성정책이 있기</li> </ul>		
	30가	30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번째 주제, 통일</li> <li>두 번째 주제, 안전</li> <li>세 번째 주제, 육아휴직</li> <li>네 번째 주제, 양성평등기본법</li> <li>다섯 번째 주제, 보육 및 돌봄지원</li> <li>여섯 번째 주제, 일본 군위안부</li> <li>일곱 번째 주제, 재취업 및 근로문화(주제)</li> <li>재취업 및 근로문화(주제)</li> <li>재취업 및 근로문화(의견)</li> <li>여덟 번째 주제, 올해 여성정책 이슈(주제)</li> <li>올해 여성정책 이슈(의견)</li> </ul>	5	5
		( 3 )
		5
		( 4 )
		5 ( 5 - 6 )
		5
		( 6 - 7 )
		5 ( 7 - 8 )
		5
		( 8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문내기 이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감정책단 4기</li> </ul>		5 ( 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감정책단 3기</li> <li>여성 포커스 2012</li> </ul>	10 )	
		( 11 )
	4	4
	3	3
	2012	2012

[그림 III-1-6] 공식 블로그 구성



- 블로그 운영 현황(2014.11.13 기준 / 2013.11.17 기준)
  - 블로그 총 게시글수 : 909건(2013년 1,032건)
  - 블로그 방문자수 : 66,999명(2013년 26,868명)
  - 블로그 방문횟수 : 71,082회(2013년 28,883회)
  - 블로그 페이지 열람수 : 76,851건(2013년 32,073건)
  - 블로그 검색 유입수 : 26,520건(2013년 17,823건)

○ 오픈캐스트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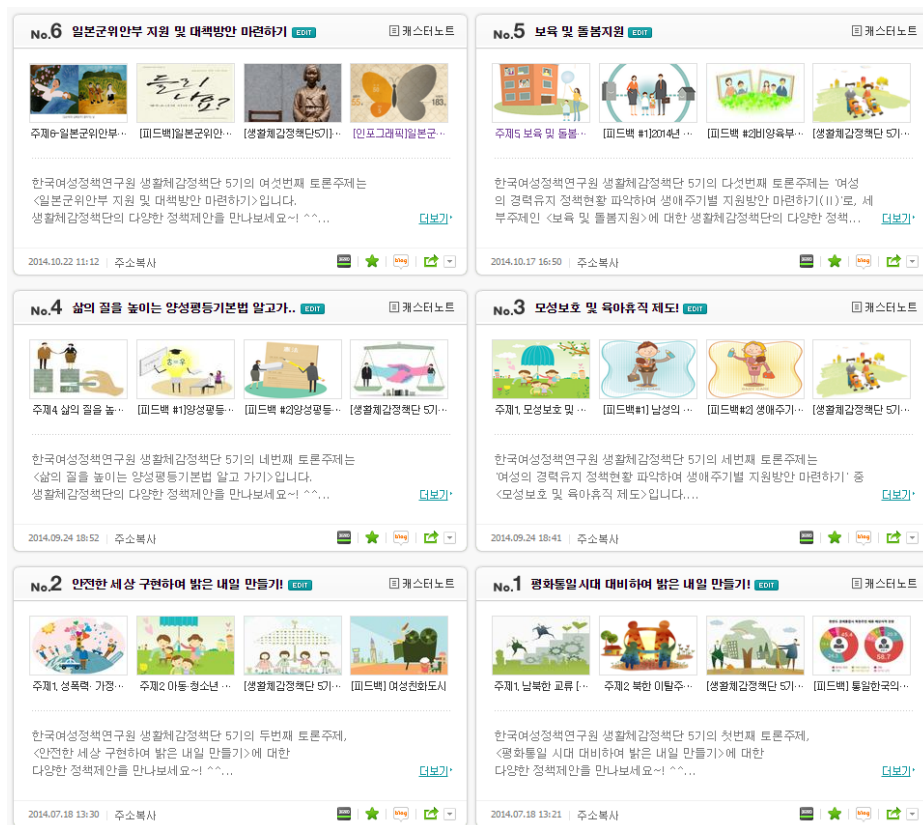
- 최근 오픈캐스트는 인터넷 상의 유용한 정보들을 캐스터의 관점으로 모아 공유하는 서비스로, 정기 구독자를 확보하여 생활체감정책단 5기의 활발한 제안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재확산하는 채널로 활용함.



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http://opencast.naver.com/KW383

[그림 III-1-7] 공식 오픈캐스트 구성

- 오픈캐스트 운영 현황 (2014.11.13 기준)
  - 개설일 : 2014년 7월 11일 개설
  - 총 6회의 캐스트 발행(7.18~10.22)
  - 생활체감정책단 블로그와 연동하여 온라인 주제, 피드백, 5기 의견 등을 주제별로 묶어 월 1회 이상 발행
  - 총 구독자 수 : 560명
  - 총 누적 방문자 수 : 1,007명



[그림 III-1-8] 발행 완료된 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온라인 주제를 토론 운영

- 생활체감정책단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주제(고용)를 세분화하였으며, 국정과제와 생활체감정책단의 관심이슈를 통해 8대 주제를 선별하고 주제를 토론을 시행하였음.
- 8대 지정주제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2~3문항을 함께 실시하여 결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음.



[그림 III-1-9] 2015년 온라인 토론 8대 주제

- 주제별 토론결과에 따른 제시된 주요의견

[주제1] 평화 통일시대 대비하여 밝은 내일 만들기(총 100건)

-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의 어려움 지적
- 유연한 정부 정책 필요
- 이탈주민을 향한 인식 개선 필요
- 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책(일자리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마련 필요

[주제2] 안전한 세상 구현하여 행복한 세상 만들기(총 83건)

-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패트롤 제도와 부모 자격증 필요
-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의 필요

[주제3]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황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

하기(I)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총 62건)

- 관련제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필요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현실과 제도, 법률 간의 괴리감 개선 필요
- 사업체의 육아휴직 장려 필요
- 2자녀 이상 세금 감면 혜택 및 복지 지원 필요
-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 필요

[주제4] 삶의 질을 높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알고 가기(총 73건)

- 양성평등에 대한 법적 강제성 발휘
-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 전담기관 설치
- 초·중고 및 사업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양성평등 실태 파악 및 감시 철저
- 양성평등 우수기관이나 사업장에 혜택 제공
- 성차별 사례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주제5]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황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

하기(II) - 보육 및 돌봄지원(총 75건)

- 보육 및 돌봄 환경 개선
- 돌봄서비스 홍보 강화 및 서포터즈 운영
- 직장 내 어린이집 및 보육 시설 확충
- 융통성 있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운영
- 보육 및 돌봄교사 처우 개선과 인성교육 강화
- 시간제 보육 인력 파견 서비스 도입
- 보육 정책 관련 간담회 수시 개최
- 직장맘&전업맘지원센터 개소 추진
-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 위한 기업 정규교육 의무화

[주제6] 일본군위안부 지원 및 대책방안 마련하기(총 98건)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캠페인 진행, 수요집회 등)
-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
- 올바른 역사관 재정립 노력 및 역사교육 강화
- 일본군위안부 추모기념관 설립
- 범세계적인 차원의 접근 필요
- 민간단체활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 개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에 국가적 예우 필요
- 역사적 통계 근거자료와 피해자 실태보고서 발간 및 홍보
- 일본군위안부 관련 영화 및 문화 제작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내용 상설 전시
- SNS를 통한 전 세계 서명운동 및 진실 알리기 캠페인 진행

[주제7]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황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하기(Ⅲ) - 재취업 및 근로문화(총 106건)

- 새일센터 운영 확대
- 경력활용을 위한 기업 연계 직장 소양교육 지원
- 산업수용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 재취업 도우미 웹사이트 개설
-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경력포인트제도 도입
- 기업 내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근무 여건 개선 및 여가문화 지원
- 근무현장 모니터링 및 환경 점검
- 제도 악용 사전 방지 노력 및 감시 강화
- 300인 이상 직장 내 노무상담사 상주제도 도입

[주제8] 올해의 여성정책 이슈(총 96건)

-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의무 활성화
- 고령임신 병원 진료 서비스 강화
- 고령임신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 단축근무시간제도 및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자유제안] 총 329건

- 3월부터 5기 활동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된 자유정책제안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육아 및 노인 등의 돌봄 지원정책과 학교 내 폭력 등의 안전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오프라인 모임

○ 발대식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8일(금) 15:00-17:00, 본원 국제회의장
- 참여인원 : 약 90명
- 논의내용
  -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생활체감정책단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
  - 온라인 채널 활용과 운영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독려함.
- 발대식 후기 이벤트 진행

○ 최종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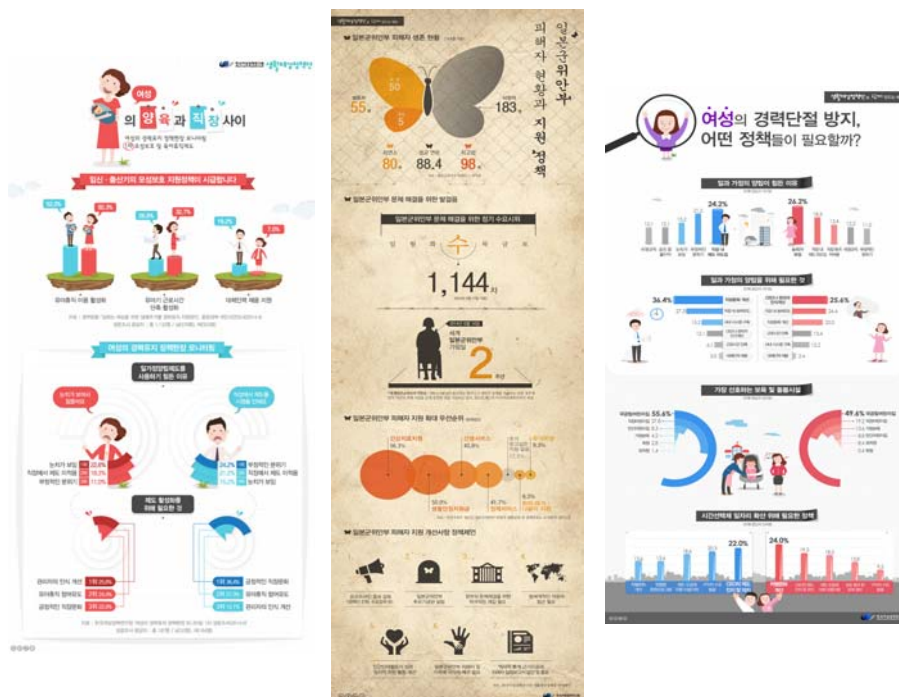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2일(금), 15:00-17:00, 본원 국제회의장
- 참가인원 : 약 80명
- 논의내용
  - 2014년도 5기 활동에 대한 분석한 결과 및 성과 보고와 생활체감정책단 5기를 맞이하여 향후 활동 운영을 위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정책단의 요구사항을 점검하였음.
- 최종보고회 소문내기 및 후기 이벤트 진행

홍보 및 활용

- 생활체감정책단의 제안 의견을 토대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오픈캐스

트 발행과 보도자료 배포

- 여성의 양육과 직장사이(인포그래픽)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과 지원 정책(인포그래픽)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방안은?(인포그래픽)
- 생활체감정책단 인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인포그래픽 / 2015.3. 보도예정)



[그림 Ⅲ-1-10] 인포그래픽 제작(1/2/3차)

○ 생활체감정책단 SNS 홍보 이벤트

- 생활체감정책단 만족도 조사
  - 11/11~12/14, 총 333명 참여
- 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구독 신청
  - 10/10~11/11, 총 560명 참여

[설문조사]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I):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 6/23~6/30, 총 197명 참여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지원금 등 직장  
에서 육아휴직제도 참여 유도(49명, 24.9%)’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에 대한 긍정적인 직장문화 개선(48명, 24.4%)’이 근소한 차이로 높은  
응답을 기록함.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II): 보육 및 돌봄
  - 8/8~8/24, 총 322명 참여
  -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시  
간제 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확충(127명, 39.4%)’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음. 이는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서 같은 결과를 보임.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III): 재취업 및 근로문화
  - 10/8~10/31, 총 334명 참여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  
직장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문화 개선(74명, 22.2%)’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음.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IV): 일·가정 양립
  - 11/7~11/30, 총 240명 참여
  -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제도 중 가장 시  
급한 것으로는 ‘다양한 근무형태의 확산(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98명, 40.8%)’로 남녀응답자 모두가 가장 높게 공감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사용을 수용하  
는 조직분위기 형성(75명, 31/3%)’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냄.



오픈캐스트 구독이벤트 앱	뉴스피드 노출(게시물 및 광고)
 <p>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b>“생활체감정책단”</b> 오픈캐스트 구독 이벤트</p> <p>오픈캐스트 구독하기 미션을 수행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스타벅스 커피를 드립니다.</p> <p><b>이벤트 기간</b> 2014. 10. 10 (금) ~ 11. 10 (월) <b>당첨자 발표</b> 2014. 11. 17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이스북 공지</p> <p><b>참·여·방·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 (앱에 로그인 후)</li> <li>2 캐스트 이야기 공간에 구독 인증 댓글 남기기</li> <li>3 이벤트 소문내기</li> </ol> <p><b>경·품·입·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상품권 5만원권 2명</li> <li>문화상품권 1만원권 10명</li> <li>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50명</li> </ul> <p><b>오픈캐스트 구독하기</b></p> <p><b>당첨 Tip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캐스트 “구독하기” 버튼 클릭(아래에 이미지 참고) 필수</li> <li>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구독완료 후, 캐스트 이야기 공간에 “구독했어요” 댓글 남기기</li> <li>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벤트 소문내기 등 참여를 내기</li> </ul>	 <p>한국여성정책연구원(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ponsored ·</p> <p>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구독하고 선물 받으세요! ☺</p> <p>✓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 <a href="http://bit.ly/KWDI_Opencast_event">http://bit.ly/KWDI_Opencast_event</a></p> <p>생활체감정책단 오픈캐스트 구독이벤트! 오픈캐스트 구독하고, 선물 받으세요~ KWDI_OPENCAST_EVENT</p> <p><b>썸네일</b></p> 

[그림 III-1-11] 오픈캐스트 구독이벤트

○ 생활체감정책단 뉴스레터 8회 발행



[그림 III-1-12] 주제생활체감정책단 뉴스레터 발행물(8차)

## 다. 성과 및 제언

주요 사회현안의 생활공감형 정책의제 발굴

- 생활체감정책단은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한 국민 서포터즈로서 사회현안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형 의식조사가 가능한 집단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생활체감정책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사회 현안 등으로 주목되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분야에 대해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자 8대 주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85건 이상으로 작년보다 1.5배 이상 참여가 증대됨으로써 정책단 운영이 점점 내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Ⅲ-1-1〉 생활체감정책단 5기 주제별 주요제안 의견

토론주제	주요의견
통일 (1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활발한 교류 필요</li> <li>-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 어려움 지적</li> <li>- 남북한 여성의제 관련 끊임없는 소통</li> <li>- 이탈주민 향한 인식 개선 필요</li> <li>- 이탈주민 위한 적응 지원책(일자리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필요</li> </ul>
안전 (8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정책 개선</li> <li>- 패트롤 제도와 부모자격증 필요</li> <li>-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필요</li> </ul>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6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제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필요</li> <li>- 현실과 제도, 법률 간의 괴리감 개선 필요</li> <li>- 사업체의 육아휴직 장려 필요</li> <li>- 2자녀 이상 세금 감면 혜택 및 복지 지원 필요</li> </ul>
양성평등 기본법 (7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에 대한 법적 강제성 발휘</li> <li>- 초중고 및 사업장에서 양성평등 교육 필요</li> <li>- 양성평등 우수기관이나 사업장에 혜택 제공</li> <li>- 성차별 사례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li> </ul>
보육 및 돌봄지원 (7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서비스 홍보 강화 및 서포터즈 운영</li> <li>- 돌봄 전문인력의 인성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li> <li>- 시간제 보육 인력 파견 서비스 도입</li> <li>- 보육 정책 관련 간담회 수시 개최</li> </ul>

토론주제	주요의견
일본군위안부 (9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역사관 재정립 및 역사교육 강화</li> <li>- 일본군위안부 추모기념관 설립</li> <l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에 국가적 예우</li> <li>- 역사적 통계 근거자료와 피해자 실태보고서 발간 및 홍보</li> <li>- 민간단체활동의 심리, 정서적 지원활동 개선</li> </ul>
재취업 및 근로문화 (10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활용 위한 기업 연계 직장 소양교육 지원</li> <li>- 산업 수용 고려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li> <li>- 재취업 도우미 웹사이트 개설 및 인력풀 확보</li> <li>- 기업 내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li> <li>- 근무현장 모니터링 및 환경 점검</li> <li>- 관련 정책 연구 및 홍보 강화</li> </ul>
올해 여성정책 이슈 (9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 의무 활성화</li> <li>- 고령임신 병원 진료 서비스 강화</li> <li>- 고령임신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li> <li>- 단축근무시간제도 및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li> </ul>

여성가족부의 현안사업인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운영

- 경력단절여성들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

- 공식 채널은 단위간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생활체감형 대안적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온라인 토론 외 SNS 이벤트(6회)를 통해 생활체감정책단 외 일반국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생활체감정책단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음.

5기 운영 평가 및 활동 만족도 조사 시행

- 5기 활동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5기 활동에 대한 만족 및 향후 활동에 대한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6기 운영에 반영하

고자 함.

생활체감정책단 공식 채널 활용 다각화

-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규 개설된 오픈캐스트와 기관 페이스북 내 이벤트앱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

정책단 특성에 따른 생활체감형 주제 선정 요구

-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의제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가 요구됨.

보상체계의 구체화

- 기존의 보상체계를 구체화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방글이나 근거 없는 허위글, 광고글 작성시에 따른 경고 조치 또는 회원등급 하향 조절이 요구됨.

정책 의제화 및 홍보

- 생활체감정책단이 제시한 정책 의견 및 제안을 분석하여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다면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국정과제 또는 시의성 높은 주제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를 향후 활동 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2. 여성정책 현안조사

### 가. 사업배경 및 목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 현안조사는 여성, 가족, 청소년정책 등의 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를 시의적절하게 이를 정책 의제화하고, 여성가족부 및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의 의제발굴을 기본 목적으로 함.

### 나. 사업내용 및 결과

2014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 1차 여성정책 현안조사

####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
- 조사 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 지역 : 15개 광역시도(제주제외)
- 유효 표본 : 1,147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E-mail 조사
- 자료 처리 및 분석 :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 조사 기간 : 2014. 01. 24 ~ 2014. 02. 02(약 9일)

〈표 Ⅲ-2-1〉 주요 설문 내용

주요 항목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경영확대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유연한 일자리 확대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여성 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여성 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여성 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보호자 자립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건강한 가정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건강한 가정 만들기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건강한 가정 만들기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건강한 가정 만들기 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주요 항목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원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정책 간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정책</li> </ul>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지역</li> <li>● 근로형태, 결혼상태, 배우자 취업상황, 자녀 유무</li> <li>●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 월 가구 소득</li> </ul>

## ○ 조사 결과

## 1)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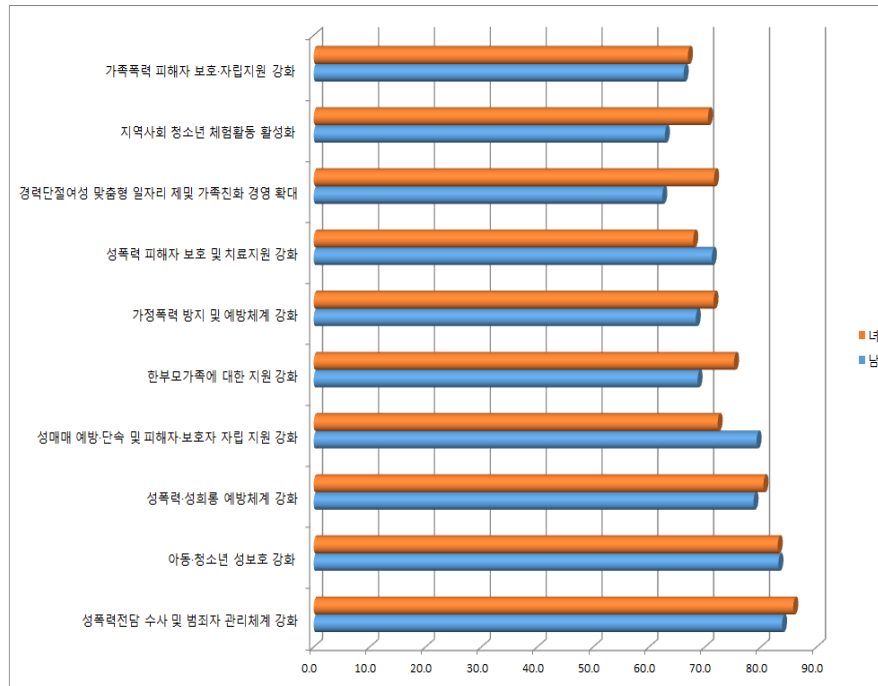
가) 가장 인지도가 큰 정책은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제 중 국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4.8%)’
-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79.6%)’, ‘성폭력·성희롱 예방 체계 강화(75.8%)’,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보호·자립 지원 강화(75.8%)’ 순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소관 6대 과제 중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관련한 정책은 모두 높은 인지도를 보임.

나) 남녀간 인지도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제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간 인지도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여성 71.7% > 남성 62.4%)’이고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여성 70.6% > 남성 62.9%)’,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인재 육성(여성 65.3% > 남성 57.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2-1]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세부정책 인지도 정도 (성별)

#### 다) 연령별 인지도

- 전체 연령층이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연령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세부정책 인지도 정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85.9%)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78.6%)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8.3%)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9.6%)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90.1%)
2위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0.4%)	아동·청소년성 보호강화 (77.3%)	아동·청소년성 보호강화 (86.9%)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87.6%)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81.4%)
3위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75.7%)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72.4%)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81.8%)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85.1%)	성매매예방· 단속및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75.0%)
4위	성매매예방· 단속및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73.4%)	성매매예방· 단속및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67.2%)	성매매예방· 단속및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79.3%)	성매매예방· 단속및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82.9%)	아동·청소년성 보호강화 (73.6%)
5위	지역사회청소년 체험활동활성화 (67.7%)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제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65.9%)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8.2%)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8.5%)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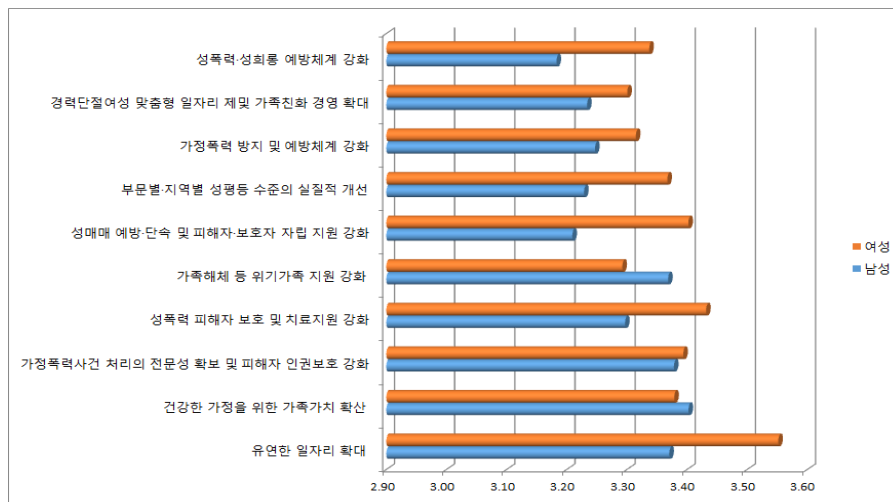
## 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가)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한 여성가족부 소관정책은 ‘유연한 일자리 확대’
- ‘유연한 일자리 확대’가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 소관정책 중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 꼽힘. 다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위기가족 지원강화(3.39)’,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강화(3.39)’,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3.36)’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일자리 확대(3.55)’,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3.43)’,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3.40)’의 평가가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의 경우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한 평가가 높음.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3.40)’,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3.37)', '유연한 일자리 확대(3.37)' 순으로 나타남.

나) 남녀간 정책평가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 강화'

-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가를 보인 정책은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여성: 3.40> 남성: 3.21)', '성폭력 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여성: 3.28>남성: 3.10)'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가를 보인 분야는 다문화가족 및 건강 가정 만들기 분야로 '다문화가족정착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남성:3.05>여성:2.90)',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남성:3.16> 여성 3.0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평가 정도 (성별)

3)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대한 중요도

가)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정책'

- 여성가족부 국정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

-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5)’, ‘성폭력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0)’를 꼽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남성 모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음. 연령대로 살펴볼 경우, 2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음(30대: 4.52, 40대: 4.60, 50대: 4.58). 20대의 경우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4)’를 60대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음.

〈표 III-2-3〉 연령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중요도 정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4.44)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4.52)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4.60)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4.58)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4.41)
2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4.42)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4.43)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4.47)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4.46)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4.40)
3위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4.42)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4.38)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4.40)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4.40)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4.36)
4위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4.28)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4.29)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4.34)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4.36)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4.24)
5위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4.25)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4.24)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강화 (4.29)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4.35)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4.19)

4) 합의

- 본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 정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정책평가, 정책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분야의 국정과제 중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가정과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남성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 성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에 차이를 보임.
  - 또한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0대 이상에서는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국민들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 중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세부정책에 대한 여성의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에 대한 남녀간 인지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모든 연령대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관련 세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다만,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여성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부문에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 셋째, 국민들은 ‘유연한 일자리 확대’를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 중 가장 잘 한 세부정책으로 평가함. 유연한 일자리 확대 정책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함. 다만, 여성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 성별로 차이를 보임.

-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른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여성고용율은 2000년 47.0%에서 2011년 48.1%로 1.1%포인트 증가하는 것에 그쳐 장기 정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일자리 확대 및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넷째, 세부정책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아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인권·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방지 등 기본적 인권·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평등기본법안’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여성의 인권·안전이 아직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할 것임.
- 여성들의 경우 여성일자리·인재분야의 경우 경력단절의 예방을 위한 각종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유연한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 가정의 양립제도 정착, 여성인재양성 등을 통한 유리천정 극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성대표성, 평등문화 증진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정책이 환경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반영할 때, 국민의 참여와 만족도에 따른 조정과 새로운 기획, 생애주기, 대상에 따른 통합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 2차 여성정책 현안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
- 조사 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 지역 : 15개 광역시도(제주제외)
- 유효 표본 : 1,132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E-mail 조사
- 자료 처리 및 분석 :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 조사 기간 : 2014. 04. 18 ~ 2014. 04. 23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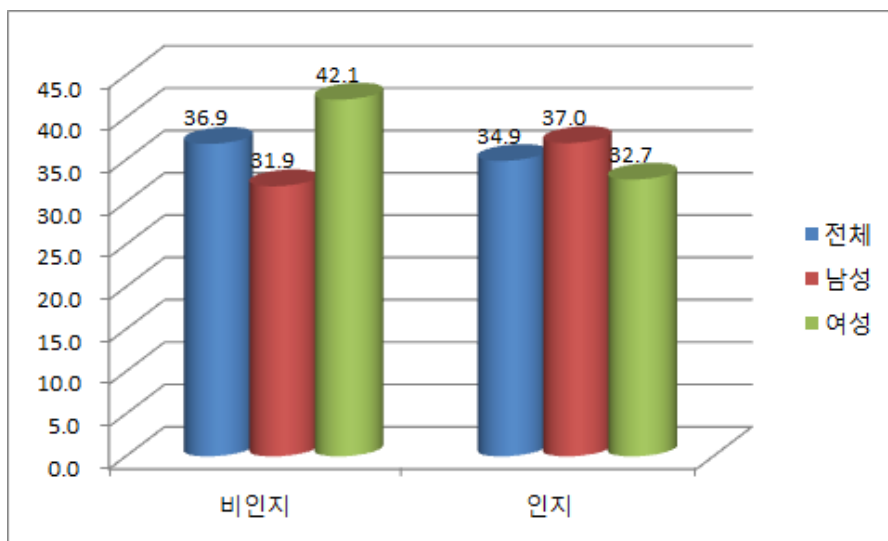
〈표 Ⅲ-2-4〉 주요 설문 내용

주요 항목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종합대책 인지도</li> </ul>
임신·출산기- 모성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정책 효과성</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 효과성</li> <li>●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정책 효과성</li> <li>● 임신·출산기 - 모성보호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li> </ul>
영유아·초등기 - 보육/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정책 효과성</li> <li>●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정책 효과성</li> <li>●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 효과성</li> <li>● 영유아·초등기 - 보육/돌봄지원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li> </ul>
재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 정책의 효과성</li> <li>●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li> <li>● 재취업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li> </ul>
고용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방식 개선 정책의 효과성</li> <li>●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li> <li>● 고용문화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li> </ul>
분야별 우선순위와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 단계별 가장 시급한 정책</li> <li>●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정책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li> <li>●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정책 모니터링 필요성</li> </ul>

○ 조사결과

1)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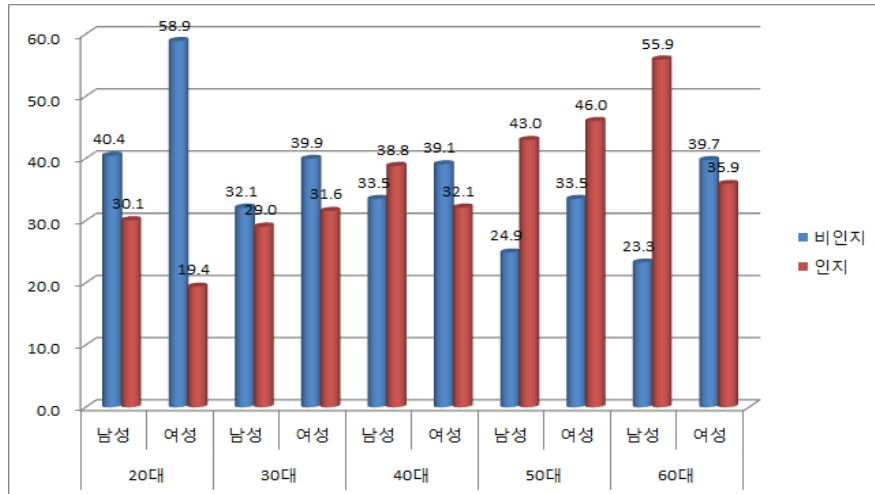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여성 32.7% < 남성 37.0%).



[그림 III-2-3] 종합대책에 대한 성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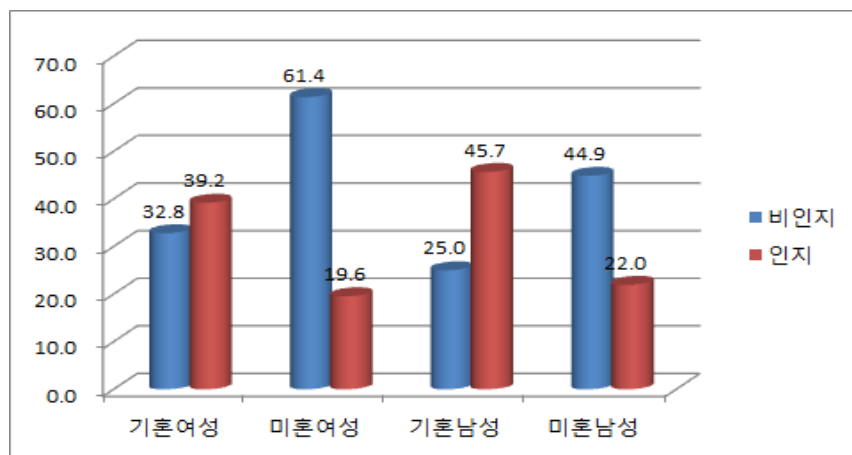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24.7%, 30대 30.3%, 40대 35.6%, 50대 44.4%, 60대 45.9%로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단, 남성의 경우 30대(29%)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 20대(19.4%)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2-4] 종합대책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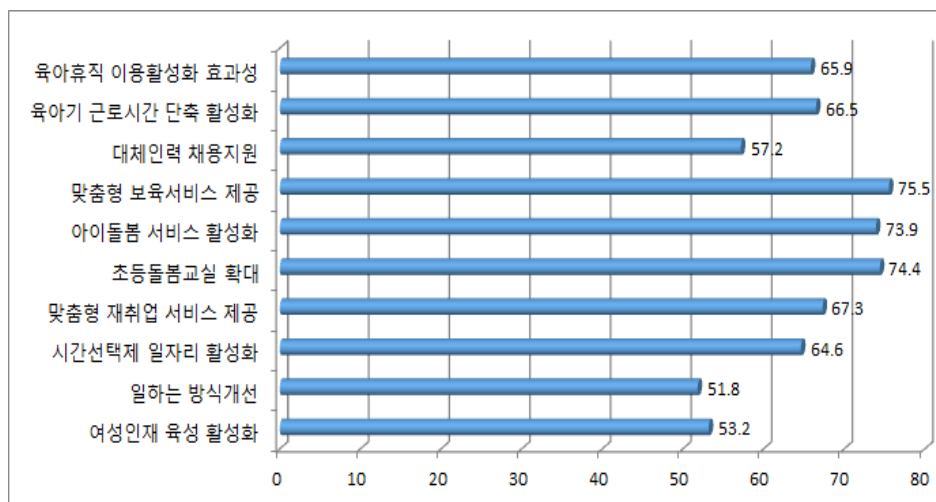
- 결혼상태에 따른 인지도는 기혼의 경우, 59.5%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은 28.4%만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19.6%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미혼 여성 19.6% < 기혼여성 39.2%).



[그림 Ⅲ-2-5] 종합대책에 대한 결혼상태별 인지도

## 2)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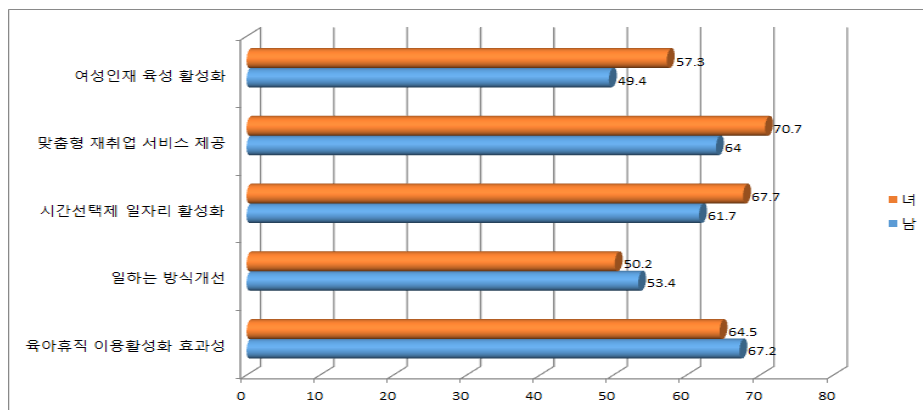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 중 가장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꼽힘.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대(74.4%)’,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73.9%)’ 순으로 나타남. 위 과제는 모두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의 주요 과제로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2-6]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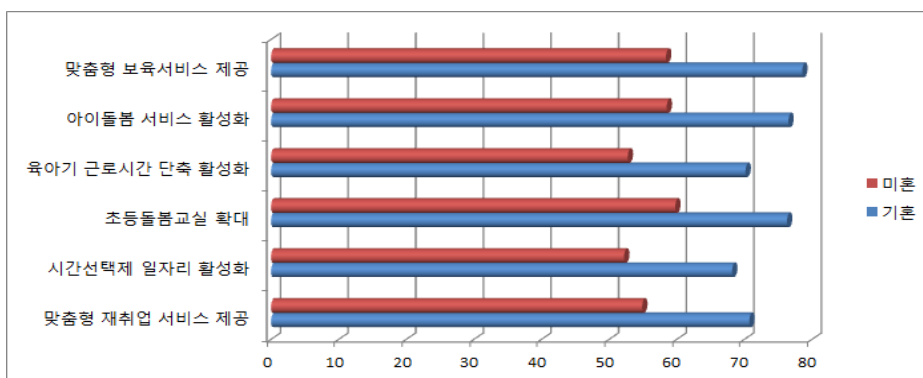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기대효과 평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 정책은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여성 57.3% > 남성 49.4%)’,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여성 70.7% > 남성 64%)’,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여성 67.7% > 남성 61.7%)’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 정책은 ‘일하는 방식 개선(여성 50.2% < 남성 53.4%)’,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여성 64.5% < 남성 6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여성 65.9% < 남성 67.1%)’로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2-7] 성별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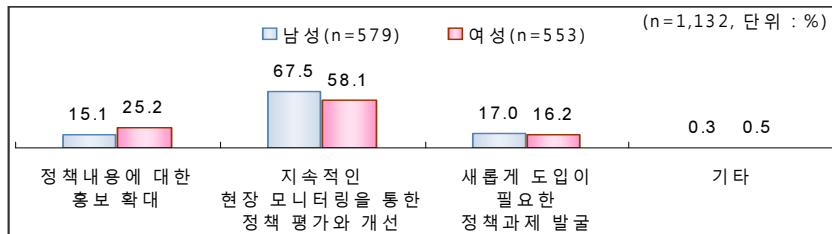
- 결혼상태에 따른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모든 주요 과제에 대해 높을 것으로 평가함.



[그림 III-2-8] 혼인 상태별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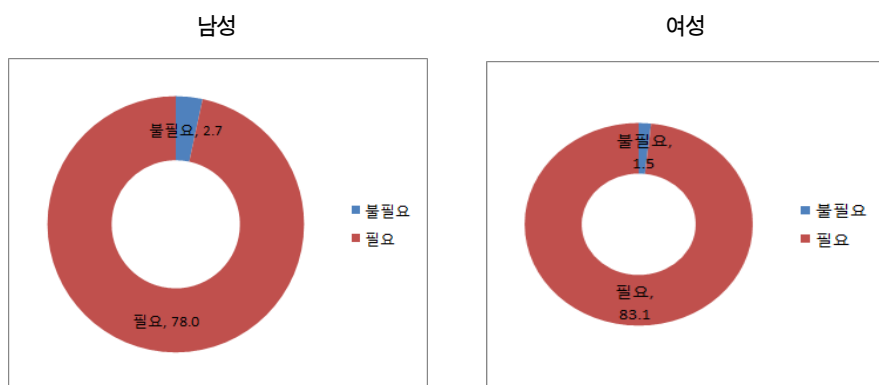
3) 국민체감형 정책을 위한 필요사항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이 실효성있는 국민 체감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평가와 개선’(63.0%)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정책내용에 대한 홍보 확대(20.0%),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16.6%),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2-9] 국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현장 모니터링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83.1%가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III-2-10] 현장 모니터링 점검의 필요성

4) 함의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방안의 기대효과와 필요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34.9%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한 홍보가 필요함.
- 둘째,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중 영유아·초등기의 보육 및 돌봄 정책에 관한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75.5%), ‘초등돌봄교실 확대’(74.4%),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73.9%) 과제는 모두 매우 높은 기대효과와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특히, 영유아·초등기의 보육 및 돌봄 정책에 대하여 50~60대의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는 혹은 양육 예정인 조부모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셋째, 남녀간 인식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정책으로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을 높게 평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일하는 방식 개선’,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생애주기별 추진과제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기혼이 미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모든 추진과제에 대하여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정책의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20%p가 넘는 차이를 보여 결혼상태에 따른 평가의 차이를 보임.
- 다섯째,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방안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평가와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이 일회성 정책

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유연한 제도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정책이 존재하여도 실제 현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위해는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국민생활안전 인식조사 : 3차 여성정책 현안조사

#####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여성·가족, 청소년의 안전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
- 조사 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 지역 : 15개 광역시도(제주제외)
- 유효 표본 : 1,141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E-mail 조사
- 자료 처리 및 분석 :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 조사 기간 : 2014. 10. 31 ~ 2014. 11. 07 (8일간)

〈표 III-2-5〉 주요 설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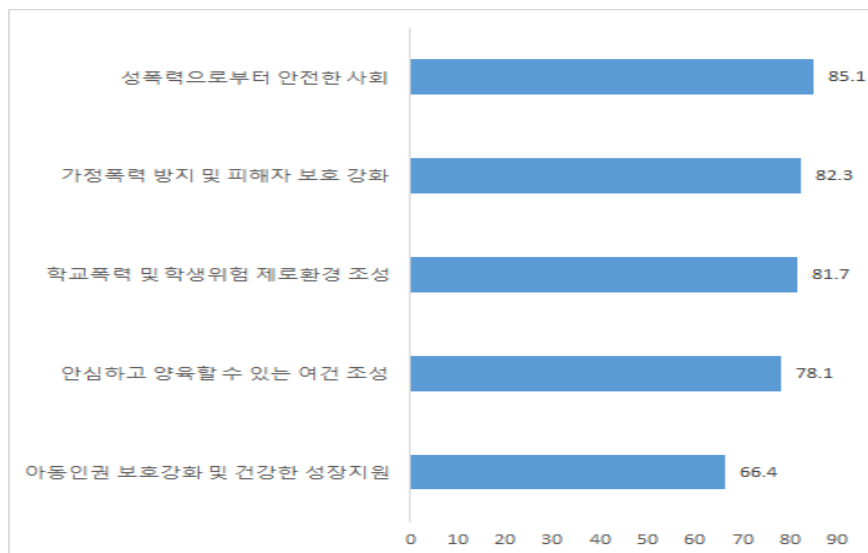
주요 항목	국민생활안전 인식조사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지역</li> <li>● 근로형태, 결혼상태, 배우자 취업상황, 자녀 유무</li> <li>●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 월 가구 소득</li> </ul>
국민안전 관련 정책 종합 인지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아동인권 보고강화 및 건전한 성장발달지원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국민안전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국민안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li> </ul>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보호자 자립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ul>

주요 항목	국민생활안전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책에서 미흡한 점과 건의 사항</li> </ul>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원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에서 미흡한 점과 건의 사항</li> </ul>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안전지역 지정 추진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학교 주변 학교 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정책에서 미흡한 점과 건의 사항</li> </ul>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드림스타트센터의 전국 확산 및 통합서비스지원 기능 확대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내실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보호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에서 미흡한 점과 건의 사항</li> </ul>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학교내 돌봄 기능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 체계 강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문화예술돌봄 및 교육 활성화 정책 인지도 및 추진 정책 평가</li> <li>●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관련 정책 중요도 평가</li> <li>●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지원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li> <li>●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지원 관련 필요 및 건의 사항</li> </ul>

○ 조사 결과

1) 국민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에 대하여 85.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임.
- 다음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82.3%,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환경 조성’ 81.7%,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78.1%,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 66.4%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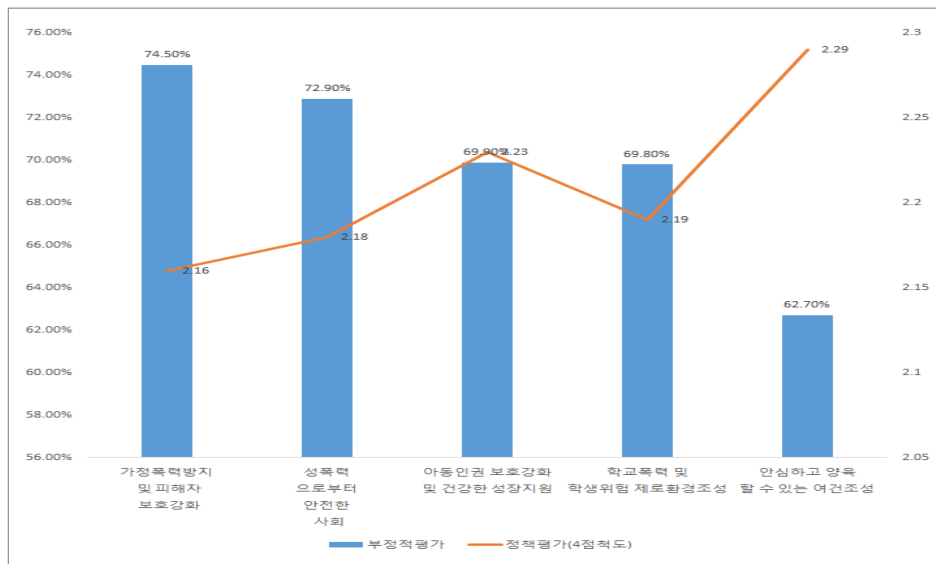
[그림 III-2-11] 국민안전 정책 관련 인지도

2) 국민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 국민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가 74.5%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72.9%로 다음으로 나타났음.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69.9%),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환경 조성’(69.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62.7%)의 순으로 나타남.



- 4점 척도로 평가 결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정책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29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4점 척도 결과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2.29),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2.23),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2.19),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2.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2.16)의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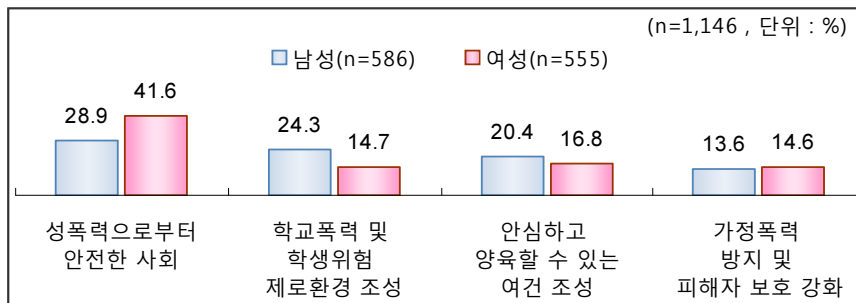


[그림 Ⅲ-2-12] 국민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3) 국민안전관련 정책의 중요도 평가

- 국민안전 관련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35.1%)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19.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18.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14.1%)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은 여성, 남성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특히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여성:

41.6%, 남성: 28.9%). 이는 우리사회가 성폭력에 대하여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고 국민,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높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임.



[그림 III-2-13] 국민안전 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 4) 함의

- 본 조사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대체로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조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장 잘 알고 있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역시 타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음.
  - 둘째, 안전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젊은 계층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음.
  - 셋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책의 중요성에 비하여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정

책의 중요도에 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하여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비하여 현실의 제도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의 적극적 환류 및 평가를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할 것임.

## 다. 성과와 제언

여성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여성, 가족, 청소년정책 등에 있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 일반 국민들의 여성 및 가족분야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과정에서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기여
-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다각화로 다양한 집단, 연령 층의 의견 수렴 필요

- 2013, 2014년 현안조사는 현안이슈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함. 추후 정책 수혜자 집단, 전문가 집단, 일반인 등의 조사 대상자 다각, 집단별 비교 등을 통해 심도깊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실질적 기초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는 온라인 조사방법을 조사 대상자에 따라 다각화함으로써 다양한 연령, 집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집단간의 ‘소통’을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음.

현안조사 결과의 활용 및 확대

- 현안이슈 선정,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및 분석, 분석결과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성 현안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대내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3.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 가. 사업목적 및 방법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국내외 주요 여성정책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언론에 비친 여성계 동향 및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정책의제 발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실제 여성정책 입안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생활정책체감단과의 연계 및 홈페이지 기사 탑재 등을 통해 대시민 정책홍보 및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방법

- 2014년도 동향분석 대상은 국정과제 중심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로 하였음. 해당 기간 국내외 여성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를 기본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빈도 및 비중을 분석함.
- 국제여성동향의 경우는 2014년 1월~11월 7일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국내여성동향에서 사용한 분류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빈도 및 비중분석을 실시함.

## 나. 주요 사업내용

### 국내 여성동향 분석

#### ○ 분석대상

- 2014년 1월부터 11월7일까지 다루어진 여성 관련 기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기관의 보도자료를 기본 분석대상으로 함(※일일동향 240건, 주간동향 55건 작성).

#### ○ 분류기준

-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제시된 여성관련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등을 기본틀로 하였으며 그 밖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여성 관련 총괄 정책 발표 사항 등은 ‘종합’으로, 대상별 세부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나 국정과제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여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국정과제 외’ 사항으로 별도 분류하였음.

#### ○ 여성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 현황

##### - 주제별 현황

- 2014년 대상 기간(1월~11월7일) 여성 관련 기사 및 보도 자료는 총 3,956건에 달함. 주제별 비중은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 외, 국민안전, 종합, 사회통합, 창조경제, 창의교육 순으로 나타남.

##### - 매체별 현황

- 기사의 출처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지가 2,457건(62.1%), 경제지가 775건(19.2%)을 차지하는 등 종합지와 경제지가 전체 매체의 81.3%를 차지함.

##### -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 2014년 1월~11월7일까지 여성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이 75건, ‘국민안전’ 관련이 24건, 노동복지 및 일본군위안부 등 ‘국정과제 외’ 법률안이 41건으로 나타남.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동향

- 2014년 1월~11월 7일까지 보도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는 총

858건이며 ‘맞춤형고용복지’ 관련 513건(59.8%), ‘종합’ 126건(14.7%), ‘국정과제 외 분야’ 107건(12.5%), ‘국민안전’ 관련 92건(10.7%), ‘사회통합’ 관련 10건(1.2%), ‘창의교육’ 관련 7건(0.8%), ‘창조경제’ 관련 3건(0.3%) 순으로 나타남.

#### 국제 여성동향 분석

##### ○ 분석대상

- 2014년 1월~11월7일까지 국제시사뉴스 웹사이트(UN NEWS CENTER, IRIN, EUROPEAN WOMEN'S LOBBY, INTER PRESS SERVICE ), 국제기구 웹사이트(UN WOMEN, UNFPA, UNAIDS, WORLD BANK, ILO )에 게재된 여성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를 기본 분석대상으로 함(※국제동향 25건 작성).

##### ○ 분류기준

- 여성보건, 여성권익보호,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 양성평등 증진 등 4가지 주제와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사 및 보도자료를 분류함.

##### ○ 주제별 현황

- 2014년 1월~11월 동안 여성관련 국제동향 기사 및 보도자료 총 건수는 137건이며<sup>6)</sup>, ‘여성권익보호’, ‘여성보건’, ‘양성평등 증진’,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 순으로 기사 및 보도자료의 비중이 높음.

##### ○ 출처별 현황

- 국제시사뉴스 웹사이트의 경우 UN NEWS CENTER가 35건(59%), EUROPEAN WOMEN'S LOBBY가 22건(37%), IRIN이 1건(2%)으로 나타남.
- 국제기구 웹사이트의 경우 UN WOMEN이 47건(60%), UNFPA가 27건(35%), UNAIDS가 2건(3%), WORLD BANK가 1건(1%), ILO가 1건(1%) 순으로 나타남.

##### ○ 지역별 현황

-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총 55건의 기사 및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에 대한 기사 및 보도자료가 20건(36%)으로 가장

6) 국제회의의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는 제외한 수치임.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주요 국제기구별 현황

- ‘UN WOMEN’의 경우, ‘여성보건’이 4건(9%), ‘여성권익보호’가 22건(47%),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가 9건(19%), ‘양성평등 증진’이 12건(26%)으로 나타남.

주목할 만한 이슈

-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동향이나 환경변화 등을 매주 하나의 이슈로 선정하여 적실성 높은 여성의제 및 실천과제 발굴 필요성 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며 총 36가지를 선정함.
- 2014년 국내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는 ‘경력단절 여성 대책 포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16) 마련’, ‘경력단절 전업주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령 가능’,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한부모가정 양육비 이행 확보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양성평등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4.5.2.) 및 시행(2015.7.1.)’, ‘여성 지방의원, 남성에 비해 의정실적 및 유권자 만족도 높아’, ‘청소년 90% 이상, 남녀 같은 권리 그러나 남자 청소년 38% 가 사는 아내가’, ‘국가공무원 절반이 여성, 그러나 관리직 비율은 10% 불과’, ‘사업장 대부분 여성고용환경 관련법 위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올해 중 도입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경찰대 여학생 선발비율 12% 제한은 성차별’,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 발표’ 등을 선정함.
- 국제적으로는 ‘미국 남녀 임금격차, 11월 중간선거 쟁점으로’, ‘정년 후에 도 오래 일하기 - OECD 국가 중 한국남성은 첫 번째, 한국여성은 두 번째’, ‘한국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15위, 성관련개발지수(GDI)는 85위’, ‘한국 남녀 임금격차 13년간 OECD 1위’, ‘한국, 기업 내 여성임원 비중 세계 최하위 수준’ 등을 선정함.

##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정책적 시사점

- 2014년은 정부의 여성관련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상정함. 올해는 경력단절여성, 노인여성, 한부모가족 여성 가구주 등 여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역량 제고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게 요구되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 본 사업은 이러한 여성관련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연구원 내외에 적실성 높은 정보를 전달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현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가 마련에 또한 주력하였음.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면서 성 평등 관련제도가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4.5.2.)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원내외에 문서로 배포하고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해 시민 대상 정책 홍보에 기여하였음.
- 한편, 국정과제 외 주제로서 '취약계층여성인권(장애여성인권/여성노인/일본군위안부/이주여성노동자인권/성적소수자인권/귀농여성/미혼모 등)', '여성건강', '노동복지', '평등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전체 동향기사의 21.4%를 차지함. 향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통합적·실질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국제부문에서는 OECD가 발표한 '한국 남녀 임금격차 수준'이 이슈가 되었으며 UNDP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및 성관련개발지수(GDI)', Credit Suisse에서 발표한 '한국의 기업 내 여성임원 비중 세계 최하위 수준'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음.

### 제언

- 여성관련 국내외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여 현재



-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종합지 등 기존 국내외 여성동향 파악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도매체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 세밀한 여성관련 변화 및 정책 요구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여성단체 자료, 국정감사 자료, 관련 기관 포럼 및 워크숍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한 함.
  - 특히 국외 자료의 경우 보도매체 대부분이 유엔 등 제3세계와 관련된 자료로서 선진 여성정책 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국정과제 중심으로 여성동향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있으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관련 기사도 많은 편이므로 분류기준 다양화가 필요함.
- 여성관련 국정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지라도 다른 국정과제 주제와 관련될 경우 분류기준을 확정하여 가능한 국정과제 내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재 분석한 국내외 동향은 연구원 내외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해 연구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여성동향 자료를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국내외 여성동향은 빅데이터 축적 및 활용에 큰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자문 등을 거쳐 다각적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IV

## 여성가족부 및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운영	103
2.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112
3. 여성현안포럼	116
4.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20

##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운영

### 가. 사업목적

전국 단위의 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효율화를 통한 성과 도출

맞춤형 단계별(조성-정착-확산) 컨설팅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발굴 및 전국적 확대

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컨설턴트-지자체/담당자 간 상호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 구현

###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1)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역할

컨설팅단 구성 원칙 및 절차

##### ○ 컨설팅단 구성 원칙

- 기존의 컨설팅단을 4개 광역권(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을 고려하여 전국 컨설팅단으로 재구성하되, 여성가족부 및 관계전문가의 협의와 시·도 여성정책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총 30명 내외 규모로 구성함.

##### ○ 컨설팅단 구성 절차

- 2013년 책임 컨설턴트(8명)에 의뢰, 권역별 컨설턴트 추진
  - 책임컨설턴트들에게 그동안의 활동 성과 및 헌신도, 향후 활동 전문성/역량 등을 감안하여 해당 권역별로 컨설턴트 추천토록 의뢰하여 추천받음.
- 시·도 여성정책 유관기관장에 의뢰, 컨설턴트 추천 받음
  - 지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센터 등의 전문성과 지역적 역량이 발휘되고, 중앙(여성연 및 여가부)과의 협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로 컨설턴트 추천토록 의뢰하여 추천받음.

- 여성가족부 관계자, 전문가, 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 컨설턴트 위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명의로 위촉

컨설팅 기간 및 대상

- 컨설팅 기간 : 2014년 5월-12월 초
- 컨설팅 대상 기관 : 50개 여성친화도시

〈표 IV-1-1〉 2014년도 50개 여성친화도시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서울시(4)	강남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충청북도(2)	청주시, 제천시
부산시(4)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충청남도(4)	당진군,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대구시(3)	중구, 달서구, 수성구	전라북도(3)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인천시(3)	중구, 부평구, 연수구	전라남도(2)	여수시, 장흥군
대전시(1)	서구	경상북도(4)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광주시(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상남도(3)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경기도(7)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제주도(1)	제주도
강원도(4)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좋은 여성친화도시, 50개 지역으로 확산”, 2014년 12월 2일.

컨설팅단 활동방향 및 운영체계

- 컨설팅단 활동방향 : 맞춤형 단계별(조성·정착·확산) 컨설팅 추진

〈표 IV-1-2〉 2014년도 컨설팅 방향

구분	컨설팅 방향
① 조성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1~2년차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함: 2012년 지정(9개), 2013년 지정(11개)</li> <li>-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개선방안 '지정요건 강화'에 맞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위상과 권한, 인력과 예산 및 타부서 협력 구조 강화</li> <li>·여성친화도시 조성 기간 중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 교육</li> </ul> </li> </ul>
②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3년차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함: 2011년 지정(20개)</li> <li>- 여성친화도시 개선방안 '지정도시 관리강화'에 부합할 수 있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미흡 기관 관리 강화: 컨설팅 피드백 및 개선계획 마련 권고</li> </ul> </li> <li>- 대표사업 발굴 초점: 타부서와의 과제발굴 공동워크샵,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토론회 등 활용</li> </ul>
③ 확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4년차 이상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함: 2010년 지정(8개), 2009년 지정(2개)</li> <li>·협약기간(5년) 만료 지자체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li> <li>-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개선방안 '사업유형별 모델 개발/보급' 부합 컨설팅</li> <li>-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희망사업 추진 가능 대표적 사업 발굴/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시도발전연구원의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할 '시도발전계획'에 여성친화도시 내용과 대표사업이 들어가도록 추진</li> </ul> </li> </ul>

- 권역/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매칭

〈표 IV-1-3〉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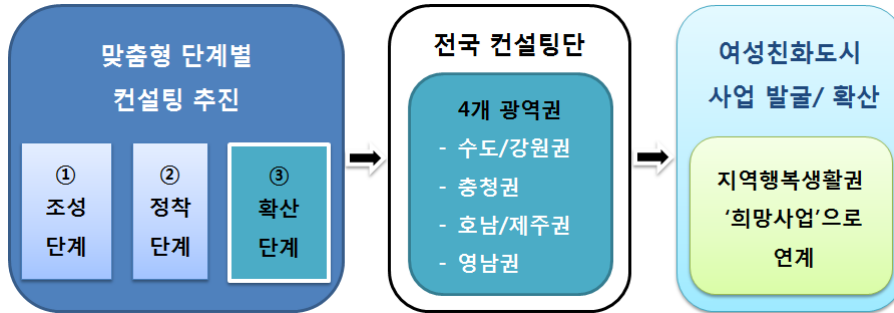
구분	컨설팅 방향
① 조성단계	<b>수도/강원권</b> : 서울(서대문, 마포), 경기도(의정부, 광명, 용인), 인천(연수), 강원도(영월, 원주) <b>충청권</b> : 충남(보령, 태안), 충북(제천), 대전(서) <b>호남/제주권</b> : 전북(남원) <b>영남권</b> : 부산(연제, 중, 남), 대구(수성), 경북(구미, 경산, 포항)
② 정착단계	<b>수도/강원권</b> : 서울(도봉), 경기도(안산, 안양), 인천(동, 부평), 강원도(동해) <b>충청권</b> : 충남(아산) <b>호남/제주권</b> : 광주(동, 서, 남, 북, 광산), 전북(김제), 전남(장흥), 제주 <b>영남권</b> : 부산(사상), 경북(영주), 경남(창원, 김해, 양산)
③ 확산단계	<b>수도/강원권</b> : 서울(강남), 경기도(수원, 시흥), 강원도(강릉) <b>충청권</b> : 충남(당진), 충북(청주) <b>호남/제주권</b> : 전북(익산), 전남(여수) <b>영남권</b> : 대구(중, 달서)

〈표 IV-1-4〉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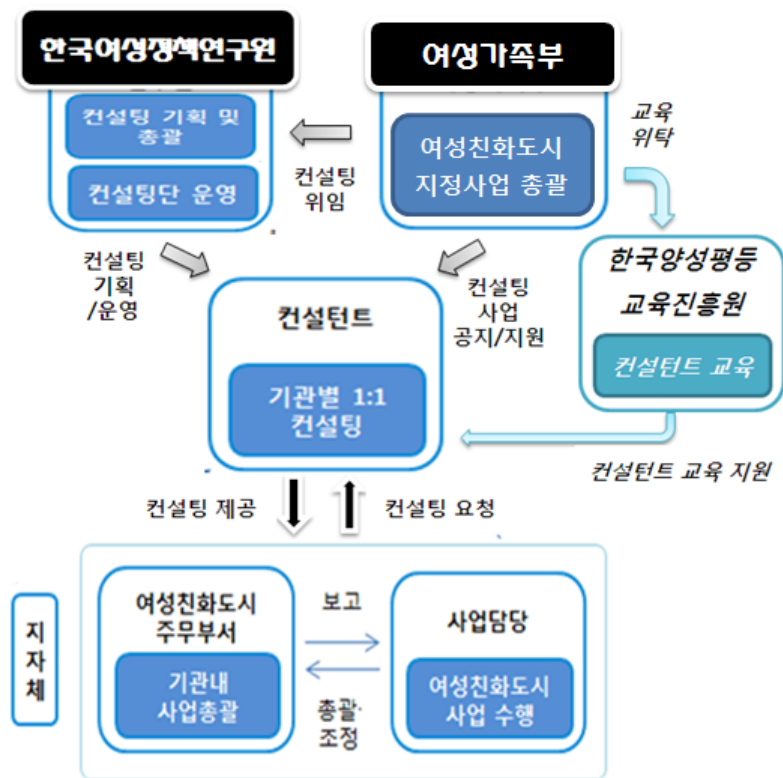
구분		① 조성 단계	② 정착 단계	③ 확산 단계
수도/ 강원권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도봉구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 시흥시
	인천	연수구	동구, 부평구	
	강원	영월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충청권	충남	보령시, 태안군	아산시	당진군
	충북	제천시		청주시
	대전	서구		
호남/ 제주권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
	전남		장흥시	여수시
	제주		제주도	
영남권	부산	연제구, 중구, 남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중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영주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 컨설팅 요청방법 및 절차

- 컨설턴트들의 기존 활동지역과 상관없이 해당 권역 내 여성친화도시 모든 지자체 컨설팅 가능
  - ① 지정도시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친화정책전략단)으로 컨설팅 요청
  - ②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 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
  - ③ 컨설팅 수행 후 ‘컨설팅 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④ 해당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비 지급



[그림 IV-1-1] 2014년 전국 컨설팅단 운영 체계



[그림 IV-1-2] 여성친화도시 운영 거버넌스 체계

## 2)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사업 주요 결과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 개최 결과

- 3차에 걸친 컨설턴트 워크숍 개요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V-1-5〉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개최 결과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논의내용
1차 워크숍	2014년 5월 9일(금) 14:00~16: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참석 인원 : 신한대학교 장정순 교수 등 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컨설팅단 주요 활동내용(맞춤형 단계별 컨설팅 논의)</li> <li>● 전국 컨설팅단 운영 거버넌스 체계 공유 및 논의</li> <li>● 컨설팅 요청방법 및 절차(안) 논의</li> <li>● 기타 안건(UN 공공서비스 상 신청 등) 논의</li> <li>● 향후 워크숍(공무원들과의 공동워크숍 포함) 및 기타 일정 논의</li> </ul>
2차 워크숍	2014년 8월 27일(수) 10:00~16:00 포스트타워(명동 소재) 대회의실 (참석 인원 : 지정도시 담당자 및 컨설턴트 등 총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사업사례 발표 및 강평</li> <li>●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소개 및 사례 소개</li> <li>● 권역별 발전방향 워크숍(4개 권역별 담당공무원 및 컨설턴트의 만남 등)</li> </ul>
3차 워크숍	2014년 11월 14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하 1층 대회의실 (참석 인원 : 컨설턴트 및 연구원 담당자 등 2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컨설팅단 2014년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유</li> <li>● 컨설팅 세부사안 사례 공유</li> <li>● 2015년 전국 컨설팅단 운영 체계 제언 및 컨설팅 방향 논의</li> </ul>

2014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 및 평가

- 12월 18일 현재까지 총 93건의 컨설팅이 완료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가 컨설팅 단계에 따라 제출한 컨설팅 일지를 분석하여 정리한 2014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는 다음과 같음(분석은 2014년 11월 20일 기준 44건 대상으로 함).



〈표 IV-1-6〉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

구분	내용
컨설팅 활동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44건의 컨설팅이 완료되었음</li> <li>- 여성친화도시 단계별로 분류 시 조성단계 컨설팅이 23건(52.3%), 정착단계 컨설팅이 12건(27.3%), 확산단계 컨설팅이 9건(20.5%)으로 나타나 조성단계 컨설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li> <li>- 권역별로는 살펴보면 영남권 컨설팅이 15건(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강원권 컨설팅이 12건(27.3%), 호남/제주권 컨설팅이 11건(25.0%), 충청권 컨설팅이 6건(13.6%) 순으로 나타남</li> <li>·영남권 컨설팅은 총 15건(대구시 중구 2건 구미시 2건, 포항시 3건, 부산시 사상구 3건, 부산시 남구 1건, 부산시 중구 2건, 부산시 연제구 1건)으로 나타남</li> <li>·수도/강원권 컨설팅이 12건(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도봉구 2건,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용인,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정부시 4건)으로 나타남</li> <li>·호남/제주권 컨설팅은 총 11건(전남 여수시 3건, 광주시 4건(북구/광산구), 김제시 1건, 남원시 1건, 익산시 1건, 장흥군 1건)으로 나타남</li> <li>·충청권 컨설팅은 총 6건(대전시 서구 4건, 충남 태안)으로 나타남</li> </ul>
컨설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분야는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조직, 계획, 교육 등)이 18건(40.9%), 사업활성화(마을협동조합 구성/운영 등)가 18건(40.9%), 민관협력(서포터즈단 활동, 온라인카페)이 7건(15.9%), 추진성과(제도/사업, 성인직적 개선)가 1건(2.3%)으로 나타남</li> <li>- 특히 여성친화도시 단계별로 재분류 시 조성단계 도시들에서는 성평등 정책추진기반이 39.1%, 사업활성화가 39.1%, 민관협력이 17.4%, 추진성과가 4.3%를 차지함</li> <li>- 정착단계 도시들에서는 성평등 정책추진기반이 41.7%, 사업활성화가 33.3%, 민관협력이 25.0%를 차지함</li> <li>- 확산단계 도시들에서는 성평등 정책추진기반이 44.4%, 사업활성화가 55.6%로 나타남</li> <li>- 전체적으로 성평등 정책추진기반과 사업활성화에 대한 컨설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li> </ul>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선정 및 공모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관련, 서포터즈단 활성화 및 모니터링단 등 시민참여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방안,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이 다수를 차지함</li> </ul>
컨설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방법은 전체적으로 대면이 가장 많았으며 대면/이메일, 대면/전화, 전화/이메일 등의 방법들도 많이 사용됨</li> </ul>
컨설팅 반영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44건 중 32건(72.7%)이 컨설팅 반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22.7%)은 컨설팅 반영 정도가 보통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2건(4.5%)은 컨설팅 내용이 사업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li> </ul>

##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정책적 시사점

-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가 도시 공간을 만드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을 재점검할 수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정책·사업전반의 여성친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사업별 과제발굴 지원, 지역 특화과제 발굴 및 시행, 여성친화도시지정을 준비하는 신규지역 준비과정 자문 등을 바탕으로 지역 담당자의 네트워크 확대, 여성친화적 관점 고려, 관련 교육 실시, 여성친화도시조성 관심 고조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공무원과 시민 대상으로 여성친화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 주류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관련 협의체 및 서포터즈 등을 구성하여 지역여성정책 개입의 개기를 마련하였음.

### 제언

- 2014년은 컨설턴트 운영 방식이 지역 중심에서 중앙에 전국단위의 전문 컨설턴트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컨설턴트가 관련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컨설팅의 지속성과 심화를 위해서는 사업단과 컨설턴트,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완방법이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로 관련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무원 성 인지력 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 실천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민간여성단체와의 유기적 소통, 토론, 정책 피드백,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하며 시민 및 시민사회로부터의 정책 요구를 발굴, 수렴하고 민

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함.

- 권역별 컨설턴트들과 더불어 자문위원 전문가들(도시계획, 건축 등)과의 공동/협력 컨설팅 증진이 필요하며 여성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사업 컨설팅 및 개선 등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영역 확대가 필요함.
- 2014년도 컨설팅 미활용 지정도시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활용이 요청되어야 하며 조성단계 지정도시 뿐만 아니라 정착 및 확산단계 지정 도시들에서의 사업성과 및 대표사업 발굴/확산을 위한 컨설팅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일반시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참여 독려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 등 실시를 통해 지역 구성원의 여성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성인지성 확보가 필요함.

## 2.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 가. 사업목적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황 및 성과 공유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 교류

여성친화도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실적

- 2014년 하반기 9월부터 총 2회, 전라북도 익산시(9차)와 경기도 시흥시(10차)에서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및 지역 여성정책연구 관련 기관 주최
  - 9차 포럼: 예산집행방식 변경, 위탁 ⇨ 본원 예산 집행
  - 10차 포럼: 기존 방식대로 위탁과제로 지역 기관에서 예산 집행

주요 내용

- 2014년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개요 및 주요내용

〈표 IV-2-1〉 9차-10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결과

회차/ 구분	해당 지자체	주요안건	장소	일시
9차	전북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1 : 안전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방안</li> <li>- 주제2 : 지역행복생활권과 익산시 여성일자리</li> <li>- 주제3 : 돌봄, 생활속의 협동 : 교육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사례</li> <li>-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복지를 의미하며 일상생활 속의 도시공간, 짜투리공간, 틈새공간을 여성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다루어짐</li> <li>- 전북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일·가정 양립지원사업이나 현대 의상 제작기능인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북과 익산지역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나 섬유패션인큐베이터구축공간 등 활용 가능한 기반을 통해 여성일자리 연계가 가능함을 논의함</li> <li>- 교육활동에 관심 있는 전북하늘소마을 주민과 교육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모여 2013년 2월 초록누리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장수군 최초 협동조합인 초록누리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함 등을 발표함</li> </ul>	익산 부송 도서관	2014. 10.17.
10차	경기도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1 : 시흥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과 성과</li> <li>- 주제2 : 시흥 여성친화도시 4년간의 민관 협력사업과 성공사례</li> <li>- 주제3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의 성과와 발전방향</li> <li>-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는 시민의 참여이므로 추진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최우선에 놓고 방향을 모색해야 함. 시흥시 여성친화도시는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울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며 시민이 운동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총체적인 체계가 가동된다면 여성친화도시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적 측면을 강화하고 협의체 및 시민참여부분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를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통괄적인 방식으로 부서를 아우르며 협력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li> <li>- 또한 대표사업 이외에도 2017년까지 성평등 목표영역별로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점검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함</li> <li>- 시흥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기반구축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자원발굴과 홍보,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함</li> </ul>	시흥 시청 글로벌 센터	2014. 12.3 (수)

##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정책적 시사점

- 여성친화도시 포럼은 지자체와 지역민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정립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음.
- 올해 포럼 운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5대 목표영역 중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제외한 4개 목표영역의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정함.
- 포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여성 일자리 연계 및 돌봄서비스 운영 방안 등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여성친화도시와 지역행복생활권(지역발전 5개년 계획) 연계를 통해 지자체 ‘시도별 지역발전계획’ 수립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지역 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성공사업과 참여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함.
-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의 추진성과 및 지역사회 현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의 장이 되었음.

### 제언

- 포럼에서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과 성과 및 그동안의 민관 협력사업과 성공사례를 공유한 점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각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함.
- 그러나 포럼에서 다루어진 여성친화사업은 지역적인 공간사업 위주인 것이 많으며 독자적 예산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원 사업 등과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부처의 사업과도 연계 필요

- 지속적인 부서 간 협업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여성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사업 컨설팅 및 개선 등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영역 확대가 필요함.
  - 여성친화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 부서 간 협력체계 운영 강화가 매우 필요하여 민간여성단체와의 유기적 소통, 토론, 정책 피드백,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함.
-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며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성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여성현안포럼

#### 가. 사업목적

국정과제에의 여성의제 통합, 여성정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여성계의 주요 현안 등 필요에 따라 적시에 유효적절한 의견을 모으고 동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함.

정부부처 및 정책관련자들에게 정책 수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국정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여성현안 포럼 개최 실적

- 2014년 5월 제1차(누적차수 3차) 여성현안포럼 개최
- 2014년 7월 제2차(누적차수 4차) 여성현안포럼 개최

주요 내용: 3차-4차 여성현안포럼 개최 총괄 현황



〈표 IV-3-1〉 3차-4차 여성현안 포럼 개최 개요 및 주요내용

회차/ 구분	주제	개요	장소	일시
3차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 역할 증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1. 여성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현황 및 정책과제</li> <li>- 주제2. 주민자치 공동체 참여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li> <li>- 주제3. 주민자치 실질화와 여성 역할</li> <li>-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치는 남녀동등하게 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주민의 뜻을 반영한 결과의 적합성이 높게 발현될 것이라 사료됨. 이에 따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짐.</li> <li>- 지역 생활 공간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도 여성은 아직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li> <li>- 동시에, 현재의 논의가 대도시 중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논의는 지역편차를 줄이고, 지역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좀 더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이루어짐.</li> </ul>	한국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	2014 5.21
4차	한국 여성정치 교육 이대로 좋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1.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li> <li>- 주제2.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li> <li>- 주제3. 한국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li> <li>- 여성정치참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생활정치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의 현상을 극복할 하나의 방안임. 이를 위해서 여성정치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정치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짐.</li> <li>- 한국 여성정치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지속성 문제와 자금문제 그리고 내용의 심화 및 특화 등에 대한 방안 논의됨.</li> <li>- 현재 여성정치인들이 젠더적 시각보다 정당정치에 더 초점을 두으로써 조직화된 여성정치인의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더불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치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정말 실현시킬 수 있는 각 단위 별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토론이 이어짐.</li> </ul>	한국 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2014. 7.9

2014년도 3차 여성현안 포럼

〈표 IV-3-2〉 제3차 여성현안 포럼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사회 : 허태욱(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15-14:30	▶ 등록
14:30-14:45	▶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li> <li>● 환영사 : 이연숙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li> </ul>
14:45-15:00	▶ 기초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 실질화란 무엇인가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li> </ul>
15:00-16:00	좌장 : 이연숙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1 : 여성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현황 및 정책과제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 주제 2 : 주민자치 공동체 참여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이상경(한국여학사협회 회장)</li> <li>● 주제 3 : 주민자치 실질화와 여성 역할 전은경(서울 디지털문화예술대 교수)</li> </ul>
16:00-16:50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li> <li>● 나순희(전북 주민자치회 공동회장)</li> <li>● 엄일렬(서정대 행정학과 교수)</li> <li>● 김균미(서울신문사 편집국 부국장)</li> </ul>
16:5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2014년도 제4차 여성현안 포럼

〈표 IV-3-3〉 제4차 여성현안 포럼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30-14:40	▶ 등록
14:40-14:50	사회 :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li> <li>• 축 사 :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 위원장</li> <li>• 환영사 : 김현자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li> </ul>
14:50-16:50	좌장 : 김영재(한국정치학회 회장/ 청주대학교 교수)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1 :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li> <li>• 주제 2 :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li> <li>• 주제 3 : 한국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li> </ul>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li> <li>•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li> <li>• 주선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li> <li>• 이춘규(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li> <li>• 류지영(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li> <li>• 이연주(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li> <li>•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li> </ul>
16:5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다. 성과 및 제언

여성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

- 주민자치 및 여성정치인 육성에 대한 논의로 여성의 기여,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함.

지속적인 정책과정의 참여로 여성의제를 통합하도록 노력

- 일회적인 포럼 개최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가도록 향후 이에 부속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함.

## 4.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2014년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함(기획재정부, 2014)<sup>7)</sup>.

- 여성의 생애주기별(임신·출산 → 영유아 → 초·중·고)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선과제 마련.
- 여성 노동 전반에 걸친 논의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함.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을 추진하고자 함.

- 국민들에게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실제 정책현장에서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모니터링을 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함.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추진방법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16개 지역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모니터링과 각 기관이 추천한 모니터링 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원화 함.
- 오프라인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전국 16개<sup>8)</sup> 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정책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선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진행함.
  - 15개 지역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음.

7)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8) 충북지역은 2차 모니터링 이후 기관내부 사정에 의해 중단함.

〈표 IV-4-1〉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책임기관 현황

구 분		모니터링 책임기관
중 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 역	서 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 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대 구	대구여성가족재단
	인 천	인천여성가족재단
	광 주	광주여성재단
	대 전	배재대학교
	울 산	울산발전연구원
	경 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강 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충 남	선문대학교
	전 북	전북발전연구원
	전 남	전남여성플라자
	경 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 남	경남새로일하기지원본부
	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은 15개 지역연구기관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전달 및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관한 양식을 전달하고,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취합함.

○ 오프라인 모니터링단 운영방법

- (구성) 모니터링 주제를 고려하여 지역별 최소 6명 이상(연구책임자 포함)으로 구성
- (운영) 사전조사 → 현장 모니터링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전문가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작성
  - ① (사전조사) 지역별 해당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연구자료 및 각 지역단위 현황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정책모니

터링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설정함.

② (현장 모니터링) 현장 관계자 심층인터뷰(FGI),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의제 발굴.

- 지역 내에서 근로자의 정책 활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접하는 단체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대표적이면서 빈번한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함.

③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정책사례 및 개선사항, 성공사례 등 발굴

④ (최종보고서 작성) 각 주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말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 ○ 온라인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구성) 지역 모니터링 책임기관은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상담원·기업 관계자 등 온라인 모니터링 단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고, 중앙 모니터링 단에서 총괄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구성·운영함.

- (운영) 온라인 모니터링단원은 생활체감정책단 커뮤니티(<http://cafe.naver.com/vivakwdi>)에 가입하고, 모니터링단 게시판에서 의견개진 등의 활동을 함.

#### 모니터링 실시 정책영역 및 시기

〈표 IV-4-2〉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정책영역별 주요 과제

구 분	정책영역	주요 모니터링 과제	시기
1차, 4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출산전후 휴가 사용	5~6월 11월 (2회)
		육아휴직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대체인력채용 활용	

구 분	정책영역	주요 모니터링 과제	시기
2차	보육 및 돌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7~8월
		아이 돌봄·초등돌봄교실 등 돌봄 서비스	
3차	재취업 및 근로문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서비스	9~10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나. 주요 사업결과

### 오프라인 지역 모니터링 결과

#### [ 부산 ]

##### ○ 근로자 측면

- 부산지역은 서비스직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여성 비중이 높아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음.
-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홍보·감독 해야함.
-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더불어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 사업장 측면

- 영세기업과 대기업/공공기관 간 모성보호제도 활용에서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해소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 보급 및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등 제도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함. 특히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홍보할 필요 있음.

○ 지자체 단위의 전달체계 구축 필요함

-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정책은 고용노동청의 업무로 인식되어 지자체 자체 정책이 부족함. 지자체 단위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정보 전달과 정책의 지원이 필요함.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컨설팅사업 기반이 지역에도 마련되어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전달체계가 필요함.

○ 홍보 강화

- 신규 정부정책을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안내문, 메일, 공문을 통해 배포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전달체계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고객에게 통합적인 정보제공이 안됨. 전반적인 수행기관을 총망라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박람회 개최를 제안함.

○ 모니터링 성과 및 개선사항

- 성과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과 현황을 지역별로 조사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생산되었음
- 개선사항 : 모니터링 지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의 실시가 요구됨. 모니터링 규모를 확대하여 조사 뿐 아니라 홍보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함.

[ 대구 ]

- 모니터링은 1차(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제도), 2차(보육 및 돌봄 지원), 3차(재취업 및 근로문화), 4차(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차수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지역현황 진단 및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지역의 사업체는 총 192,600개로 5인 미만 사업체가 84.8%, 20인 미만이 97.2%임. 300인 이상 사업체는 0.1%에 불과함. 소규모 중소영세사업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제도 활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도 이해가 부족하며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지역은 평균 임금이 낮은 상태에 있으며 제도(육아휴직, 근로단축 등)를 활용할 경우 수입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 지역에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음. 그 원인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다수인 지역 환경,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여성의 낮은 자존감(주변의 눈치 등), 기업주와 남성들의 인식 부족 및 편견, 중앙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혼란, 지원규모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며, 제도 이용이 기업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업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분야별·지역별 대체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통로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남성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 평등한 사회문화 환경을 확산(기업체, 학교 교육 등)시킬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일자리와 영세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지원 강화를 통해 정부의 실천의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함. 중앙과 지방의 정책 중복(가족친화인증, 일가양득기

업, 일하기 좋은 기업, 여성친화기업, 출산장려기업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이해관계를 떠나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는 통합·개혁이 요구됨.

- 또한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변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정책 수립 전에 사전조사 및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도입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주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적용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제도의 이행여부 점검은 업무(사무직, 생산직 등), 성별, 연령별 그리고 기업체 규모 등에 따라 활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단기간에 각종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닌 연도별·영역별 모니터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시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진단과 개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인천 ]

##### ○ 1차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 공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비교적 쉽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제도의 취업규칙 명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비정규직 계속 고용 지원

금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임신·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음.
- 정책적 대안
  - 사회적인 인식 개선
  - 노동관련 제반 환경 마련
  - 대체인력 채용 pool 구축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방법 개선
  -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 사업주의 세제혜택 부여
  -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의무화 고려

○ 2차 : 보육 및 돌봄 지원

- 시간제 보육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요구
-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표준화되거나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학부모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영아종일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 강화와 이용에 있어 취업모를 우선순위로 제공함.
-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 지역 내 보육·돌봄 협의체 구성
- 정책적 대안
  - 상업적이지 않은 공적인 보육·돌봄 정보 서비스 제공
  - 시설유형보다 양질의 보육기관 확충
  - 보육교사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 주거지역, 부모, 돌봄 제공자간의 지속적인 돌봄 네트워크 형성

○ 3차 : 재취업 및 근로문화

- 공공고용서비스 이용률 극히 저조하며, 제공시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재취업 관련 교육이 취업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함.
- 지역 내 산업체 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요구.
- 스마트워크 센터 활용의 경우 업무특성에 따른 제한성 존재.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 및 회사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됨.
- 정책적 대안
  - 취업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map’ 온/오프라인 제공
  -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홍보방식 실행
  - 여성가족부의 전략적인 새일센터 홍보 강화
  - 직업훈련 교육의 지속적인 개발과 방법상의 다양화
  - 교육시간과 기간에 대한 자율화
    - : 일률적인 교육시간(80, 120, 240시간)으로 1일 4시간 기준이 아니라 교과목, 대상, 기간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었으면 함.

○ 4차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제도는 현재 자연스러운 권리로 인식되어 직장에서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는 아직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되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설령 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도 언론에서 ‘아빠의 달’로 홍보 하여, 실제로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임에도 남성근로자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
- 소득보존이 어려운 육아휴직 급여

-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제도에 대해 대다수가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음. 이는 정규직인 경우 본인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함.
-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기업과 갈등이 있어 해결이 되더라도 차후 복직 또는 타 기업 취업 시 어려움이 있음.
- 임신한 여성근로자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비교적 홍보가 잘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
- 정책적 대안
  -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제도가 평가요소로 포함되면서 조직 내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음. 새로 시행되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근로제의 경우에도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인사평가 시 불이익 최소화.
  -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 업무 분담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확대.
  - 제도 시행의 의무화 또는 기업 지원 강화.
  -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관련된 업무처리의 간소화와 고용노동부의 전담 인력 배치.
  - 기업 지원금 신설.
  - 육아기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근로시간 단 축제를 사용하기 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 일·가정양립을 위해 일하는 엄마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체계 확대.

-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하는 여성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도록 함.

[ 광주 ]

○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

- 모니터링 내용 : 출산전후휴가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모성보호제도 모니터링 내용 및 정책개선 방안

- 모니터링 내용 : 남녀의 임금격차, 육아휴직 시 낮은 임금보전액, 사회문화적 고정관념(남성=일/여성=양육), 기업 내 승진 및 배치에서의 불이익, 상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서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함. 광주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세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이 낮음.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여성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고용조건임. 즉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우려가 가장 큰데, 가계 주 소득원은 남성이고, 여성근로자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현실이 큰 문제임
- 육아휴직제도 정책개선 방안 : 2014.10월 이후 ‘아빠의 달’ 시행과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가 1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되지만, 이에 대한 근로자의 반응은 회의적임. 남성·여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서 육아휴직기의 임금보전액을 현실화시켜야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 모니터링 내용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너무 많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내고 대체인력을 14일 동안 구하지 못했을 때나, 업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불허해도 된다고 나옴. 따라서 현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광주지역의 경우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사업체, 직종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정책개선 방안 : 근로자·사업주의 인식을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이 필요함. 그리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직종별·지위별·규모별·업종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제도

-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제도 모니터링 내용 : 업무특성에 맞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해당 인력을 구하더라도 채용기간이 짧거나 다시 해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려함. 민간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여성 집중 사업장일수록 대체인력 확보문제가 큰 문제임. 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 대체인력 채용의 직접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간접비용의 부담이 생기므로 비용지원이 필요함.
-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제도 정책개선 방안 : 광주지역에서는 2015년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체인력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따라서 대체인력 충원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DB 구축 및 대체인력 알선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현실성 확보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100% 지원, 확대해야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확대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모니터링 내용 : 비정규직 여성들이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파견,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 여성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

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정책개선 방안 :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확대해야 하며 비정규직 여성의 지속고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액수도 현실화해야 함.

○ 보육 및 돌봄 지원 :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광주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수는 적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충원율(78.9%) 또한 평균 충원율(82.0%)을 밑돌고 있음. 따라서 광주지역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광주시 직영 보육시설’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및 보육의 질, 제도 :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12시간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가에 위치한 보육시설은 오후 3시가 넘으면 1차적으로 하원 하는 영유아들이 대다수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교사 근무시간과 시설 운영시간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인증제도 개선 :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준비를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력파견을 검토해야 함.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육아’나 ‘마을돌봄품앗이’ 등 자발적 육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안

- 모든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 :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정, 일반가정의 아동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합형태(유료이용 아동과 무료이용 아동이 혼합되는 형태)로의 운영이 필요함.
- 취업여성의 돌봄 서비스 확대 : 보편적 서비스와 배치되는 않는 범위 내



에서 취업여성의 보육 및 돌봄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함.

- 돌봄 프로그램의 질 향상 : 돌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 정기적인 사업 결과 분석·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함.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및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종사자 자격기준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격기준의 차이를 줄이고, 높여나갈 방안이 필요함. 돌봄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함.

○ 재취업 및 근로문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

- 새일 센터의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확대해야 함.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직업훈련도 필요하지만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자신감 고취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취업교육과 취업을 직접 연결시켜 취업성공률을 높여야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

-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유연근무제, 요일근무제 등)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선택하게 해야 함. 현재의 제도는 기업의 여건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함.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간선택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광주지역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지 않음.

○ 가족친화인증제도 등 직장문화 개선제도

-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듯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특히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육아교육 등이 필요함. 채용장려금과 같은 각종 기업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문화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리더양성

- 아직까지는 여성 관리자 할당제도가 필요함.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성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지원금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제도 도입.

○ 여성인력활용 및 양성평등정책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를 통해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함.

○ 적극적인 홍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

-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조직문화 또는 기업문화를 여성친화적으로, 성평등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와 더불어 배려문화 확산.
-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법·제도 안내와 교육, 상담이 필요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대체인력 파견센터’ 설치 : 육아휴직(대체인력) 장려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총괄신청, 급여지급, 대체인력 파견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함.

○ 직장문화 개선 및 장시간 근로 개선

- 모성보호제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장시간근로가 만연되어 있는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함.
- 기업문화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인사고과 및 승진에 불이익이 있음.

이를 개선해야 함.

- ‘기업 내 시간제 근무형태’ 도입 : 근로자가 근로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업 내 시간제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함.

○ 여성의 ‘모성권’ 정착을 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 광주지역은 남성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환경임(가부장성, 중소기업 중심, 남성 중심적 기업문화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및 직장문화 정착이 필요함.
- ‘남성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도입.

○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기업규모별 차이가 많음.

-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끔 여성의 경력유지정책이 ‘근로자 맞춤형’ 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함.

[ 대전 ]

○ 1차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 출산전후 휴가 사용

- 비정규직 여성을 제외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된 듯함.
-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사업장 급여 부담금 해결이 우선 과제로 들어남.
- 남성의 출산 휴가는 3~5일 정도의 유급휴가로 대체 사용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공무원이나 교직종사자
  - 일반직종 종사자에 비해 자유로이 사용
- 일반직종 종사자
  -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에서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음.
  - 육아휴직 기간동안 동료들에게 업무 가중되는 결과에 대한 부담과 육아 휴직 이후 복직할 자리가 없어질 수 도 있다는 불안감 있음.
  - 육아휴직 이후에도 육아부담이 계속되어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현실적인 보육문제 해결이 우선임.

- 남성육아휴직
  - 교직 종사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다수 있음.
  -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함.
    - : 육아가 아닌 학업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남성이 많음.
    - : 남성 전담 육아는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쳐 승진 등에 불이익.
    - : 남성의 육아 능력 자체에 대한 회의도 있음.
  -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의식변화 노력 필요함.
- 대체인력 채용 활용
  - 단순 업무일 때는 효과적
    - 육아휴직 후 복직할 자리가 없어질까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함.
  - 숙련을 요구하는 경력직 업무는 타 직원에게 업무 분담.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함.
  -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인지는 되어있음.
    - 사업장으로 체계적인 홍보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 국공립어린이집
    - 교육의 질과 서비스 이용료 등 다양한 이유에서 선호함.
    - 자녀를 입소시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 호소.
    - 일부 특수 계층만이 수혜를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음.
  - 직장어린이집
    - 국가지원금으로 형식적 소극적 운영 지양.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 문제로 방치될 가능성 다분
    -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지원이 필요함.
  - 기타 보육시설
    - 평가인증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선 유지 필요.
    - 시간제 보육은 현실적으로 보육의 리듬을 깨므로 별도의 반 구성 필요.

○ 아이 돌봄·초등돌봄교실 등 돌봄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 취업모 우선지원 등 서비스의 현실화 필요
- 시간제 보육 규정을 강화필요
  - : 1, 2순위를 취업한 부모와 취업맞벌이 부모로 하여 출퇴근 시간 전·후의 피크타임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 : 3순위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로 수요 폭증 시간대에 필요한 취업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양육수당 부정수급 등의 방지 등으로 보육료 현실화

-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 돌봄 교실의 안전 강화
- 효율적인 정규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질적 서비스 향상
- 바이올린 등 다양한 개발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도입
- 돌봄 교사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집체 교육 등 교육실시
- 야간 보육확대와 아동 당 적정 인력 투입 요구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서비스

- 폭 넓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규모의 운영이 필요함.
  - 운영주체별 상담과 교육 그리고 연계되는 취업처의 질이 차이가 있으므로 복수 구직등록의 원인으로 작용
  - 구직 등록은 구직자의 선호와 신뢰에 따라 센터를 선택 방문하게 됨.
- 직업훈련으로 업무역량 강화와 직업인으로서 마인드 교육 요청.
- 경력단절기간 동안 자신감과 유능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연령의 벽 실감.
  - 30대, 40대, 50대 이구동성으로 연령별 채용의무제 도입 주장.
  - 비정규직 여성을 제외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된 듯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인식 개선 필요.
  - 시간선택제 적합 업무영역 발굴, 기존시스템과 병행은 어려움.

- 회사 자체 운영 스마트워크 시스템과 결합한 운영이 바람직.
- 기업에 시간선택제 채용 할당제 도입 주장.
-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자세 확립이 우선.

○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 활용.

-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회사 자체운영 시스템 운영 선호.
- 회사 기밀 등 문제로 스마트워크센터 출근 업무는 지양.
- 유연근무제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확인 필요.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
  - 참여 인사담당자 모두 가족친화인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함.
  - 사이트와 신청방법에 대해 국가적인 홍보 필요.
- 경력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자세 확립필요.

○ 여성근로자에 이어 남성육아 휴직제도 ‘아빠의 달’.

-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수반되어야 함.
  - 별급이나 평가에 있어 감점적용 등 불이익 도입.
- 대체 인력지원 필요하므로 단축근무로 ‘아빠의 달’ 운영을 현실화.
  - ‘아빠의 달’ 대신 여성근로자에게 1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주는 제안.
  - 대체인력 1개월을 채용하는 것은 13개월을 채용하는 것보다 어려움.
- 주 5일제 근무 도입시점의 저항과 동일하다고 봄.
  - 행정지도나 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을 통해 주지.
  -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장(공기관 등)부터 시작해서 확대 운영.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

-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 지원금보다 더 중요
  -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재계약 어려움

- 모성본능을 접고 탁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충분한 유인가가 제공 필요.
  - 재계약시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 등.
- 육아휴직 대체 단축근로
  - 발달단계에 기초한 보육제도 확립 필요.
    - 육아와 병행을 위해 대부분의 여성이 단축 근무를 선호함.
  - 조직상 새로운 일의 시스템과 체계 도입
    - 직무의 특성을 고려, 단축시간제등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
    - 동일 직무에 단축근무와 종일근무 병행시 업무 흐름이 깨질 우려가 있음.
  - 공기관부터 실시가 용이
    - 비교적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 초과비용의 부담이 적음.

[ 울산 ]

- 정책현장 모니터링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주제를 고려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였음.
- 모니터링은 ① 사전조사 ② 현장 모니터링 ③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 및 지역 현황 자료 수집·분석을 통하여 정책 모니터링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설정한 후 현장 관계자 심층인터뷰(FGI),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울산지역은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1.7%로 전국 평균인 50.2% 보다 낮으며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참가율을 보임.
- 연령별 취업자 비율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① 20대의 낮은 취업자 비율 ② 40대의 두드러지게 높은 취업자 비율 그리고 ③ 60대 이상의 낮은 취업자 비율을 드러냄으로 연령별로 기울기가 큰 중형을 보임.

-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종사자’의 여성비율이 69.0%로 가장 높았음. 이어 ‘판매종사자’ 6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7.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관리자’중에서 여성비율은 0.0%로 나타남.
- 산업별 취업자 분포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59.2%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50.3%, ‘농림·어업’에서 50.0%의 여성비율을 보임.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 출산·육아휴직 및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상 공백과 동료의 부담.
  -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낮은 인지도.
  -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양성 및 훈련프로그램의 부재.
-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
  -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부족.
  -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한정, 예산 운영의 조기마감, 돌보미 인력부족에 따른 아이돌보미 이용의 어려움.
  -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출퇴근시간), 방학기간 운영(시간, 점심식사 등), 저학년 위주의 운영 등에 따른 이용의 어려움
  - 학부모 인식 부족 및 학교 환경에 따른 초등돌봄교사 업무 과중
- 재취업 및 근로문화 모니터링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에 대한 지원 마련.
  - 직종별 수요 조사에 따른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시간선택제 일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
  - 반찬지원, 보육지원 등 구직여성들의 현실에 맞는 서비스 지원 확대.
  - 유연근무제 여성들의 임금, 대우 등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 고용 개선으로 새일센터의 전문성 제고.
-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경기 ]

- 본 모니터링 연구 사업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 이슈별 과제를 중심으로 사전에 계획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실시하였음. 아래 내용은 모니터링 정책영역별 과제와 정책 영역별 모니터링 중점 추진 사항을 요약한 것임.

구 분	정책영역	주요 모니터링 과제	중점사항
1차 (5-6월)	모성보호 제도	출산전후 휴가 사용	경기도에 밀집된 중소기업 상황에 중점
		육아휴직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대체인력채용 활용	
2차 (7-8월)	보육 및 돌봄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의 이용편의 성과 정책체감도 점검에 중점
		아이돌봄·초등돌봄교실 등 돌봄 서비스	
3차 (9-10월)	재취업 및 근로문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관점에서 재취업 사업에 대한 검토에 중점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 활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4차 (11월)	모성호보 및 육아휴직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제도 도입 초기 상황 이므로 인지도 및 향후 전망에 중점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인상 (1달)	
		육아휴직 시에도 출산육아기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인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다음은 정책영역별 모니터링 결과 요약 및 제안 요약임.

- 모성보호 제도(1차, 4차 모니터링 결과 및 대안)

영역	주요결과	대안제시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성보호제도별 인지도 및 사용격차가 크게 나타남.</li> <li>-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모성보호제도 사용 격차 큼.</li> <li>- 모성보호제도를 개인의 선택문제로 보는 인식 팽배.</li> <li>-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시 대체인력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간 갈등이나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li> <li>-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성보호제도 인식개선 및 제도 간 연계성 확보</li> <li>● 육아휴직관련 법령 정비(해고금지, 의무 사용)</li> <li>● 육아휴직 복귀 지원 제도 정비(복직 전 교육, 육아휴직자 발생 부서 인센티브 방안 등)</li> <li>●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벌제도 강화</li> <li>● 소규모 사업장에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li> <li>● 국선 노무사 제도(직장맘지원센터 지원)</li> </ul>
대체인력 채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보다 소규모 일반 사무직 대체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큼.</li> <li>- 대체인력 활용 시 초기 비용 문제나 복귀 후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체계적인 대체인력뱅크 운영</li> <li>●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대체인력 DB 구성 및 운영</li> <li>● 시간선택제 근로자 활용(출산인력인 많은 업종)</li> <li>● 대체인력급여지원금 증액</li> </ul>
모성보호제도 보완 및 강화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인상, 육아기근로시 간단축제 급여인상, 근로시간단축 청구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기업과 근로자 모두)</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생활임금이 보장된다면, 육아휴직보다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밖에는 사실상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li> <li>- 기업 입장에서 사업주 고려 부족하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li> <li>-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어려움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사업 확대</li> <li>● '모성보호제도'라는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li> <li>● 출산육아기 계속지원금을 세제혜택으로 전환</li> <li>●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밀착형 모니터링 필요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li> </ul>

- 보육 및 돌봄 지원(2차 모니터링 결과 및 대안)

영역	주요결과	대안제시
보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특히 취업모의 이용이 매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포괄하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보장.</li> <li>●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취업모 자녀 우선 입소.</li> <li>●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지원요건 개선.</li> </ul>

영역	주요결과	대안제시
가정 내 돌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시간에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움.</li> <li>- 새로 도입된 영아종일제 돌봄 홍보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퇴근 시간 근무가능한 아이돌보미 우선 선발</li> <li>• 맞벌이 가정 우선배정 준수 모니터링 강화</li> </ul>
초등돌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 교실과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간 괴리.</li> <li>- 맞벌이 가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현실화</li> <li>• 맞벌이 가정으로 이용대상 제한</li> <li>• 오후 돌봄시간 연장 및 석식제공</li> </ul>

- 재취업 및 근로문화(3차 모니터링 결과 및 대안)

영역	주요결과	대안제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일센터의 30대 고학력 여성 재취업 지원의 취약성.</li> <li>- 강사형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 미흡에 따른 사증 손실 우려.</li> <li>- 구직자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필요.</li> <li>- 조기 복귀 지원 사업 미흡.</li> <li>- 새일센터 직훈 과정의 전문성과 지역인력 수요처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 이전 직장 복귀 지원 사업</li> <li>•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강사형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li> <li>• 30대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특화 방안 마련</li> <li>• 새일센터의 사례관리 강화</li> <li>• 새일센터의 표준화 영역과 특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친화 직종의 경우,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필요</li> </ul>
취업여성 경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여성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 여성 대상 전직 지원이나 경력개발 지원</li> </ul>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구직여성의 취업 가능시간대나 여건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여 알선 성공률이 낮은 상황.</li> <li>- 여성친화 직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필요.</li> <li>-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과적인 시간제 취업 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이 취업가능한 시간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li> <li>• 여성들이 다수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의 활용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활성화가 필요함.</li> <li>• 시간선택제 취업여성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li> </ul>
유연 근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육아기의 경우 모성보호 제도 강화가 필요하나 일-가정 양립요구가 높은 양육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유연 근무제 도입 확대가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연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컨설팅</li> </ul>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적인 기업운영의 다양한 사례 발굴 홍보를 통한 확산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과 기업규모별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사례 발굴·홍보</li> </ul>

[ 강원 ]

- 제 1차 모니터링에서는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지역 전문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음. 강원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과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서비스직 등 5개 직종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함.
  -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1년 이상 휴직의 경우 대체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제도 시행이 일부 공공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개선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 육아휴직기간을 여성의 근로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됨.
  
- 제 2차 모니터링에서는 ‘보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육 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집단을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개별인터뷰도 병행하였음.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담당공무원, 아이돌보미, 초등 돌봄 교사 등 다양한 보육관련 이해당사자 혹은 종사자들의 집담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들이 지적되었음.
  -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으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지역사회 내 홍보가 잘 안된 문제가 있었고, 시간제 이용의 경우 월 40시간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시간제로 야근하는 엄마의 경우 월 80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여성의 일자리와 긴밀히 연계한 보육정책이 요구됨.
  - 정책제안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휴일과 야간시간 보육 수요도 많았음. 민간에서 전환된 공공형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경우 강원도 보육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며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음.
  - 보육·돌봄협의체가 지역내의 다양한 기관들 간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기관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록 조정,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 제 3차 모니터링에서는 ‘재취업과 근로문화’에 관한 주제로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기업의 인사담당자,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 여성들에 대한 집단·개별인터뷰가 수행되었음.
  - 제도 활용에 있어 문제점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여성의 욕구와 상이한 프로그램들로 제공되거나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 취업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기관의 평가방식이 교육생 수 등으로 되어있어 강원지역의 광역 저밀한 지역사정을 고려한 평가시스템이라 보기 어려움. 즉 강원도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취업 후에도 취업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 평가시스템이 필요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강원지역은 ‘(주)한국고용정보’라는 콜센터 운영기업이 100명 이상의 기혼여성들을 지역 내 취업교육 기관에서 일정 교육이수 후 취업시키고,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됨.
- 제 4차 모니터링에서는 최근 개선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이 실제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일반 근로자에게 인지되고 있는지, 실행된 바는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직 대상자,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기업의 인사담당자로는 강원도청의 육아휴직 담당자를 개별 인터뷰함.
  - 강원지역 사업장에서는 남성근로자가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육아휴직 1개월(아빠의 달)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만일 알더라도 보편적 이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응답함.

- 현재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는 주변에서 놀라워하는 시선을 받았으며, 1개월 유급 아빠의 달이 널리 홍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거의 인지하지 못했으며 실제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례도 대부분 없다고 응답함.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근로자 스스로는 경제적 이유로 휴가 대신 시간 단축을 원할 수 있으나 기업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 사업체의 입장에서 ‘아빠의 달’ 사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편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강원지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절실한 정책과제임을 확산하는 작업이 중요함.

[ 충남 ]

- 1차 모니터링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 기업 및 인사담당자, 지역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기업의 근로자들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내 인사담당자 역시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 이로 인해 각종 제도의 활용이 미비하고 기업문화나 근로문화의 차이에 따라 대단히 잘 이루어지는(유니매드제약, 삼화인터내셔널)기업이 있는가 하면 전혀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대체인력사용 불가능, 대체인력부족 등이 원인임.

- 2차 모니터링은 영유아 지원 및 돌봄, 방과 후와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충남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돌봄 시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하다는 통계자료가 있음. 그러나 시설이 몰려있어 농촌 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돌봄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육 및 시설의 불편함이 있었음. 충남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잘 되어있음. 그러나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별 육아 및 돌봄 시설이 필요함.
- 3차 모니터링은 지역 내 새일센터와 스마트워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충남의 근로자나 기업담당자 전문가 역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나 다른 일자리센터와의 중복성과 일자리센터마다 경쟁을 하는 구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임. 이는 새일센터의 기능을 확충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하는 부분임. 특히 충청남도는 시도별로 한 곳에 새일센터를 두고 있음. 이 경우 새일센터와 근거리에 있는 여성의 이용은 많을 수 있으나 그 시도 전체의 여성인구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새일센터를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교양강좌의 경우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함. 스마트 워크센터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너무나 생소한 단어로 보임. 특히 중소기업 중 제조업이 주로 있는 충청남도는 3, 4차 산업이 주로 있는 곳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스마트 워크센터의 규모나 내용, 활용 정도에 따라 설치장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4차 모니터링은 1차 모니터링에 대한 전체적인 시행정도나 활용에 대한 것으로 기업문화 및 근로문화가 바뀌지 않은 다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특히 대부분 근로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한 충청남도의 경우 인력은 곧 생산성임. 숙련공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기업에서 시작된 하청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물량 및 요구에 수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제도를 시행할 때 지금과 같은 형태의 홍보 전략이나 대기업에 적용 가능할 법한 내용을 적용한다면 기업에서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 인재은행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직업훈련 및 강화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허브기관의 설립도 필요함. 이 기관의에서는 국가의 다양한 제도나 정책 등을 목록화시켜 지역기업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함.

- 기업에서는 기업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시행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 정책이나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서는 근로문화나 기업문화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토로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별 기업의 규모나 근로형태, 산업의 종류나 직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단순히 기업별 시설관리에 대한 애로사항만 체크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기업에서 요구되는 체력단련실, 육아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보건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기업 내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이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반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 북 ]

- 1차 모니터링 사업 내용 및 결과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복귀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관한 현장 모니터링과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여부,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 및 사용 여부 등의 내용을 근로자 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함.
  -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의 사규명시, 육아휴직장려금 제도, 대체인력 충원 및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활용 등을 모니터링함.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관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모성보호 관련법 교육 의무실시 제도 확산과 영세사업장의 대체인력 사용 시 보상비 지급의 현실화,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지원금의 형평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함.
  
- 2차 모니터링 사업 내용 및 결과 :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시간제 보육 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현실화 및 영아종일제 돌봄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 초등돌봄교실 등의 보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취업모와 관련기관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현장모니터 실시.
  - 현장모니터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시간제 보육에 관한 전담교사의 안정적 확보, 시간제 보육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요구 등을 제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도 중요하나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 현행 평가인증제의 지표 보완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 처우개선 등 실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지역별 수요 공급 예측 필요, 아이돌보미 이용단가에 대한 현실화 요구, 초등 돌봄 관련 법령 제정과 협의체 운영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운영방식이 요구됨.

○ 3차 모니터링 사업 내용 및 결과 : 재취업 및 근로 문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유연근무제 활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관련 정책지원 내용에 관한 근로자와 관련 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 진행함.
- 전북의 경우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고학력 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은 지역사회 사업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따라서 지역에서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직무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후 개발에 따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재취업 지원서비스는 지역사업체의 특성에 맞는 직훈 개발로 해결하고 기존 경력을 활용하는 부분과 학력, 지역일자리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시간선택제와 여성일자리의 연계가 필요한데 현재 시간선택제가 가능한 업종이 제과제빵, 병원 안내, 텔레마케터, 바리스타 직종이며 보육, 병원, 돌봄 쪽이 해당함. 따라서 지역현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유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직훈 개발이 필요함.
-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는 현재 수준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내세울만한 메리트가 없음. 지원금과 세제혜택, 금리우대, 물품자격 적격심사 가점해주는 것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차 모니터링 사업 내용 및 결과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

-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성육아 휴직 촉진제도(아빠의 달), 비정규직 육아휴직 복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및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자와 사업장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를 실시함.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중요함.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 고민과 해결이 문제임.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의 수용성보다는 회사의 '눈치법'이 우선인 기업 분위기 전환이 필요함.
- 기존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

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용에 대한 점검은 시기상조임. 기존 제도의 수용성과 활용에 대한 점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활용도를 높일 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요구됨. 즉 전북의 경우처럼 4인 미만의 사업체 수가 84.5%인 사업장의 규모에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 홍보와 근로 감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남 ]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 비정규직에 대한 법 규정 홍보 강화.
  - 관공서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현황 파악 및 규정 강화 필요.
- 대기업 대상은 홍보와 강력한 법적 규제 강화 요구.
  - 대기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 중소기업은 기업의 의지와 문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계로 자발적인 적극성을 유도 할 수 있음.

○ 보육 및 돌봄 지원

- 시간제 보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범실시부터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4개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2개시·군에서 최소한 한개 시설을 지정하여 시범실시를 하여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22개 시·군에 한개 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함.
-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전남지역은 공단단지를 보급하고 기업체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공단단지 또는 단지블록 별로 최소 한 개 정도 공동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함.

- 보육과 돌봄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여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요자와 공급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 재취업 및 근로문화

- 리터십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여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 도입 필요함.
-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강제적 제도 마련
- 유연근무제 확대는 기업체의 의지가 중요함. 이에 따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홍보와 지원 강화.
- 가족친화 인증에 있어 절차를 어렵게 하고 인증에 따른 보장은 폭넓게 지원 하여야 함.
  - 환경개선, 직원 워크숍지원, 입찰시 가산점등.

####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선 활성화 후 규제 방안 필요

-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남성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문화, 인사, 급여 등 다양한 불이익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임.
- 기업 스스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의 사용비율을 중심으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가 필요함.
  - 입찰 가산점, 환경개선 지원금 등.

#### [ 경북 ]

#####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1차, 제4차 모니터링)

- 여성경제활동참여에 불리한 지역의 산업특성과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

여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책이행수준이 저조함.

-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위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기관(특히,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잘 이행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남성 육아휴직제, 비정규직 모성보호제의 경우에는 인지도와 이행률이 낮아 제도가 무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공감의 부족함이 실정임.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견인효과’를 통해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여성,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제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이 담보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민간의 모성보호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도입 및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보육 및 돌봄 지원(제2차 모니터링)

- 경북의 보육지원(어린이집, 초등 돌봄)은 지역별 격차(도시지역 대 농촌 지역)가 크며, 대부분의 직장맘들은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유형에 따라 수요·공급에 차이가 있지만, 직장맘의 선호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초등돌봄교실(초등학교)의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절대 부족하여 확대가 요구됨. 다만, 이 경우 중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예: 지역아동센터)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함.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연계 또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함.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기관이 일부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어 있고, 그마저도 대기시간이 길고 지원시간도 부족함.
-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아이돌보미에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애로가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긴급 시에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보육 및 돌봄 지원 협의체의 활성화하고 지역 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 지원 협의체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직장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관들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재취업 및 근로문화(제3차 모니터링)

- 경북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수준이 부족하며, 일·가정양립을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유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재취업여성의 고용유지 프로그램이 부족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근무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며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제 활용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함.
- 제조업 중심의 중소 내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인 근로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여성 관리자나 리더가 매우 부족함.
  - 직종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분포에 차이가 있지만 관리자나 리더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나 전문가들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민간사업체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음.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이 강하고, 승진과 임금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근로문화가 잔존해 있음.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무유형에 대한 홍보 및 도입 기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새일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다양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재취업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무 소양교육과 사전 교육 등.
  -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활용 및 우수 사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함.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제도 강화.
  - 지역사업체 대상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보채널 다양화.
  -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대상의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교육 강화.
  - 여성 관리자 및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 확대.

[ 경남 ]

○ 1차 모니터링

- 제도 실행 현황
  -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 관한 인지정도는 높으나 사용가능성은 낮음.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 어려움
  -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저조함.
  - 사업주가 휴직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 것, 동료들에게 자신의 업무가

부담되는 것으로 인한 눈치를 받기 때문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움.

- 정책 개선방안
  - 휴직에 관한 법령 강화 및 제도화
  -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휴직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지원금 현실화
  - 비정규직의 모성보호권 지원 강화

#### ○ 2차 모니터링

- 제도 실행 현황
  - 양육자들은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이 높으나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곳은 적음.
  - 기본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양적확대가 필요, 하지만 양육자들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양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평가인증제 참여의 의무화뿐만 아니라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필요함.
  -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함.
- 정책개선 방안
  - 거점 시간제 보육센터, 기존의 어린이집과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제공.
  - 기존의 국·공립 시설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
  - 평가인증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 3차 모니터링

- 제도 실행 현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용도는 지역에 따라 위치, 기관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편차가 있음.
  -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다중업무 처리 및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원하나 여성들은 양육을 문제로 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구인하



지 않음.

- 시간선택제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전일제와의 업무 연계 문제 등으로 인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어려움.

- 정책개선 방안

- 여성의 특징을 고려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종 개발.
-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실행을 병행하여 추진.

○ 4차 모니터링

- 제도 실행 현황

- 지역의 노동시장 현황(인력수급정도 등),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육아 휴직, 단축근무 등의 인지 및 사용 정도는 차이를 보임.
- 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부담이 됨(눈치, 비용 등).

- 정책개선 방안

- 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인식 정도 확대.
- 제도 활용 시 사업체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충 해결 방안 모색 및 제안(매뉴얼 개발).
-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직장 문화 변화 캠페인 진행.

[ 제주 ]

○ 제1차 모니터링 주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제주지역에서의 정책 성공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사용’은 일·가정양립을 배려하는 조직문화와 인식이 향상되어 지방 공기업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관대 하였음. 둘째, ‘임신과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는 사규로 명시되어 여성 근로자는 물론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3일 부여 제공이 되고 있었음. 셋째, ‘육아휴직장려금제도 활용’은 고용보험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노사의 관심이 증대해졌고 제도에 의거 장려금도 수령되고 있었

음. 넷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충원’ 영역에서 공기업은 육아휴직자를 미리 파악하여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었음.

- 제주지역에서의 정책 미흡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영세기업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법정제도임에도 대체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으로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음. 둘째,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은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활용이 미흡하고, 비정규직 남성이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음. 셋째, ‘대체인력 채용’ 활용은 업무의 흐름을 위해 경력자와 정규직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인력풀 구축이 미흡해 어려움.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는 계약기간으로 인해 신분보장이 안 되고 비정규직계속고용지원금제도도 지역기업의 영세성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음.

○ 제2차 모니터링 주제: 보육·돌봄

- 제주지역에서의 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유지율이 82.1%로 우수하였음. 둘째, 제주지역은 ‘돌봄 공급자’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이 권역별로 많은 편이었으며, ‘보육여건만족도’도 전국 1위로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도 높았음.
- 제주지역에서의 정책 미흡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시간제 보육반’ 운영은 1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로 인해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둘째,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확충되어야 하나 기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서 시설 수만 늘리는 것은 운영 등 문제가 있었음.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준비서류 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나 정작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여주기 위한 평가인증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음. 넷째, ‘입소대기시스템’ 도입으로 입소대기 순위는 일부 잘나가는 어린이집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중복신청으로 실제 대기인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었음.

○ 제3차 모니터링 주제: 재취업·근로문화

- 제주지역에서의 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경력단절 2년 이상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6주간 인턴을 거쳐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음. 둘째, ‘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운영되고 있었음. 셋째, ‘경력단절여성’ 취업은 제주지역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구인난으로 인해 잘 되는 편이었음. 넷째, 가족친화경영기업에서는 ‘유연근로제도’와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가 모성보호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여성이 일·가정양립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고 있었음.
- 제주지역에서의 정책 미흡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음. 둘째, 인턴십 과정과 취업 후 관리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잘 되고 있으나 근무여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었음. 셋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기업을 제외하면 어려울 뿐 아니라 일자리 질도 낮은 편이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도 쉽지 않았음. 넷째, ‘스마트워크센터’는 한 곳도 없었음. 다섯째, ‘유연근로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주 및 기업관계자의 인식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안 됨. 여섯째,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는 지역 사업장 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하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일곱째, 여성중간관리자들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업무 역할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 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여성 핵심리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여덟째,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보다는 제주도 유관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아직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 제4차 모니터링 주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 제주지역에서 각 제도별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남성육아휴

직 촉진'을 위해 육아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부담이라는 역할공유에 대한 인식확산과 제주지역 소규모 사업주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였음. 둘째, '비정규직 육아휴직 복귀지원'을 위해서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에 대한 여성채용노무컨설팅 지원과 현장점검 계속 강화가 필요하였음.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를 위해서 지역 현장에 맞는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이 필요하였음. 넷째,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 맞는 제도 의무화 정착방안과 인력손실 지원 방안이 필요하였음.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 ○ 1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온라인 모니터링 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안을 제안함.
  - 사회문화 전반에서의 인식 변화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대한 불이익 방지
  - 대체 인력풀 확대로 동료 간 업무부담 해소
  - 복귀전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 온라인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원인과 개선안은 아래와 같음.
  -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움(68.5%)'로 확인됨.
  - 일·가정양립이 힘든 이유는 '직장에서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한 사람이 없어서 눈치가 보임(24.4%)' 때문으로 나타남.
  - 일·가정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직장에서 육아휴직제도 참여 유도(24.9%)'로 나타남. 또 '긍정적인 직장문화 개선(24.4%)', 'CEO나 관리자의 인식 개선(23.4%)'이 높아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2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온라인 모니터링 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안을 제안함.
  - 돌봄 및 보육시설 운영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제한, 영아반 확대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시간제)돌봄 일자리 사업 모색 : 퇴직자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보조 교사, 시간연장보육 담당 일자리 사업 확대.
  -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인프라 점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돌봄 서비스 세분화 : 환아 돌봄 서비스 확대.
- 온라인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원인과 개선안은 아래와 같음.
  - 보육 및 돌봄 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성별, 연령별, 권역별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 및 돌봄 시설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집과의 거리, 시설 및 환경인 것으로 파악됨.
  - 보육 및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수당(현금)지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3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온라인 모니터링 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안을 제안함.
  - 유연근무제도의 활발한 사용, 장시간 근무 문화의 변화를 위해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함.
  - 지역, 연령,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여성 재취업 연계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홍보 확대를 통해 기관 인지도 향상, 타 센터와의 차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센터만의 고유성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확대되어야 할 유연근무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가 업종별, 직종별로 다양하지 않아서’ 인 것으로 나타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었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사회, 직장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문화 개선’, ‘CEO의 시간선택제 고용효과 인지 및 의지 고취’로 조사됨.

○ 4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정부의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중 2014년 10월 이후 새롭게 시행된 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두 번째 육아휴직(아빠의 달)과 관련해서는 남성이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여성의 경제 활동시 가장 큰 장애는 ‘가사, 육아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지역 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

[ 1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제도 사용 : 점점 더 심해지는 양극화.
  -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의 기업 내 분위기나 사회인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휴가 사용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임을 공통적으로 제시함.
  -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상태에서는 계약시점과 관련해 임신계획이나 여

부가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라 편차가 심함. 단, 단기간(2년 정도)의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임신을 꺼리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소득관련 부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도 활용에 한계점이라고 파악됨. 야근수당 미정책 및 추가업무가 문제임.

○ 대체인력제도 사용

- 대체인력과 관련해 근로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적절한 대체자를 찾기 어렵고, 휴직자의 빠른 복귀를 통해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제시함.
- 휴직자가 복직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사원과의 비교로 인해 휴직자의 업무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제도사용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사회의 ‘장시간-면대면’ 근무의 문제제시.

○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 부담 가중

- 여성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압력 강화나 규제 강화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꺼리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함. 이는 결국 여성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사회문화의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는’의 의미가 아닌 ‘근로자가/근로자는’의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짐. 육아휴직 혹은 모성관련한 제도 운영이 근로자의 권리 측면으로 인식개선이 되어야 함.

- 배려와 적대의 간극
- 남성의 제도 활용 비율이 낮은 이유
  - 인식부재(눈치), 소득문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서의 어려움도 큼.
- 기업 인사담당자 관점에서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지원제도
  - 제도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활용에서의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임(인력수급의 문제, 과징금).
-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각종 업무관련 교육 및 훈련
  - 별도의 재교육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기본업무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함.
- 대체인력제도 사용
  - 대체인력 고용시 단기간 고용에 대한 부담.
  - 대체인력풀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허브 센터가 있다면 이 기관을 활용해 원활하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함.
- 정책개선안
  - 여성근로자 대상의 종합상담지원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 대체인력 풀 DB 구축
  - 가족친화기업 관련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선정기준 강화
  - 정책 인지를 위한 홍보 확대
    - 임신, 출산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
    - 결혼 및 출산, 육아관련 박람회를 통한 홍보 : 여성가족부 및 관련부처 중심/지자체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사회문화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 경력단절의 원인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수정



-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에 대한 선택 시 질문지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 최근 ‘간병’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나 이를 반영하는 답안이 없음.
- 경력단절의 원인은 중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개인적인 사유와 사회문화적 사유를 구분해 경력단절의 원인을 다각도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음.

[ 2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 시간제 보육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 이용시간의 비현실성 및 급작스런 상황에서의 이용 불편
- 시간제 보육 이용 편의성 부재
  - 1-2명의 아이만 이용할 경우 교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 대책이 필요함.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1-2명을 돌보는 경우도 있어 아이를 데려오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전업주부인 경우 아이를 맡기게 될 경우 아직까지 ‘맘 편하게 맡기기’가 쉽지 않음.

○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 이용 시 불편사항은 대기시간, 위치(접근성)에 대한 부분임.
- 직장어린이집
  - 이용 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첫째, 아동간의 문제(다툼, 불화 등)가 생겼거나 시설이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간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직급’이 문제해결에 있어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나 학부모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이 많음을 지적함. 수직적 직장문화가 시설이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문제임. 둘째, 초등학교 입학 시 ‘또래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함.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주거지 주변으로 진학하고 있어 직장과의 거리가 먼 경우 입학 후 학교적응에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함.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 잘 갖춰진 경우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영아의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 평가인증제 실효성에의 의문.
-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상반된 입장.
  - 행정 편의주의적인 평가가 아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수립이 요구됨.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절차로 인식됨.
  - ‘교사’를 제외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제시하며 인증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높게 공감함.
  - 평가인증제의 목적은 기관 내부 상황 점검 및 정보 공유임.

○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현실화 및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확대.

-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가 미흡한 상황으로 홍보 활성화가 필요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가 관건임.
- 아이 돌봄 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음.

○ 초등 돌봄교실 : 돌봄 교실 인프라 부재, 돌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 원치 않는 낙인효과에 대한 거부감
-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운영
- ‘안전’에 간혀버린 방과 후 돌봄교실
- ‘면대면 귀가’에 따른 연계서비스의 어려움

○ 정책개선안

〈표 IV-4-3〉 서울지역 2차 모니터링 정책개선안

영역	내 용
시간제 보육반등 시설보육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번제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경우 각 구를 중심으로 1주일 정도를 주기로 시간제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임.</li> <li>- 시설 이용 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나 교사가 방과 후에 지정된 시설로 아이와 함께 이동하고, 개별 이용자들은 당번인 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li> <li>야간 보육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당번제로 운영되는 방안이 제시됨.</li> </ul> </li> <li>○ 어르신 일자리를 통한 시간제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한 노인세대, 특히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저녁 시간(6시 ~ 9시)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 있음.</li> <li>- 육아 경험이 있는 경우 야간의 보육은 지역의 어르신 일자리로 제공, 기존 시설에서 보조교사나 야간 돌봄 담당자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함.</li> </ul> </li> </ul>
직장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출자 형식의 어린이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10인 이하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은 법상 의무는 없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li> <li>- 구로구 지역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의류, 봉제 공장들을 중심으로 공동육아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운영해 30대 여성 구직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무지속성을 높였던 운영사례도 있음.</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이용 + 양육 보조자의 도움’으로 구성되는 보육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형 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의 직장 스케줄과 보육 기관 이용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맘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li> <li>- 시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4시 정도에는 대다수 아이들이 퇴원하는 상황이므로 아이를 저녁때까지 맡길 경우 아이 퇴원시 보육교사나 시설 종사자의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 제시가 많았음. 이에 따라 순번제나 지역에서 한 두 곳을 기점으로 5-6시 이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됨.</li> </ul> </li> <li>○ 정보의 통합적 제시 및 일원화된 서비스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들 대다수가 관련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 담당 부처와 서비스가 다르고, 복잡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어려웠으며 중복 수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li> <li>-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서비스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사업이 사업마다 제시되고 있어 이용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지적이 많았음. 즉, 아이가 태어나면 A, B, C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인지 선택 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는 각각의 정보를 학부모가 일일이 찾아서 비교해야 하는 상황임.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도록</li> </ul> </li> </ul>

영역	내 용
	<p>구성되는 것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경우 외국에서는 전달체계가 통합되거나 단일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에 따라 관련 부처와 전담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수혜자가 정책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경우가 많음.</li> </ul> <p>○ 일본의 돌봄 서비스 플로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에 설립된 '병아보육' 전문 사회적 기업. 병아보육은 몸이 아픈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맞벌이가 많아진 일본사회에서 워킹맘들이 아이를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 또한 매우 흔한 현상인데,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전염의 위험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함. 우리나라 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등원기준을 관리하고 있어 일본의 워킹맘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플 경우 출근에 어려움을 경험함. 그러나 결근시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휴가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 '플로렌스'는 아픈 아이를 전문 대원이 맡아 소아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 플로렌스는 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아이가 아팠을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줌.</li> <li>- 병아보육 사업부 이외에도,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예의 인력파견 보육서비스, 부모들이 보다 다니기 좋은 회사 여건을 만들기 위해 Work &amp; Life Balance 사업부를 두고 있음.</li> </ul> <p>서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음.</p>

## [ 3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 운영

- 리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나 필요성은 높은 수준으로 동의함.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리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은 의문이라는 데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함. 특히 학력을 중심으로 리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자신의 경력을 살려낼 수 있는 '경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을 제시함.

## - 서울시의 새일센터 현황

- 서울시 새일센터는 총 29개로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1개 구를 제외하곤 모든 구에서 1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인프라 측면에서는 충분한 상황임. 모니터링에서의 모든 대상자가 서울시의 경우 새일 센터의 추가 설립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새일 센터의 기능강화,

지원강화의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함을 제시함.

- 재취업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선택폭이 좁은 교육 프로그램
  - 대다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상담관련 직종이거나 가사노동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어서 선택폭이 제한적임을 문제로 제시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연령별로 차별화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함.
- 시간선택제에서 정규직 근무자로의 전환에의 어려움.
-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제한적인 일자리 제공의 문제점 제시.

○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 활용

- 업무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모호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
- 스마트워크의 인지 부재 및 부정적인 실효성.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형식적인 가족친화, 변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문제점.
- CEO 및 중간관리자의 인식에 따라 가족친화경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 경력단절여성의 낮은 경쟁력을 문제로 제시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직종·업무 개발이 요구됨.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선정기업의 경우 신청 및 인증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 ‘가족친화기업=여성이 다니기 좋은 회사=아이를 키우기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 제고를 할 필요성이 큼.
- 여성가족부 중심의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홍보 실시, 지속적인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이 먼저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정책개선안

〈표 IV-4-4〉 서울지역 3차 모니터링 정책개선안

영역	내 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일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새일센터의 기능,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해야 함. 새일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낮아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센터별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 홍보는 어려운 실정임을 제시함.</li> <li>- 한 센터의 경우 월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해도 홍보비로 100만원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홍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팅을 받기도 어려움.</li> </ul> </li> <li>○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합의기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일자리 중 지속성이 높은 일자리의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임을 고려, 민관 그리고 지역의 기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합의가 가능한 합의기구, 회의 등이 마련되어야 함.</li> <li>- 특히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당 인력을 모집, 관련 교육을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지원하고, 양성된 인력을 기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함.</li> </ul> </li> <li>○ 지역 내에서 인턴, 실습장소 지원 확대를 위해 인턴채용, 실습기회 제공 기업에 대한 혜택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일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습기회의 확대, 인턴 근무처 마련 등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육받은 부분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재한 상황임.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유인책의 실시가 필요함.</li> </ul> </li> </ul>

영역	내 용
가족친화 적인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실질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혜택이 많다고 하나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음. 보다 적극적인 혜택의 모색이 필요함.</li> </ul> </li> <li>○ 가족친화인증기업 전체를 중심으로 한 홍보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 확대가 필요함.</li> <li>- 현재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임.</li> <li>-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마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기업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li> </ul> </li> <li>○ CEO 및 중간관리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li> </ul>

[ 4차 모니터링 주요결과 ]

- 제도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근로자 입장)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촉진
    - ‘아빠의 달’의 시행이나 남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공의 의미나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되나 제도에 대한 인지는 매우 낮음. 거의 알고 있는 경우가 없었으며, 해당 규정이 사규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함.
    - ‘아빠의 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음.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확한 인지는 못해도 들어본 적 있음을 제시함.
    -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용어만으로 판단해 아빠만, 아빠가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음.
  - 남성의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고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이 일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제시되는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라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많았음.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경우 주로 전문직이거나 공공기관 등 조직 내에서의 눈치가 덜 보이고, 고용안정성 보장이 큰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 현상(비정규직의 육아휴직 복귀지원)
  -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나 단기간 계약직의 경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제시함.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단기간 계약직의 경우 아예 임신을 미루는 상황이므로 제도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태임.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수적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 여성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일부 사용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나타났으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야근을 안 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사용이 가능한지 되묻는 정도로 나타남.

#### ○ 정책개선안

- 홍보 확대를 통한 및 정책에 대한 인식도 향상
  - 공중파, 지상파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 필요함.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 임신출산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경우 사용자는 일부이나 제도의 활용을 위해선 사회전반에 걸쳐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제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제도 변경
  -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아버지 할당제’를 시행하는 강제적인 정책이 필요함. 인식의 전환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일정기간동안 강제적으로 써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



록 대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 시행되어야 함을 제시함.

- 특히 자녀 출산시 기본 육아휴직 1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그 중 30% 또는 20%를 반드시 남성에게 보장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음.
- 제도사용의 순차적 확대 : 공공기관 주도형의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중요함.
  - 성과평가나 강제성을 띤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도를 알리는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어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제도 사용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시함.
  - 여성, 육아휴직 등의 표현만 제시되어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불편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 주 양육 담당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방식의 지속적 운영은 여성 고용의 질 전체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
  - 공기업,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관행을 점검하고, 불안정 계약관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특히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다. 성과 및 과제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 도출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총 3개 주제, 4차례의 모니터링을 실시함.
- 여성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폭넓은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서 한층 더 폭넓게 보육과

자녀 돌봄, 재취업과 근로문화까지 정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함.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여성 고용과 관련한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가 중요함. 이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보다 다각도로 조망함.
  - 16개 시도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단을 활용하여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현장 밀착형 정책 개선안 도출함.
- 정책을 실제 이용하고, 운용하는 정책의 실제 이행여부의 점검을 통해 해당 정책의 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발굴함. 이를 활용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 각 주제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도출하고, 정책 현장에서 왜 해당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여성의 경력유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온·오프라인의 다채널을 활용, 정책에 대한 인식,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물론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정책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 인지도 향상에 기여함.

정책현장을 반영한 정책화

- 여성의 경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현실화 되도록 지역별, 주제별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의 정책화가 필요함.
- 낮은 정책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후속 사업이 필요함. 향후 정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V

##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1.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개요	177
2. 여성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179
3. 유관기관 / 여성NGO 협력	182
4. 여성전문인 협력	185
5. 성과 및 시사점	188

## 1.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배경 및 목적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를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음.

- 여성정책거버넌스 활성화는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임. 2013년 이후 거버넌스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고자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지원 및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을 발족함.
- 포럼을 통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및 한국과 베트남간 여성정책 관계자들이 서로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정현안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능함.
- 국정 현안예의 여성통합 및 주요 여성정책 현안에 관련된 여성 NGO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모색함.

### 나.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2014년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V-1-1〉 주요사업별 사업실시 일자 및 참석인원표

구분	행사명(사업명)	개최일자	참석인원
여성 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14.4.21-4.25	한국측대표단 15인, 중국측 28인, 총 43인
	2014 한국-베트남 여성 포럼	'14.6.24-4.26	한국측대표단 12인, 베트남 측 9인,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등 10인, 총 27인 (기념세미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BK기업은행 측 참석으로 약 120명)
유관 기관/ 여성 NGO 협력	지역여성연구원장 간담회	2014.3.18	여성가족부 2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인, 지역여성연구원 11인, 총 24인
	제21차 아시아태평양여성단체연합 서울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2014.10.14.- 10.18	회원국 대표단 및 회원단체 전문가, 학계 등 약 1,000명

구분	행사명(사업명)	개최일자	참석인원
여성 전문인 협력	2차 한국여성경제포럼	2014.3.13. (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BK기업은행, 본원 관계자 등 약 205명
	3차 한국여성경제포럼	2014.6.24. (화)	한-베여성포럼 베트남 및 한국 대표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BK기업은행, 본원 관계자 등 약 120명
	4차 한국여성경제포럼	2014.9.12. (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BK기업은행, 본원 관계자 등 약 160명
	5차 한국여성경제포럼	2104.12.9. (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BK기업은행, 본원 관계자 등 약 110명

## 2. 여성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제11차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지원

### ○ 사업 목적

-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우의증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여 양국 간의 여성 정책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한·중 여성지도자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이해증진 도모

### ○ 사업 개요

- <제11차 한중여성지도자 포럼> 개최와 관련해 (사)21C 한중교류협회의 요구로 참가함. 여성정책관계자간 교류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공유함.
- 일시 및 장소 : 2014. 4. 21(월) - 25(금), 베이징 및 산둥 지역
- 주관 : 21C 한중 교류협회/ 중화민국 인민외교학회
- 참석자 : 한·중 여성지도자포럼 한국 측 15인
- 주요 일정 및 논의사항

〈표 V-2-1〉 제11차 한중지도자 포럼 일정 및 논의사항

일자	방문기관 /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4월 21일 (월)	북경대 이암송 부총장 면담 / 이암송(부총장) 외 5인	○ 한국과 중국간의 학술교류, 여성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의 교류 중요성 인식에 합의 ○ 북경대학내 견학
4월 22일 (화)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위원회 부주석 면담 / 마바오(부주석) 외 5인	○ 한중 우호교류 필요성 확인
	중국노령위원회 / 진전서(전국노령위원회사무실 상무 부주임, 차관급) 외 6인	○ 노령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이해 증진 ○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토의
4월 23일 (수)	태안시 부시장 만찬 / 태안시 정부 부시장 외 6인	○ 태안시와 한국교류협회 여성위원회간 추후 3대 과제 도출 - 시정부와 협의하여 성형 미용, 산부인과

일자	방문기관 /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병원 건립 검토 - 태안시 소재 대학내 미용학과 신설 - 한국의 여성경제인협회와 태안시 여성경제인과 교류추진 - 초·중등학교 학생 교류
4월 25일 (금)	산동성 여성연합회 / 책려명(산동성여성연합회 주석) 외 6인	○ 산동성 여성문제 현황 및 대안 논의

## ○ 2015년 제12차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의 논의예정 사항

- 태안시와의 합의안으로 추후 노력할 것을 결의한 사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연계, 한국과 태안시(혹은 산동성) 여성경제인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함.
  - 대구보건대학과 연계, 미용관련 학과를 태안시 소재 대학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함.
  - 경기도의사회와 연계, 성형외과, 피부미용, 나아가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함.
  - 아이코리아와 연계, 초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부모교육, 유치원 교사교육등)를 추진함.

## 2014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 ○ 사업 목적

-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및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한국-베트남 여성포럼」(2013.11)의 발족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세미나 및 부대행사를 통해 포럼의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한국-베트남 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함.
- 「2014년 한-베 여성 포럼」(제2차)은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개최하며 여성 창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해당분야별 양국 여성 관계자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발전방안 등을 탐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4.6.24 (화) - 2014.6.26 (목), 서울 및 평창
-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 측), 베트남여성연맹(베트남 측)

- 한국 : 포럼 공동대표(최금숙 KWDI 원장·안명옥 전 국회의원), 제1차 포럼 참가자 및 제2차 포럼 주제 관련인사 등
- 베트남 : 포럼 공동대표(Nguyen Thi Kim Thuy 베트남여성연맹 부주석) 외 베트남 측 포럼 회원 등
- 개최형식 :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상호 교차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함.
- 포럼은 간담회 또는 세미나 등에 의한 공개포럼 형식을 취하며, 필요에 따라 그룹토의도 병행함.
- 주요 프로그램

〈표 V-2-2〉 2014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일정표

날짜	내용	비고
6.24 (화)	<b>【 오 전 】</b> ○ 기념세미나 - 주제발표 1 : 창조산업과 여성고용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베트남의 여성 기업인 및 여성 일자리 창출 (Dao Mai Hoa, 베트남여성연맹회 여성 경제지원국 부국장) ● 질의·응답	* 「한국여성경제포럼」과 공동주최하되,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주관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기업은행장 주제 오찬
	<b>【 오 후 :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간담회 】</b> ○ 발표 : 한국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 농촌새마을운동에서 새마을 부녀운동의 역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 질의·응답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b>【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b> - 주요 논의사항 ● 운영위원회 조직 ● '2015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운영 방안 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재 만찬
6.25 (수)	○ 평창방문 - 비누제품설명 / 포장기계 시범 및 체험 - 숲 치유 및 노르딕워킹 - 약초차 체험	
6.26 (목)	○ 서울여성문화유산 답사	



### 3. 유관기관 / 여성NGO 협력

지역 여성연구원장 간담회

○ 사업 취지

- 전국의 여성정책연구원(여성개발원, 발전센터 內 여성정책센터)은 국정현안에의 여성 통합을 가능케 하는 생활체감 여성정책의 거점센터임.
  - 지역의 여성정책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을 조율, 지역적 맥락에 맞는 여성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역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정책연구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류가 요구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유기적 관계는 국정현안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지역사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현안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능함.
- 본 간담회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각 지역 연구기관 간 연계방안을 점검, 실질적인 네트워크 강화 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일시 : 2014. 3. 18(화) 11:00~14:00
- 장소 : 코리아나 호텔(서울 광화문 소재) 다뉴브(2층) 프린스룸
- 참석자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박현숙 외

여성인력개발과장 이금순

[지역여성정책연구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근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숙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김민정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미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장 하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팀장 손문금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박혜영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장부연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최순애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영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양애경  
 연구기획·평가팀 팀장 전기택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김종숙  
 여성일자리·인재센터 부연구위원 강민정  
 여성친화정책전략단 5명

#### 위탁과제 운영

##### ○ 사업 취지

- 유관기관의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협력강화
- 위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과제 사업선정을 위한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탁사업을 진행함.
- 최종보고서의 질적 평가를 실시, 다양한 위탁과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리 강화.

##### ○ 사업 개요

〈표 V-3-1〉 위탁과제 사업 개요

위탁과제명	과제책임자	수행기관
성폭력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이현숙 대표	탁틴 내일
독일 일·가족 양립정책과 한부모 가족 : 국가와 기업의 정책을 위주로	김해순 교수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주민자치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이상경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여성을 위한 통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상만 교수	(사)한반도개발협력 연구네트워크

여성 NGO 협력 : 21차 아시아태평양여성단체연합(FAWA) 서울총회 및 국제 심포지엄

○ 사업 취지 :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성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함.

○ 사업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4.10.14.-10.18, 롯데호텔 등

- 협력사업 단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주제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Empowering Women for Gender Equality in the Asia Pacific)

- 참석대상 : 아시아·태평양 여성단체연합(The Federation of Asia-Pacific Women's Associations, 이하 FAWA) 회원국 대표단과 아·태 지역 여성지도자 및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산하 64개 회원단체, 국내·외의 정·관·학계의 주요인사 및 전문가 등 총 1,000 여명

## 4. 여성전문인 협력

### 사업목적

- 본 포럼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여성기업과 여성 경영인의 창조적 자기 역량 강화 및 국가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기업, 단체 및 전문가들의 경영 노하우와 이슈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정책담당자들 간 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및 결과

- 연 4회(분기 1회) 조찬포럼 및 기념·정책세미나 방식으로 운영
- 제2회 한국여성경제포럼
  - 주관: IBK기업은행
  - 일시 및 장소 : 2014. 3. 13(목) 07:30~09: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1층)
  - 주제 : 「창조경제와 창조경영」(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창조경제 및 창조경영의 핵심은 초협력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개방 플랫폼 형성으로 효율과 혁신을 이루는 것
  - 참석자 : 약 205명

〈표 V-4-1〉 제2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주요참석자

구 분	인원	주요 참석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명	최금숙 원장 외 8명
IBK기업은행	17명	은행장, 전무이사, 감사 등 임직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74명	이민재 회장 외 여경협 회원사
외 빈	5명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강연)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혜숙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김 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제3회 한국여성경제포럼(2014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기념세미나와 결합)

-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14. 6. 24(화) 10:00~14:0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 기념세미나 주제 : 「여성기업인과 여성일자리 창출」
- 참석인원 : 약 120명
  -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대표단 20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민재 회장 외 여경협 회원사 71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 외 9명
  -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외 10명
  - 김정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무숙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

○ 제4회 한국여성경제포럼

- 주관 : IBK기업은행
- 일시 및 장소 : 2014. 9. 12(금) 07:30~09: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 주제 :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서 쓰라」(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 중에서도 가장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중국의 자본강대국으로의 자리매김 이면에는 중국 여성들의 경제적 힘, 위미노믹스의 작용이 존재함. 한국여성 CEO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참석자 : 약 160명

〈표 V-4-2〉 제4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주요참석자

구 분	인원	주요 참석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명	김태홍 원장 직무대리 외 5명
IBK기업은행	17명	은행장 외 17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74명	이민재 회장 외 여경협 회원사 177명

구 분	인원	주요 참석자
외 빈	5명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강연) 김상현 네이버 대표이사 신수연 메리골드 대표이사 김순진 21세기여성CEO연합회장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 행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장

○ 제5회 한국여성경제포럼

※ 개최 예정

- 주관 : IBK기업은행

- 일시 및 장소 : 2014. 12. 9(화) 07:00 ~ 09: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 주제 : “미래를 위한 네이버의 노력” (김상현 네이버 대표이사)

-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저력은 현재가 아닌 미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발상의 전환을 끊임없이 이끌어낸 창의성에 기반함. 이러한 네이버의 창의적 발상은 여성경제인들이 창조경제시대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표 V-4-3〉 제5회 한국여성경제포럼 주요참석자

구 분	인원	주요 참석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명	이명선 원장 외 7명
IBK기업은행	15명	권선주 은행장 외 14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2명	이민재 회장 외 여경협 회원사 81명
외 빈	4명	김상현 네이버 대표이사(강연) 김순진 21세기여성CEO연합회장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장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

## 5. 성과 및 시사점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 여성정책거버넌스 활성화는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및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여성 정책의 이슈를 폭넓게 교류한 것에 의의가 있음.
- 포럼을 통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및 한국과 베트남 간 여성정책 관계자들이 서로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
-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경험을 갖게 됨.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의 사업을 통하여 민관학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의 협력을 지속함.

- 국정 현안에의 여성통합 및 주요 여성정책 현안에 관련된 여성 NGO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모색함.
  - 여성전문인 협력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한국여성경제포럼을 개최함.
  -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여성정책사업의 범위 확대
- 지역 여성연구기관의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
- 여성정책의 발전 경험을 각 분야별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
  - 민·관·학을 대상으로 총 22개의 위탁과제를 수행함. 위탁과제는 여성을 위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 여성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 성폭력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독일 일·가족 양립정책과 한부모 가족, 주민자치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교육과정 매뉴얼 개발, 여

성을 위한 통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의 사업이 있음.

향후 다양한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 발굴, 육성의 필요성이 있음.



# VI

##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1. KWDI BRIEF

193

## 1. KWDI BRIEF

### 가. 사업배경 및 방법

☐ 사업배경

- 여성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및 확산을 통한 KWDI 위상 제고
- 정부 부처 현안 지원을 통한 KWDI 역할 강화

☐ 사업방법

- 문헌연구
- 시의성 있는 주제 발굴
- 현안 분석 및 조사결과 재구성 집필 및 발간
- 여성 정책 고객 1,500곳 배포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탑재

### 나. 사업내용 및 결과

☐ KWDI BRIEF 총 5회 발간

주제	주요 내용	발간 일자
2014 여성정책의 길, 국민에게 묻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 인지도</li> <li>-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li> <li>-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대한 중요도</li> <li>-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 과제별 추진계획 우선순위</li> </ul>	2014.3.12 (No. 27)
2014년 중앙행정기관별 대통령 업무계획 자료 중 여성·가족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중앙행정기관별 업무 계획 자료 중 여성관련 정책 현황</li> <li>- 여성·가족관련 공개 주요정책 동향</li> </ul>	2014.4.10 (No. 28)
정부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종합대책(2014.2) 국민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li> <li>-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의 기대효과</li> <li>- 생애주기 단계별 시급한 정책</li> <li>- 국민체감형 정책을 위한 필요사항</li> </ul>	2014.5.28 (No. 29)

주제	주요 내용	발간 일자
아시아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경험과 시사점	- 아시아·태평양 유엔 여성기구의 성인지예산 경험과 교훈 - 지역의 참여적 성인지 예산 실행 -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 실행	2014.10.1 5 (No. 30)
2014년 한국, 여성·가족 과연 안전한가?	-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국민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국민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국민안전관련 정책의 중요도 평가	2014.12.1 2 (No. 31)

## 다. 성과와 과제

여성정책 홍보 및 정보 확산

- ‘성인지예산제도 경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확산 등 홍보 채널의 역할 수행
- 여성문제 연구, 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기능

여성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및 확산을 통한 KWDI위상 제고

정부 부처 현안 관련 지원을 통한 KWDI 역할 강화

- 여성 관련 기관 및 관계자, 관련 부처에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및 최근 논의, 정보 제공을 통해 여성·가족정책의 인식 공유의 기회 확대 및 본원의 역할 강화

다양한 여성정책 및 제도 소개 및 심도 깊은 정책의제 개발 필요

# VII

## 총평 및 제언

- |                       |     |
|-----------------------|-----|
| 1. 2014년 사업 총평        | 197 |
| 2. 2015년 사업 운영을 위한 제언 | 205 |

## 1. 2014년 사업 총평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은 여성을 둘러싼 주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 특히 국정 현안의 추이에 따른 여성통합과 연계 등의 점검을 사업수행의 기본요건으로 함. 아울러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일반 국민을 비롯, 여성 NGO, 분야별 여성정책 관계자, 각계 여성인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임.

- 새정부의 4대 국정기조<sup>9)</sup>-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여성을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함.
  - 새정부가 제시한 140대 국정과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 가운데 여성 관련성이 명시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과제나 계획들을 정리하고 보면, 4대 국정기조 중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여성 관련의 국정과제나 추진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2013년에 이어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사업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위 표처럼 여성 관련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과제나 계획들 중에서도 여성과의 접점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점검하여,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과 같은 유관사업을 수행함.
  - 전체적으로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각 세부 사업들을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에 기준하여 정리한 <표 VII-1-1>에서 보듯이, 금년 전략사업은 새정부의 국정방향을 염두에 두고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기하는 새로운 시도와 연속사업의 경우 여성 협동적경제와 같은 심화 과정을 포함하여 기획·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9) 관계부처 합동(2013.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재인용.



〈표 VII-1-1〉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과 국정과제 연관성

세부사업명	국정과제	국정기조
▶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경제부흥
▶ 한국여성경제포럼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행복
▶ 여성정책현안조사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온, 오프라인)		
▶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126.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평화통일 기반구축
▶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한·베 여성포럼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견국 실현	

- 전략사업은 2014년으로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초기에 비해 사업범주마다 진일보한 사업내용과 새로운 사업기획으로 전략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 2011년 설계된 전략사업의 로드맵에 의하면, 2013-14년은 전략사업의 확산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세부사업들이 발굴되고 구체화되는 시기로 전망하였음.
  - 전략사업의 연차별 사업내용을 담은 <표 VII-1-2>에서 보듯이, 5대 사업 범주를 축으로 매년 각 범주별 세부사업의 내용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VII-1-2〉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주요 국정 현안 예의 여성 통합	1-1. 녹색성장국민의식 및 생활조사 1-2. 글로벌 녹색성장 국제심포지엄 1-3. 녹색생활실천 확산	1-1. 공정사회와 일·가정 양립 1-2. 여성대표성제고를 통한 국격 향상 1-3.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 확산 1-4. 나눔문화 확산과 여성참여 활성화	1-1. 지역사회 녹색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 사업 1-2.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 1-3.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고 방안	1-1.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1-2.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	1-1.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1-2.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확산
2. 정책 현안 지원 사업	2-1. 여성·고령친화 도시 컨설팅 2-2. 국정 현안 국민의식 조사	2-1. 여성·고령친화 도시 컨설팅 2-2. 정책현안 지원 ● 국격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 ● 여성·청소년·가족정책 효율화 및 연계기반 구축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문화 확산 2-3. 여성 저출산 극복TF	2-1.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2-2. 여성친화도시 포럼 2-3. 여성정책수요조사	2-1.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2-2. 여성친화도시 포럼 2-3. 여성현안 포럼 ●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이 만들어 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	2-1.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2-2.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2-3. 여성현안 포럼 ●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방안 ● 여성정치인육성 방안 2-4.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3. 여성 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3-1. 1기 생활체감 정책단 운영 기반 체계수립 및 운영 3-2. 현안조사 3-3. 국내외 여성 동향분석	3-1. 2기 생활체감 정책단 운영 3-2. 여성정책 현안조사 3-3.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분석	3-1. 3기 생활체감 정책단 운영 3-2. 여성정책 현안 전문가 조사 3-3. 미래여성정책포럼운영 3-4. 국내외 동향분석	3-1. 4기 생활체감 정책단 운영 3-2. 여성정책 현안 전문가 조사 3-3.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분석	3-1. 5기 생활체감 정책단 운영 3-2. 여성정책 현안조사 3-3. 국내외 여성 동향분석
4.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4-1. 개원기념 세미나 4-2. 이슈발굴포럼	4-1. 여성정책리더 연찬회 4-2. 여성전문인 포럼 4-3. 여성단체협력포럼 4-4. 정책현안 포럼	4-1. 정책현안포럼 4-2. 정책관계자포럼 4-3. 개원기념 세미나	4-1. 여성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한·베 여성 포럼) 4-2. 여성NGO 협력 (여성사학회 공동세미나/여성영화인 공동심포지엄/한국여성경제포럼) 4-3. KWDI 30주년 기념대회	4-1. 여성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한·베 여성 포럼) 4-2. 유관기관/여성NGO 협력(지역 여성 정책 유관기관/여성단체) 4-3. 여성전문인 협력 (한국여성경제 포럼)
5. 연구 사업 성과 확산	5-1. KWDI BRIEF 5-2. ISSUE BRIEF	5-1. KWDI BRIEF 5-2. ISSUE BRIEF	5-1. ISSUE BRIEF 5-2. KWDI BRIEF	5-1. KWDI BRIEF 5-2. KWDI 30년사	5-1. KWDI BRIEF



- 주요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법주의 경우, 당해 연도의 국정현안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잘 반영함.
  - 생활체감 여성정책의제 개발 사업법주에 있어 핵심 사업내용인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의 경우, 매년 사업방법에 부분적 변화를 도입해 가면서 소통의 정도와 깊이를 더해감으로써 여타 연구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원의 독특한 사업이자 전략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정책 현안 지원 사업의 경우, 국정 현안인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함.
  -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이 운영됨.
  -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하고자 총 3개 주제, 4차례의 모니터링을 실시함.
  - 여성 고용과 관련한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의 상황이 중요하므로, 15개 시도를 중심으로(1개 제외) 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을 활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경력단절’ 원인을 보다 다각도로 조망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 개선안을 도출함.
  - 올해 중요한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여성의 경력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국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정책 집행을 지원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는 데 기여함.
-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여성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범위를 국제적으로까지 지속적 확대를 도모하고, 그동안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합도가 떨어졌던 여성NGO들과도 협력하여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주민자치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여성발전의 국제적 경험 공유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및 한·베 여성포럼은 2차년도에 이르러 양국간 이해 및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IBK기업은행과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여성경제포럼’은 여성창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공론의 장을 정례화한 점 외에도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분야별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을 넓히고 여성경제활동에 관심있는 나라와 국제교류 장으로서도 역할 함.

- 또한 ‘여성친화도시 포럼’ 사업은 지역에서 2012년부터 자체 기획사업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호응도가 높아져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구사업 성과와 확산 사업범주의 경우는 일반 국민 대상의 관심 주제를 국민설문조사와 연계하여 발표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하여 쌍방향적 인식의 기회를 가짐.
- 전략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원내 연구주제인 ‘창조경제’, ‘여성의 경력유지 등’과의 연계를 가짐으로써 내용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한 점도 올해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한국여성경제포럼’의 경우, ‘한-베 여성 포럼’과 결합하여 정책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짐.
  -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나 특성화된 정책대상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온라인 토론의 기회 그리고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모니터링도 진행되어 정책집행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함.
  - 여성정책거버넌스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유관기관들에 사업제안을 하거나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연구사업과제의 수행은 전략사업을 매개로 한 원내외 연구사업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사업성취라 할 수 있음. 주민자치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개발,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그것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제 개발은 전략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

나임. 2014년에 수행된 각 세부사업의 결과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었음. 내용들을 <표 VII-1-3>으로 간추려 정리함.

〈표 VII-1-3〉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의 결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

세부사업명	제시된 의견
▶ 통일분야 여성의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남북한 이해의 심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관련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축</li> <li>- 북한연구 및 통일 여성 연구 확대 필요</li> <li>-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li> </ul> </li> </ul>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형 협동적경제 모델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필요</li> <li>▶ 여성 입장에서 협동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 제공</li> </ul>
▶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감정책단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주제 선정 요구</li> <li>▶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수시 토론 진행 필요</li> <li>▶ 기존 패널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및 지원 마련</li> </ul>
▶ 여성정책현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현안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자의 관심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적극적 환류 및 평가를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마련</li> <li>-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유연한 제도 필요성 및 시행</li> </ul> </li> </ul>
▶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국내외 여성동향 파악통로인 보도매체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 세밀한 여성관련 변화 및 정책 요구 발굴</li> <li>▶ 국외 자료의 경우 보도매체 대부분이 유엔 등 제3세계와 관련된 자료로 선진 여성정책 동향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체 확대 필요</li> <li>▶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관련 기사도 많으므로 분류 기준 다양화 필요</li> </ul>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의 지속성과 심화를 위해서 사업단, 컨설턴트,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완방법 필요</li> <li>▶ 여성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사업 컨설팅 및 개선 등 컨설팅 영역 확대 필요</li> </ul>
▶ 여성친화도시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적 예산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li> <li>▶ 지역 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성공사업과 참여사례를 계속적</li> </ul>

세부사업명	제시된 의견
	으로 발굴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여성현안 포럼	▶ 여성현안 포럼 개최 후 정책화를 높여나가야 함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수렴된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li> <li>▶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li> </ul>
▶ 서울지역 모니터링	▶ 서울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현재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온라인 모니터링	▶ 보다 다양한 현장의 문제, 어려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 2. 2015년 사업 운영을 위한 제언

여성·가족 정책 관계자와 국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낮은 정책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홍보를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된 사항으로,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발굴로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전략사업을 홍보 채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민 간 간격을 좁혀 나가는데 기여할 필요있음.
- 중·장기적 연속성사업 기획 적극화 필요
  - 전략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과 생활체감형 여성 정책과제 개발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책결정자, 사업담당자의 이동이 있더라도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적극 기획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을 위해 기획되는 사업들은 후속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한 사업들과 매년 국정현안에 따라 새롭게 기획되는 사업들이 함께 병행될 필요 있음.
- 여성친화정책 전략사업 결과의 정책화 통로 마련 필요
  - 전략사업의 각 세부사업을 통해 취합되는 의견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후 관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제안된 의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화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 여성친화도시 포럼, 여성현안 포럼, 여타 각종 포럼 운영 시에도 포럼 운영이 일회적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정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함.

2014년 사업결과에 기반한 2015년 사업운영 관련 제언

- 공동체 형성에 여성정책적 기여를 위해 북한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적 사회변화에 맞는 통일여성연구 및 실질적인 여성정책의제 개발 필요
- 여성친화적 협동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 개발
  - 단계별(씨앗기, 창업기, 정착기 등) 여성친화적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가이드 개발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의 질적 변화
  - 조성 단계별(초기, 성숙) 컨설팅단 운영 다각화
  - 여성친화도시 포럼의 전국적 확산 운영
- 정책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화 제고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모니터링 결과는 정책화로 연결되어야 함.
- 포럼 운영의 효과성 제고
  - 포럼과 포럼간 연계
  - 포럼 결과의 정책과정 기여도 제고
- 여성정책 성과의 국민적 인지도 제고와 수용성 강화
  - 생활체감정책단의 밀착적 운영
  - 여성현안 이슈 선정에 대한 원내외 정책관계자의 관심 제고
  - 다양한 여성정책 및 제도 소개, 심도 깊은 정책의제 개발 필요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4).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 고용노동부. (2014).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기획재정부. (2014). 「협동조합 업무지침」.
- 김 준. (2014).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859호. 국회 입법조사처.
- 김재민·김정희·조옥·서옥산. (2013). 『서울 여성협동조합 생태계 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김형미. (2013). “협동조합과 여성의 경제적 임파워먼트” <제1차 협동조합과 여성 포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해순(2014a). 「독일 일-가족 양립정책과 한부모 가족: 국가와 기업의 정책을 위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통일미래사회연구소.
- 김해순(2014b). 「한국 통일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사)한반도 개발협력연구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2014년 7월 8일.
- 박대호. (2013). “충북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3권 제1호.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공약자료집”.
- 송두범. (2011).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1권 제1호.
- 신현구. (2014). “중고령 저임금근로 현황과 특성”. 『노동리뷰』. 2014년 제3월호(통권 제108호). 한국노동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안전행정부. “2013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 청소년 통계”. 2014년 7월 10일.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관리자 비율 높을수록 기업 성과도 높아”. 2014년 8월 22일.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06년 이후 최고치”. 2014년 7월 29일.
- 여성가족부. (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여성친화정책전략단(2013). “여성대통령시대의 여성정책과제”.
- 영남일보 2014년 11월24일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與野 막론하고 적극 가세”.

- 오정진. (2007). “여성주의 경제의 비전과 대안의 경제활동”. 『여성학연구』. 제17권 제1호.  
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도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 발표회 개최”. 2014년 7월 25일.
- 유소영. (2014). “여성지방의원 의정실적 및 기초의원 성별에 따른 유권자(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보고”.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이성은·안선태. (2009).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여성친화성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장미혜 외. (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효안·송두범·김중수·박춘섭·안수영·홍은일. (2013). 『2013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 조선주·김영옥. (2008).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5권 제2호.
- 통계청 보도자료.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4년 6월 26일.
- 한국노총. (2014). “한국노총 모성보호·육아휴직 실태 분석 결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현대경제연구원. (2014). ‘여성 일자리의 업종별 적합도 분석과 시사점’. 『경제주평』. 14-22호.

#### <웹사이트>

[www.ilo.org/](http://www.ilo.org/)  
[www.ipsnews.net](http://www.ipsnews.net)  
[www.irinnews.org/](http://www.irinnews.org/)  
[www.un.org/news/](http://www.un.org/news/)  
[www.unaids.org](http://www.unaids.org)  
[www.unfpa.org/](http://www.unfpa.org/)  
[www.unwomen.org/](http://www.unwomen.org/)  
[www.womenlobby.org/](http://www.womenlobby.org/)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 생활체감정책단 공식 홈페이지 <http://viva.kwdi.re.kr>  
생활체감정책단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vivakwdi>  
생활체감정책단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vivakwdi>  
생활체감정책단 공식 오픈캐스트 <http://opencast.naver.com/KW383>

2014 사업보고서-1

## 2014년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 총괄보고서

---

2014년 12월 29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693-7 93330